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길은배(한국청소년개발원)
이종원(한국청소년개발원)
최원기(한국청소년개발원)

통 일 연 구 원

요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2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 서 론

그동안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협동연구는 현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1차년도에는 ‘남북한 화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2차년도에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3차년도에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남북한 통합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를 대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대 주제에 근거하여 협동연구에 참여한 각 기관의 고유 업무 및 특성을 고려한 세부주제를 다시 설정하여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협동연구 1차년도에 수행한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통일관련 의식 및 교류·협력관련 의식 실태에 기초하여 화해·협력단계에 적합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였다. 동시에 이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남북한 청소년층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연합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연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 연구 주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 적합한 제영역의 정책방안을 구안하는 것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를 그 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차원의 정책방안을 구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1-2차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와 결과는 3차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된 협동연구를 총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른 3차년도의 연구 목적은 완전한 1민족 1국가 1정부를 갖춘 성공적 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요구되는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는 것에 두었다.

II.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1.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범위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상황이다. 실질적 통합은 법·제도적 국가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의 전단계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협력을 공고화하고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와 국가통합 단계의 중간단계로 완충적, 과도기적 단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자면 남북연합 단계의 공고화 내지는 완성형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통일국가 단계의 진입은 남북간에 법·제도적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는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 국가통합 단계의 초기에 걸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때, 가치적·정서적 측면은 반드시 법·제도적 합의를 통한 이행으로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가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을 비롯한 많은 노력들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시작되어 이의 공고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남북 정상간에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성은 국가통합 단계의 전기부문을 통하여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는 사안에 따라 통일국가단계와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통합단계가 상정할 수 있는 과제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과제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모호성을 아울러 가질 것이다. 단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둘 때, 이 시기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며,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과 법·제도적 합의

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이의 합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노력들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2.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실질적 통합단계는 지역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공동의 삶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 이것은 남북한 양 지역의 구성원들이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갈등과 차별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가차원에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의 완전한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린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국가의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갖는 단계의 설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관건이 된다 하겠다.

동시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이의 성공 여부에 따라 통일국가로의 진입 시점과 이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지역 청소년의 교류·협력은 성공적인 완전한 1민족, 1국가, 1정부 ‘통일국가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그 범위와 내용이 민족공동체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온전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위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 상황에서는 그 주체가 국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진방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역할이 민간부문에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위치함에 따라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면적 형태로 추진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위상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그 범위, 내용, 참가자의 수 등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상과 관련한 것이다. 특히, 가치, 생활양식, 사회적 규범·관습 등에 대한 이해·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무제한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실질적 통합단계가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사회문화적 등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그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가 마련한 청소년 대상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사회내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비행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부의 개인적 정체성에 기인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현 시점보다 후퇴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탄력 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색깔 내기에 몰두하거나 개인적 정체성에 근거한 분화된 의식이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지역 청소년들은 그 피해자로 위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새로운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거대 담론에 가리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적 권리가 유보되는 극심한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마치 우리사회가 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국가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개인적 권리를 제한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위상을 논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변동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즉, 사회변동의 속도, 범위 등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Ⅲ.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실태 분석

1. 청소년 교류·협력 현황

2002년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되어온 남북 청소년 교류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류라기보다는 대학생 중심의 교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저 공식적인 허가에 의한 교류보다는 Fax나 기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교류의 경우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남북 청소년교류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류의 주체 또한 정부주도 보다는 종교나 대학, 기타 학술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중심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거시적이고 국가적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정책) 실태 및 문제점

가. 청소년 관련 법령

남북 청소년교류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 관계 법령과 제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제1차청소년기본계획,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1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제도화 또는 정책들은 단일화된 고유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남북 청소년교류의 현황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더불어 “제1차청소년기본계획” 역시 현재의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실질적 통합단계로 발전해나갈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차지할 남북 청소년교류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진행상황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1-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속에 제시된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련 정책과제들은 과거의 제정책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남북한 교류 관련 법·제도

남북교류와 관계된 대표적인 법제도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인적·물적 차원 전체를 포함한 남북교류 전반의 의미, 절차, 제한점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남북교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2001-2002년 통일부 주요 업무계획을 통한 통일부의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체육, 예술 등과 같은 문화적 교류의 영역에서조차 남북 청소년들의 순수성에 기반 한 교류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시사점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전망

①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②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남북 청소년교류가 증가할 것이다. ③ 남북 청소년교류의 성격이 점차 동등한 상호 이해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④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이 다양해질 것이며 질적, 양적 증가

가 수반될 것이다. ⑤ 결국,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향하게 될 방향성은 이들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와 안정화, 효과의 증대 등을 위한 지원자의 위치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제도의 정비 및 정책의 구성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방향성

① 남북 청소년교류를 주도해 나갈 정부부처간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을 정비하여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을 국제교류의 하위 영역이 아닌 단일한 고유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 ③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구성되어질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시행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남북 청소년교류와 남북교류의 여타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⑤ 실질적 통합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의미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경험적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 전반에 관한 지침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보다 간략하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⑦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부분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연계성을 강화 해야 한다. ⑧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

1. 동·서독 : 통독 이후의 사회적 과정 중심

통일이라는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된 구(舊) 동독 지역에서의 사회적 변혁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안전 보호막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는 곧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안정적인 직업교육과 직장배치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통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대단히 큰 변화를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많은 청소년문제를 만들어 냈다. 구(舊) 가치관의 실종, 더욱 더 심해지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몰락에 대한 공포, 미래전망의 실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은 통일 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생활의 실제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실망감을 분노와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하였다. 폭력의 대상은 그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던 자신보다 더 낮은 사회적 지위계급으로서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이나 망명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폭력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계속 교육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였다.

2. 중·대만

중·대만 청소년 교류·협력 중 교육 교류·협력이 가장 확대된 분야이다. 교육 교류·협력 중 유학부문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중국학생의 대만 유학 보다는 대만 학생의 중국체류와 유학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97년에 3,000~4,000명의 대만 고등학생들이 중국대학에 등록하였다. 대만당국이 공식적으로 많은 중국 대학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국대학 등록 대만 학생 수가 증가되는 데는 당시

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대만 대학입시가 치열함에 따라 입시에 실패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등록할 곳을 찾아야만 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륙에서의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1년에 대만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대륙의 교육기관에 정식 입학한 수는 1,078명에 달하였다. 이 중 600명은 초등학교 학생과 정학 당한 학생이거나 학업 중간에 대륙으로 간 학생들이었다. 고등교육 학생 수는 대학생(116명), 석사반 학생(190명)이며 박사반 학생은 172명에 달하였다. 대만 입법원 위원 몇 명도 대륙에 유학하고 있다.

특히, 중·대만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중국 대학 학위 인정 조치’, ‘대만 유학 대륙학생 장학금 지급’, ‘중·대만 대학원생 교환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청소년 교류 추진’, ‘대만 학생의 대륙유학 허용, 입학시험 면제와 장학금 지급’, ‘대만과의 直3通을 위한 청소년 교류활성화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3. 시사점

가. 통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통일 후 독일의 구 동독지역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방향성 상실을 최소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 후 북한 내에 신속한 청소년지도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후 북한지역 대학 내에 청소년지도학과 설치와 이를 통한 전문지도자 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중·대만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개방된 북

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개방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은 우선 남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상호 이해에 있다. 중·대만 의 경우 청소년 교류·협력이 가장 확대되어 왔다. 중국학생의 대만유학 보다는 대만 학생의 중국체류와 유학이 급격히 확대되어 온 점은 대만의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또한 중국과 대만당국이 청소년 교류에 대해 우호적인 판단이 작용한데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첫째, 한국학생들의 북한방문에 대한 요건, 즉 자격, 교류분야와 체류기간 등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대만간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이 주로 대만정부의 교육, 상호방문, 문화탐방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아래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북한청소년들의 남한교육이나 방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교육기관간의 학술교류는 상호 자매 학교를 결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상호 방문 및 단체 해외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정 수준의 남북한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청소년의식 실태 분석

1. 조사결과 요약

(1) 통일·교류 협력관

(가) 통일관

평소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7할을 상회하여(73.6%) 관심이 없다는 응답(26.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이 통일문제에 더 많은 관심

을 표명하였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25.6%,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55.4%로서 전체의 8할 이상(81.0%)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중에서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이 63.7%로서 다수였고, 북한 체제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을 예상하는 청소년이 31.2%였으며 전쟁을 통한 통일(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우발적인 전쟁)을 예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였다.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예상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83.6%)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나) 남북한 교류·협력관

현재 남북한간에 전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청소년(51.2%)과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48.8%)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 대학생보다는 고교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유일하게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2.2%),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이 4할대로서 그 다음이었으며(43.3%),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25.6%)과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22.9%)는 모두 2할대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앞으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75.0%),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16.8%)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8.2%)은 소수에 머물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

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확대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84.2%에 달하여,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10.4%),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5.4%)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 통합단계의 남북교류

(가) 북한 왕래의사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5가지의 예문을 제시하고 행동의사를 질문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가 88.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61.8%),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38.6%),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25.9%)였으며,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19.8%).

(나) 북한주민 접촉의사

청소년이 느끼는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측정하기 위해 Bogardus의 척도를 원용하여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3.9%에 달하였고,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은 89.9%였으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도 55.0%에 이르렀다.

북한주민을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중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북한주민(청소년)을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

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을 “결혼 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이 중·하위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북한주민이 93.6%로서 유일하게 9할을 넘었고, 이어서 “중국”(88.4%), “미국”(87.1%), “러시아”(86.6%), “일본”(83.6%)의 순이었다.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역시 북한이 89.9%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84.9%), “중국”(83.4%), “러시아”(81.9%), “일본”(80.8%)의 순이었다. “결혼 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북한이 55.0%로서 다른 4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으며, 이어서 “일본”(40.6%), “중국”(35.3%), “미국”(34.8%), “러시아”(30.3%)의 순이었다.

(다) 상호왕래·접촉의 영향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우리사회 부문(5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모든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향상될 것이다) 비율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의 발전수준”이 86.6%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들의 인권·시민권”(70.9%), “경제적 성장과 발전”(64.3%), “정치체제의 민주화”(56.4%), “국민들의 생활수준”(48.0%)의 순이었다.

(3)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가) 사회적 갈등·대립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에 대하여

“사고방식상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청소년이 91.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89.3%),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87.9%),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86.4%), “생활관습상의 차이”(83.5%)를 지적한 청소년이 8할을 상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54.9%), “종교·신앙관의 차이”(53.8%)를 지적한 청소년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현재 남한사회 내부의 지역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54.1%)한 반면,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19.1%).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보다는 중·상위집단 청소년들이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44.0%로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27.4%)보다 많았지만,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도 3할 수준으로서(28.5%)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한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갈등이 부모세대간의 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세대간의 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48.2%로서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35.6%)보다 많았다.

(나) 사회적 혼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5.7%에 달하여 남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하는 청소년(15.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일수록 북한주민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을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41.2%)과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40.9%)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대학생보다는 고교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부모세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72.3%)고 응답하였고,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21.2%)는 응답이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6.5%)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남한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 통합 이후의 사회체제

(가) 국가상징·체제문제

실질적 통합단계 이후 출현할 통일국가의 국기에 대해서는, “대극기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였고(53.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5.4%에 이른 반면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1.3%). 새로운 국기의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교급별로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된 국가의 국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0.4%),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38.5%)가 4할대였으며,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1.1%). 교급별로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하위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들일수록 새로운 국호의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통일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에 달하였고(50.3%),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도 4할을 상회(44.2%)한 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5.5%). 자본주의 체제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중·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 통일지향성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가 55.5%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4할 수준이 반면(42.4%),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2.1%). 교급별로는 대학생,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새로운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나) 청소년 정책과제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두 13가지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는데,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91.8%), “남북한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91.1%),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91.1%),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91.1%),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90.2%),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90.0%)의 6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9할 이상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통일국가의 국제적 위상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청

소년의 대다수가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응답(78.1%)한 반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은 1할 수준에 불과하였다(10.6%).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시사점

위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적·점진적 방식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부문에 비해 청소년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에 대하여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다. 자유왕래가 실현될 경우 북한지역에 거주하거나 북한주민을 배우자로 맞이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지역갈등이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주민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이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남한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곱째, 청소년들은 통합 이후의 국가상징·체제문제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VI.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제도를 매개로 그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열악한 부분은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으로 그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기초생활보장, 일탈행위의 예방 및 교정 등과 같은 역할은 국가의 절대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 실행주체는 부분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위임될 수 있겠으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업무조정 등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 하겠다. 셋째, 기존의 이질화된 요소를 중심으로 ‘같음’을 정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미래지향적 가치로 새로운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국가와 시민사회차원의 지원은 주로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 종료시점이 통일국가의 진입단계에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사회통합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소재는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가. 남북한 청소년 정책·기구·수련활동 통합

남북한 청소년 정책·기구·수련활동 통합을 위한 하위 정책방안으로

남북 청소년관련 정책 및 기구의 일원화, 남북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통합,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 및 수련활동 방안 마련,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마련, 남북 청소년 '전국 학습여행'(national study tour)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북한 전역에 (가칭)「청소년 정보문화센터」와 「인터넷 카페」 운영, 남북한 청소년 의회 설립, 북한 청소년을 위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나. 자립지원 및 진로(직업) 교육 기반 구축

자립지원 및 진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하위 정책방안으로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교육의 구조적·질적 발전 모색, 초·중등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해시키는 노력 강화,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 강화,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남북한 청소년 학습자 중심의 직업(진로)교육정책 마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제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소년문제·비행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제·비행 예방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교육 실시, 올바른 소비교육 실시, 주제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문화활동 육성, 북한 성인·청소년의 세대간 이해 프로그램 운영, 타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문제·비행 교정 프로그램으로 사법제도 정비, 청소년 약물중단 지원센터 설립·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교정·보호시설에 직업훈련센터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라.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 북한지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 구비, 「남북한청소년교류정보센터(가칭)」의 설치·운영,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재정비와 인력 및 시설 확대,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북한지역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제공, 북한지역 청소년복지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하위 정책방안으로 통합교육체계 형성과 통합교과서 채택, 남북한 청소년의 음식축제 개최, 각종 동호회 모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청소년 학교, 청소년 포럼의 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II.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7
1.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범위	7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7
나. 단계별 기본 철학과 원칙	10
다.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의의	12
2.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15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위상	18
III.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실태 분석	23
1. 청소년 교류·협력 현황	23
가. 현황(1990~2002)	23
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망	27
2.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정책) 실태 및 문제점	29
가. 청소년 관련 법령	29
나. 남북한 교류 관련 법·제도	34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시사점	39
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전망	39
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방향성	40
IV.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	44
1. 동·서독 : 통독 이후의 사회적응 과정 중심	44
가. 구 동독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구조 변화	45

나.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방향성 상실과 폭력성 증가	49
다. 사회적 대응과 청소년지도 사업	55
2. 중·대만	61
가. 중·대만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현황	61
나. 중·대만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	64
3. 시사점	69
가. 통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69
나. 중·대만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70
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청소년의식 실태 분석 ...	73
1. 조사의 개요	73
가. 조사의 목적	73
나. 조사의 내용	73
다. 조사의 방법	74
2. 조사의 결과	77
가. 통일·교류협력관	77
나. 통합단계의 남북교류	90
다.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99
라. 통합 이후의 국가·사회체제	108
3. 요약 및 논의	117
가. 조사결과 요약	117
나. 논의와 시사점	123
VI.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27
1.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	127
2.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30
가. 남북한 청소년정책·기구·수련활동 통합	130
나. 자립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기반 구축	134
다. 청소년문제·비행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140

라.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	145
마.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150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54
1. 결 론	154
2. 정책제언	157
참 고 문 헌	167
[부 록 1]	171
[부 록 2]	183

- 표 목 차 -

<표 II-1> 실질적 통합단계의 개념도	14
<표 IV-1> 학생들의 동반자 희망	46
<표 IV-2> 학생들의 주거 공간 희망	47
<표 V-1> 표본집단의 특성	75
<표 V-2> 사회계층 변인의 구성	76
<표 V-3> 통일지향성 변인 구성	77
<표 V-4>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78
<표 V-5>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변인별	78
<표 V-6> 통일의 당위성 인식	79
<표 V-7> 통일의 당위성 인식: 변인별	80
<표 V-8>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	80
<표 V-9>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 변인별	81
<표 V-10> 통일의 예상시기	82
<표 V-11> 통일의 예상시기: 변인별	82
<표 V-12>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	83
<표 V-13>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 변인별	84
<표 V-14>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평가	84
<표 V-15>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평가: 변인별	85
<표 V-16> 분야별 교류·협력 평가	86
<표 V-17> 청소년 교류·협력 평가: 변인별	87
<표 V-18> 교류·협력의 방향	87
<표 V-19> 교류·협력의 방향: 변인별	88
<표 V-20>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89
<표 V-21>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변인별	89
<표 V-22> 북한 왕래의사	90
<표 V-23> 북한지역 여행의사: 변인별	91
<표 V-24> 북한지역 취학의사: 변인별	91

<표 V-25> 북한지역 취업의사: 변인별	92
<표 V-26> 북한지역 일시거주 의사: 변인별	93
<표 V-27> 북한지역 정착의사: 변인별	94
<표 V-28> 북한주민 접촉의사	95
<표 V-29> 북한주민 접촉의사- 이웃으로: 변인별	95
<표 V-30> 북한주민 접촉의사- 친구로: 변인별	96
<표 V-31> 북한주민 접촉의사- 결혼상대로	97
<표 V-32> 북한주민 접촉의사: 주변국과의 비교	98
<표 V-33> 상호왕래-접촉의 영향	98
<표 V-34> 남북한 주민갈등의 요인	99
<표 V-35> 남북한 주민갈등- 지역갈등과의 비교	100
<표 V-36> 남북한 주민갈등- 지역갈등과의 비교: 변인별	101
<표 V-37> 남북한 주민갈등- 독일과의 비교	102
<표 V-38> 남북한 주민갈등- 독일과의 비교: 변인별	102
<표 V-39> 남북한 청소년 갈등- 부모세대와의 비교	103
<표 V-40> 남북한 청소년 갈등- 부모세대와의 비교: 변인별	104
<표 V-41> 남북한 주민 심리적 혼란 비교	105
<표 V-42> 남북한 주민 심리적 혼란 비교: 변인별	105
<표 V-43> 남북한 청소년 심리적 혼란- 부모세대와의 비교	106
<표 V-44> 남북한 청소년 심리적 혼란- 부모세대와의 비교: 변인별	107
<표 V-45> 갈등·혼란의 극복방안	107
<표 V-46> 갈등·혼란의 극복방안: 변인별	108
<표 V-47> 통합 이후의 국기	109
<표 V-48> 통합 이후의 국기: 변인별	109
<표 V-49> 통합 이후의 국호	110
<표 V-50> 통합 이후의 국호: 변인별	111
<표 V-51> 통합 이후의 경제체제	111
<표 V-52> 통합 이후의 경제체제: 변인별	112
<표 V-53> 통합 이후의 정치체제	113
<표 V-54> 통합 이후의 정치체제: 변인별	113

<표 V-55> 통합 이후의 청소년 정책과제	115
<표 V-56> 통합 이후 국가의 국제적 위상	116
<표 V-57> 통합 이후 국가의 국제적 위상: 변인별	116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정부가 공식적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공적 통일국가로의 진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걸쳐 남북한간 각 분야별 협력을 공고화하고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중간지점에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정 및 시기는 당시의 남북관계의 성격, 남북한의 이념·정치체제 면에서의 동질화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실질적 통합단계의 성과에 따라서 통일국가에 도달하는 과정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국가에 도달하는 물리적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통일과정 및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통일후 사회문화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라는 이분법적 어감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거나 불완전한 통일국가단계로의 진입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절차적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한 지역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공동의 삶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양 지역의 구성원들이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갈등과 차별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가차원에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의 완전한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린 과도기적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통일국가의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갖는 단계

2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의 설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관건이 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은 너무도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학교부적응 문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혼란, 주체적 삶의 방식과 관련된 정체성의 혼돈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을 통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날 때 유발될 수 있는 제문제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남의 기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방법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은 화해·협력 단계부터 통일국가 이후의 단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명제인 것이다. 문제는 교류·협력이라는 주제가 반드시 타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라는 상황 설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쌍방향적 대응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른 적실성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즉, 화해·협력단계나 남북연합단계 등과 같이 남북한간의 상황 설정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을 단계적, 제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청소년개발원은 협동연구 1차년도에 수행한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통일관련 의식 및 교류·협력관련 의식 실태에 기초하여 화해·협력단계에 적합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였다. 동시에 이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남북한 청소년층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연합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연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와 결과는 3차년도 연구과제인 「남

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완전한 1민족 1국가 1정부를 갖춘 성공적 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요구되는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요구되는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먼저, 실질적 통합과 관련된 개념의 문제와 이 단계에서 설정되는 북한 청소년의 위상 및 교류·협력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북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이행실적 및 법·제도적 실태와 그 문제점을 평가하고, 동·서독 통합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성 등과 같은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현재 중·대만이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의 제도화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 소재 대학생 600명, 고등학생(인문, 실업계 비율 8:2) 60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의 북한 사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방안을 구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필요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실질적 통합과 관련된 개념과 범위를 고찰하기 위하여 현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형성과정과 단계별 주요 내용,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완충적 단계로써 실질적 통합단계를 설정한 의의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갖게 되는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을 현 단계의 교류·협력과 차별화하여 규명하였으며, 실질

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위상을 사회변동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실태 분석

90년대 이후에 추진된 남북한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를 고찰하여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력이 미미하였음과 그에 따른 세부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청소년분야에서 추진된 교류·협력관련 정책적 노력들(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 연구

통독 이후 청소년분야에서 가장 쟁점화 된 것은 그동안 이질화되었던 양사회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수용과 적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방향성 상실 및 폭력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독일이 추진한 폭력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계속교육 등의 제노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대만은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대국에 대한 교과과정 개설과 인정, 학술·문화교류 활성화, 그리고 제한적인 인적 교류 승인 등과 같은 폭넓은 제도화 방안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청소년의식 실태 분석

우리사회의 통일과정을 주도할 청소년들이 앞으로 전개될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한 사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통일·

교류협력관”,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 교류관”, “실질적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통합 이후의 국가·사회체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마.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마련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남북한 청소년정책·기구·수련활동 통합’, ‘자립지원 및 진로(직업) 교육기반 구축’, ‘청소년 문제·비행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강구’, ‘새로운 청소년 복지정책 마련’,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이다. 그러나 분야별 방안은 반드시 그 종료시점이 실질적 통합단계에 한정되기보다는 통일국가 단계에서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추진된 남북한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및 법·제도적 실태(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등)와 그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집단의 선정은 성별(남/녀)·교급별(고등학교/대학교) 하위집단의 구성비율을 1:1로 설정하고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학급) 단위로 표본을 할당하는 유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40매로서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총 1,1

6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25매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의 교차분석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조사결과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확률은 $*=p<0.05$, $**=p<0.01$, $***=p<0.001$ 로 표기함).

다. 사례연구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대표할 수 있는 폭력과 과격성을 중심으로 그 발달과정과 양태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전략과, 현재 중·대만간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실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의견조사

실질적 통합단계에 적합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안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정책담당자 대상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본 장에서는 실질적 통합과 관련된 개념과 범위를 고찰하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갖게 되는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을 현 단계의 교류·협력과 차별화하여 규명하며, 그 단계에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위상을 사회변동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1.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범위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현재 우리정부가 공식적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이 완성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3단계 통일방안의 대두와 발전과정은 노태우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화해·협력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햇볕정책’을 천명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사안에 따라 활성화되는 정책적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3단계 통일방안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세가 1980년대 말에 구소련과 동구제국에서 진행되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동 지역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을 가져옴에 따라, 그간의 경제적 성과와 성공적인 88년의 올림픽 개최 등으로 자신감을 확고히 한 노태우 정부는 최초의 종합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발표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이 합의했던 통일 3원칙 중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로 대체한 점이다. 한편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방식으로 남북 양측에 이질적인 두 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민족의 공존 공영과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같이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 쌍방이 협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연합을 위한 기구들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최고결정기구, 집행기구, 대의기구, 하위의 실무기구 등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였다. 이같은 과도적 절차가 완성되어 원만히 기능하면, 대의기구에서 남북 양측이 제출한 통일헌법 초안들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되, 국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최종적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¹⁾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궁극적 통일정부의 체제성격을 명시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²⁾이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이 궁극적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제도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3단계 통일방안은 세 개의 단계적 절차를 둔다는 점에서 아·태재단의 ‘남북연합을 통한 3단계 통일방안’과 유사하나,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단계’ 이전에 ‘화해·협력단계’를 설정하고 ‘연방제단계’를 생략하여 남북연합단계에서 바로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곧바로 연합단계를 설정한 ‘3단계 통일방안’에 비하여 보다 더 기능주의적인 것으로 ‘선교류 후 통일주의’를 체계화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3단계 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이 제시했던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원칙으로 계승하고,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를 통일과정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 말기에 제정될 통일헌법에 의거하여 실현될 제3단계의 양태는 그간의 성과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정부의 기본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못박고 있다는 점

1) 박기덕, “남북한 정치적 통합모델의 모색”, 박기덕·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 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pp. 363~364 참조.

2) 이와 관련해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민족통일연구원, 1994. 11. 참조.

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김영삼 정부의 3단계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했던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첫째, 이 통일방안은 동반자적 민족 개념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질서 있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합의통일을 전제하고 있어 실제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간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민족적 결속력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민족을 초계급적 개념으로 보고 민족주의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계급문제를 은폐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셋째, 남북연합이 발족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남북한의 정상과 당국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남북정상이 모여 민족공동체 현장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만약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연합’의 구성은 물론 다른 통일정책도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넷째, 남북의회는 이론상 민족의 대의기관으로서 남북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기구로써 남북각료회의에 자문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는 남북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족 전체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남북의회는 민족의 부분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되어 남북분단이 지속되는 한 능동적인 통합성이나 합일 지향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다섯째, 북한의 개방화·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단일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통일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일방안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구조적, 내용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북연합단계에서 완전한 통일국가로 직접 이행하는

3) 유석열,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305~306 참조.

것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역시, 두 개의 제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완충적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남북연합 상태에서 충분한 상호 교호작용이 이루어지겠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체가 하나로 결합되는 데는 최소 기간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완충장치는 완전한 '1민족 1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로서의 의의를 충족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또 다른 중간 단계로서 '실질적 통합' 단계를 새롭게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추진과제를 구안하는 작업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단계별 기본 철학과 원칙

통일로 가는 단계는 먼저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협력단계'로 전환한 다음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주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해·협력단계

남북한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은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에서 공존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각종 「부속합의서」의 실천에 의해서 남북 화해·협력 관계가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이 공고화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점차로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 남북연합단계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례화되면서 제도화된 남북기구들의 탄생과 운영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남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해 나간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회 모임을 정례화시켜 남북간에 남아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남북연합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남북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등 정치와 제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휴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며, 남북군축 회담이 추진되고 경제 협력·교류도 활성화된다. 이 단계가 되면 남북관계는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진전되는 것이며, 냉전적 대결과 증오는 상당히 해소된다. 이 단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특히 요구되는 정신은 공존공영이라⁴⁾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단계는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 국가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분명히 연방과는 차이가 있다 하겠다.⁵⁾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민족정체성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통일국가 수립 및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비한 내적 기반을 조성

4) 공보처, 『통일로 가는 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해설』 (서울: 공보처), 1994년 11월.

5)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2002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 통일연구원, 2002. p. 30.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단계이다.

(3) 통일국가단계

남북의회대표들이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남북한 총선거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단계이다. 통일한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된 민족국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동체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노력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는 정치공동체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일국가 형성 이후 사회적 갈등이 도리어 심화되어 사회문화공동체 구성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국가 형성단계에서도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성은 정치공동체 구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통일국가 형성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다.

다.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의의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상황이다. 실질적 통합은 법·제도적 국가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의 전단계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협력을 공고화하고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정 및 시기는 당시의 남북관계의 성격, 남북한의 이념·정치체제 면에서의 동질화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성과에 따라서 통일국가에 도달하는 과정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국가에 도달하는 물리적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통일과정 및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통일후 사회문화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⁶⁾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와 국가통합 단계의 중간단계로 완충적, 과도기적 단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자면 남북연합 단계의 공고화 내지는 완성형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통일국가 단계의 진입은 남북간에 법·제도적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는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 국가통합 단계의 초기에 걸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때, 가치적·정서적 측면은 반드시 법·제도적 합의를 통한 이행으로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가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을 비롯한 많은 노력들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시작되어 이의 공고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남북 정상간에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성은 국가통합 단계의 전기부문을 통하여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는 사안에 따라 통일국가단계와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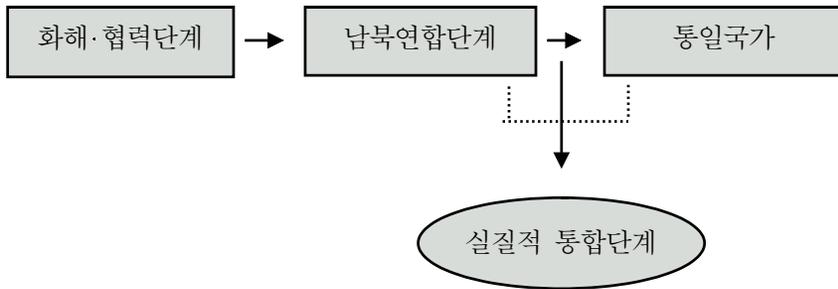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는 반드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그 경계선을 확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성공적 이행을 도와주는 완충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이 그 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하여, 사회문화공동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을 구획하는 작업이 매우 지난한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를 완충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법·제도의 합의 유무나 선언적 차원의 제강령 채택 등을 기점으로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상당부분 회색시킬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보완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리는 이분법적 어감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거나 불완전한 통일국가단계

6) 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 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2002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 통일연구원, 2002, pp. 15-16.

로의 진입을 일정기간 유예시켜 절차적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통합단계가 상정할 수 있는 과제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단계의 과제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모호성을 아울러 가질 것이다. 단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둘 때, 이 시기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하며,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과 법·제도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이의 합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노력들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표 II-1> 실질적 통합단계의 개념도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협력은 일정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은 상대방 사회문화체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상대방 사회문화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과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즉, 남북한 양 지역 구성원들간의 무제한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러한 인적 만남과 사회문화적 가치 등의 접촉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이다. 동서독의 사례를 본다면 당연히 사회문화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비행으로의 확대·전이를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정부나 시민사회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법·제도적으로 그러한 교류·협력을 정착하기 위한 조치들은 마련되어 있을 것이나, 제도와 정서적 측면의 동일시는 정치공동체와 사회문화적공동체가 갖는 의미만큼이나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또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가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주요한 사항으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북한 지역의 다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부분의 교류와 접촉은 제한된 부분에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류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추진방향은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주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2. 실질적 통합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실질적 통합단계는 지역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며,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공동의 삶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 이것은 남북한 양 지역의 구성원들이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갈등과 차별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가차원에서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의 완전한 통합을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린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을 비롯한 예멘의 통합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반드시 법·제도적 통합이 양 지역에 살고 있던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조금한 체제중심의 통합 노력들은 통합 이후에 더욱 심각한 사회통합적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완전한 통합의 시기를 무작정 늦추는 것만이 통합과정과 이후의 단계에서 야기될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국가의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갖는 단계의 설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관건이 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은 너무도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학교부적응 문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혼란, 주체적 삶의 방식과 관련된 정체성의 혼돈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을 통하여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날 때 유발될 수 있는 제문제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남의 기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와 방법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의 통합 이전 단계에서나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간접적 교류·협력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동서독의 사례와 현재 우리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제한적·비지속적 만남이 전제되어 있다. 오히려 교류·협력의 폭과 횟수와 관련된 문제로 양적 팽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을 관리, 융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역사적 만남에 더 의의를 갖는 다분히 정치적, 기념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추진되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은 어떤 측면에서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단계’를 벗어나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 위한 절차적 성격 또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이의 성공 여부에 따라 통일국가로의 진입 시점과 이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연합단계가 성공적인 통일국가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 구성원들의 이질적,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통일국가단계로 진입한

다 할지라도 남북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형성이 지체되거나 융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미비하다면, 법과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여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류·협력은 통일국가단계로의 성공적 진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지역 청소년의 교류·협력은 성공적인 완전한 1민족, 1국가, 1정부 ‘통일국가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 형성된 청소년층의 바람직한 통합 태도가, 그들이 향후 성인층으로 성장하여 통일국가단계에서 사회변동의 주체적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단기적 성과를 고려한 일회적 사업형태 보다는 일상적, 실천적, 체험적 성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이 막연하게 정의적·추상적 성격을 갖고 추진되는 관계로 청소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정반대의 추진전략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그 범위와 내용이 민족공동체 형성을 전제한 것으로 온전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위치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분히 분화되고 있는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에 또 하나의 변화적 기제가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향은 일정부분 기성세대나 그 사회가 유지·발전시켜 온 다양한 가치, 규범들을 습득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때, 남북한의 성인층을 중심으로 야기된 다양한 영역의 갈등이 청소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나, 특히, 청소년층은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적지만, 기성세대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답습하여 잠재적 지역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과되는 사회적·시민적 책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것이다.

동시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체 문제는 매우 주

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 상황에서는 그 주체가 국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진방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역할이 민간부문에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위치함에 따라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면적 형태로 추진될 것임이 예측 가능하다. 협의의 차원에서는 개인 대 개인이라는 다분히 사적 영역과 민간단체와 개인, 혹은 민간단체, 그리고 광의의 차원에서는 지역간에 위치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라는 공공적 성격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즉,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체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국가의 주체적 역량을 배제하거나 그 용도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제도적 마련과 관련 사업전개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과 같이 인프라 구축 부분은 온전히 국가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위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그 범위, 내용, 참가자의 수 등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진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상과 관련한 것이다. 특히, 가치, 생활양식, 사회적 규범·관습 등에 대한 이해·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무제한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실질적 통합단계가 남북한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사회문화적 등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그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가 마련한 청소년 대상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정책은 그 주요 대상인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으로서 온전한 사회적·시민적 권리를 보유한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상 또한, 과거 문제청소년 위주의 선도·보호 정책에서 일반 다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수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

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전환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의 사회적 현안 문제에 참여하는 역동적·능동적 존재로 등장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사회내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비행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부의 개인적 정체성에 기인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현 시점보다 후퇴한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 탄력 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통합 이후의 통독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아노미 현상의 경험으로 사회적 일탈행동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민주시민 재교육을 위한 보호·선도 정책의 대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청소년들 역시 부분적인 서구문화의 유입과 북한체제 내부의 경제난 가중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사회적 일탈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기초할 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 증가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남북연합단계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균형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가에 따라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색깔 내기에 몰두하거나 개인적 정체성에 근거한 분화된 의식이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지역 청소년들은 그 피해자로 위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내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청소년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질적 문화 실태와 경제적 차이에 기인한 계층 의식, 그리고 장애,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 등은 같은 사회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일 지라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같은 세대 내에서의 분할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소비·상업주의화 과정은 학교와 학교 밖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와의 구별짓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어른들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

다. 그 결과 세대간 단절은 심각하게 진전되어 부모-자식, 선생-학생 사이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때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이나 비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마치 현 단계에서 통일논의를 둘러싼 남남갈등 현상과 같이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거대 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양한 계층적, 지역적, 성별 요인 등을 중심으로 세대내 분할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반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이 가중될수록 그들의 행동양식은 공격적이거나 일탈적 행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현재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많은 청소년들과의 적응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할 때 그들만의 폐쇄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더욱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경향처럼,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집단화, 공고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새로운 '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거대 담론에 가리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적 권리가 유보되는 극심한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마치 우리사회가 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국가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개인적 권리를 제한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사회변동을 이끄는 주역이 당연히 그 당시의 성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청소년층의 역할은 상당부분 미약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 통합단계가 위치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변동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의 변동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 생활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실로 다양하다. 사회문화적 변화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인에게서보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하고 사회질서가 매우 안정된 사회에

서는 기성세대에 의한 문화전승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존 질서의 틀을 큰 변화 없이 계승해 나아가기도 한다. 그와 같은 사회의 문화는 '전통지향적'이며, 기성세대는 그들이 은퇴한 후에까지도 전통의 상징과 문화적 전승자로서 존중되고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내외적 원인에 의해 사회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전수 받은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가지고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그 것을 관리해야 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청소년층이 사회변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적 세력이라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새로운 문화적 정향이 내면화한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로 편입되어져 그들이 사회질서의 형성과 관리의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사회변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미래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주도해 갈 잠재적인 사회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진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내면화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사회질서의 관리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성인세대에 편입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로, 세대교체를 통한 사회질서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소년층을 미래의 사회질서를 담당할 잠재적 사회세력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이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그들의 새로운 가치지향과 생활양식 등과 같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형성을 통하여 기성세대로 하여금 사회변동의 방향을 감지케하고 기존질서와 기존유형의 변화와 개혁을 시행하게 하는 압력집단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층도 상당부분 사회변동의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사회문화 변동은 청소년의 생활문화에 긍정적인 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회문화 변동의 영향으로 청소년이 일탈행위에 빠져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예컨대, 현재 북한청소년들 사이에 배금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체제의 측에서 보면,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을 의미하는 일탈행위 그 자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학습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 오히려 이전의 통제가 정치권력 측의 일탈로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위상을 논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변동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즉, 사회변동의 속도, 범위 등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II.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실태 분석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남북한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실태를 고찰하여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력이 미미하였음과 그에 따른 세부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청소년분야에서 추진된 교류·협력관련 정책적 노력들(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청소년 교류·협력 현황

가. 현황(1990~2002)

2002년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되어온 남북 청소년 교류는 기존연구들⁷⁾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대치상황이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결정하였던 1990년대 이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변화, 국제적 동서이데올로기 갈등의 종식 등과 맞물려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와 특히 남북교류가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를 보아도 순수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남북교류의 사례는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남북 청소년교류의 중심 연령을 보아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류보다는 대학생 중심의 교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마저 공식적인 허가에 의한 교류보다는 Fax나 기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교류의 경우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남북 청소년교류의 울

7) 길은배, 『NGOs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함병수·길은배·이종원·최원기,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길은배·이종원·최원기,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바른 방향성 정립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류의 주체 또한 정부주도 보다는 종교나 대학, 기타 학술단체 등과 같은 민간단체 중심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거시적이고 국가적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산출시킨 대표적 원인으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청소년교류가 차지하는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 의미마저 남북한간 정치적인 이해관심에 의해 해석되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 주도 하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가 대폭 수정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청소년 중심의 남북교류는 여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90년도 초반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남북 청소년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1) 세계청소년축구 남북 단일팀 구성⁹⁾

남북한 정부는 1991년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청소년축구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서울-평양 평가전 및 기타 공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8강에 오르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남북 청소년교류에 있어 새로운 장이 구축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교류가 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 및 상호 이해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대학생 중심의 교류, 학생운동 영역에서의 비공식적 교류 등은 제외하기로 하며 비교적 순수한 의미에서의 청소년교류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사례들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고자 한다.

9) 『한국일보』, 1991. 5. 1.

(2) 동아시아 청년지도자 회의¹⁰⁾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청년지도자 회의”를 통해 김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과 백석 사로청국제부장이 비공식적 접촉을 갖고 남북한간 청소년교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는 비록 청소년들에 의한 직접적인 교류의 사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청소년 남북교류 영역이 공식적인 교류의 영역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및 평양소년예술단 서울공연¹¹⁾

1998년 리틀엔젤스는 평양에서 공식적인 공연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답방의 의미로 평양소년예술단원 102명이 2000년 5월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 교류는 체육교류 이외에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이며 본격적인 청소년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관계 개선의 형식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규모의 청소년들이 남북을 오가며 청소년교류의 본격적인 활성화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한마음 가꾸기 운동¹²⁾

2001년 11월 가이드포스트, 월간 새벗, 쿼터출판사, 월간 목회 등 기독교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남북 아동문화의 교류 활성화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아동문화를 개선해주기 위해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10) 『국민일보』, 1995. 10. 10.

11) 『문화일보』, 2000. 5. 29.

12) 『국민일보』, 2001. 11. 12.

아·태실무책임자들과 평양에서 협의하여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한마음 가꾸기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기구인 ‘플랜 인터내셔널’을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평양에 사무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 교류협약은 NGO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교류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탈북·남 청소년 ‘하나되기’ 배움터¹³⁾

2002년 1월 서울 봉천동 중앙대 부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36명을 한 자리에 모아 5일에 걸쳐 그동안 거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서로의 행동양식, 가치관, 언어, 규범, 음식문화 등에 대해 그 차이와 동질성을 확인하고 서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한 청소년 하나되기 배움터’가 시행되었다. 이 모임은 실질적 상황에서의 남북한 청소년교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방향성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6) 분단 후 첫 방북 고교생¹⁴⁾

2002년 3월 전국청소년적십자(RCY)단원 협의회 고등부 회장인 마산 제일고 2학년 임동환(17)은 5개월 동안 전국 RCY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모은 학용품 1만세트(1억원 상당)를 가지고 인천에서 남포까지 배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남북 청소년간의 우정을 나누고자 마련된 이 행사에서 임동환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되었으며, 더불어 이 경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남북 청소년교류의 사례가 되었다.

13) 『중앙일보』, 2002. 1. 22.

14) 『세계일보』, 2002. 3. 13.

(7) 재일 조선학생소년예술단 내한공연¹⁵⁾

2002년 9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청소년사랑회가 주체가 되어 조총련 소속 민족학교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방한하여 공연하였다. 이 경우는 북한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남북 분단의 중심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일 조총련 청소년들과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을 넘어 한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남북 청소년교류의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아직까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들 교류의 경향성을 살펴볼 때 일단의 변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추론 가능한 앞으로의 남북 청소년교류 전망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청소년교류가 진행되어지면서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참여와 교류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NGO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의 증가는 더욱 더 강화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남북 긴장완화가 진행되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관계 개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결국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단체의 참여 또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게 된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명확해진다. NGO들에 의한 교류는 정부주도의 남북 청소년교류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 색을 배제할 수 있어 교류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5) 『한겨레신문』, 2002. 9. 4.

둘째, 청소년들에 의한 직접적인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남북청소년교류는 기성세대가 주체가 되고 청소년들은 동반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 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성인들만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앞으로는 점차 청소년들 자신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남북 청소년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연령대 또한 다양한 청소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류야말로 남북관계에서의 사회·문화·정치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청소년교류의 올바른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 청소년교류의 목적이 북한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한 도움의 의미로부터 점차 상호 동등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류의 의미로 전이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교류가 북한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주어져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청소년들간의 실질적 상호 이해의 중요성이 물질 차원에서의 동질성 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질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남북 청소년교류의 확대가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와 같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동질성을 다시 찾고 구성해 나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청소년교류의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의 정도는 보다 양호한 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며 이는 질적, 양적 증가를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러한 부분은 그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더욱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동반되어질 경우 점차 남북 청소년교류는 일상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진행되어질 남북 청소년교류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류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볼 수 있는 교류 역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상호 이해의 본격적인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와 여타 관련 단체들의 역할은 주도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남북 교류를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토대를 적극 제공해주는 지원자의 의미로 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정책) 실태 및 문제점

가. 청소년 관련 법령

남북 청소년교류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 관계 법령과 제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을 지칭하고 있는 관련 법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87년에 구성된 “청소년육성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상징적 의미만 지닐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해 1991년 12월에 폐지되었고, 1991년 6월에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나타내주어야 할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이 구성되어졌다. “청소년기본법”은 이후 2002년까지 총 13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마련된 “청소년기본계획”은 2001년까지는 매 10년마다 새롭게 구성하도록 규정되었지만, 2001년도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매 5년마다 구성하도록 되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통칭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와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을 포괄하고 있는 “제1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와 관계된 제반 제도, 정책 등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며, 나아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실질적 남북통합 상태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1991년에 구성된 “청소년기본법”은 그동안 13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부분은 제 1장 총칙의 제 9 조(청소년교류의 진흥 등)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國家는 南·北 靑少年의 同質性 회복과 海外僑胞靑少年育成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론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은 동위치의 제 1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은 국제교류와 남북교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부분은 남북교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國際交流를 확대하기 위하여 外國 및 國際靑少年機構와 情報交換을 活性化하고, 상호 協力體制를 構築하는 등 靑少年의 國際交流振興에 노력하여야 한다.”

결국, 이 법은 청소년육성과 관계된 정책 전반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만 청소년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총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이는 청소년육성 부분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남북교류와 관계된 부분은 통일부 등 타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부처간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남북교류를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갈 주체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더욱이, 현재의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실질적 통합상태로 나아간다고 할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형태가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하며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해주고 이끌어 나갈 주도적 정부 부처가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남북 청소년 교류에 있어 방향성 부

재와 같은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청소년교류 부분을 단순히 외국 청소년교류의 아류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지양하여 이 부분을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단일 영역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제1차청소년기본계획

“제1차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편중된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수련활동의 제도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조정기능 등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⁶⁾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계획에서는 3가지의 기본방향과 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영역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 청소년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② 구체적인 정책영역

- 청소년활동 : 수련거리개발과 보급, 수련터전확충,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 육성, 활동동기 부여
- 청소년복지 : 청소년 사회환경의 개선, 어려운 청소년 지원
- 청소년교류 :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 고양,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 법제보강
- 재정확충

16) 함병수·이종원 외,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2000).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는 남북한 청소년교류의 부분을 국제교류의 하위영역으로 위치시키고 있는 등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이 독자적인 고유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제1차청소년기본계획”의 세부정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어진다.

①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

-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 청소년보호 및 선도
-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
-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②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의 주요 정책 내용들을 볼 때 남북 청소년 교류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청소년육성의 여타분야와 비교해볼 때 고유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교류의 한 영역으로 위치해 있을 뿐이며,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도 국제화 부분의 일부로 위치 지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두 차례에 걸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방안들 중 시행되어진 경우는 거의 살펴볼 수 없는 등 실질적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남북 청소년교류 주요 추진방안¹⁷⁾
- 남북 쌍방 청소년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한 단계적 접촉 시도
 - 쌍방이 개최하는 청소년 행사에 상호 초청
 - 청소년 단체 활동 공동 참여 및 단체간 자매결연
 - 남북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 어울놀이 개최
 - 통일 청소년 대행진
 - 청소년 학습 여행단 상호 방문 등의 행사 추진
 - 공동 탐사 사업 전개
 - 남북 청소년 만남의 광장 설치

결국, 이상을 종합해볼 때 “제1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제도화 또는 정책들은 단일화된 고유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남북 청소년교류의 현황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더불어 “제1차청소년기본계획” 역시 현재의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실질적 통합단계로 발전해나갈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차지할 남북 청소년교류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진행상황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17) 길은배·임순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나. 남북한 교류 관련 법·제도

남북교류와 관계된 대표적인 법제도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인적·물적 차원 전체를 포함한 남북교류 전반의 의미, 절차, 제한점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남북교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남북교류 또한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구체적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청소년의 위치와 연계하여 고찰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① 인적 교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북한주민 접촉승인 신청절차의 개선 : 승인제로부터 점차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며 나아가 신고제마저도 폐지해야 한다.
-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결과보고제의 개선 : 매회 보고제로부터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의 일괄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 방북신청서 처리기간 단축 및 수시방북증 반납의무 완화
- 재북가족에 대한 증여·송금 및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제 정비
- 승인 받지 않은 인적 교류협력에 대한 벌칙 완화

② 물적 교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북한산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
- 재한승인품목의 축소
-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물적 교류의 제도적 뒷받침
- 일정 규모 이하의 남북경협 신고제 도입
-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혜택
- 수송장비 운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18)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이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현재의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더욱 개선될 것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이보다 더욱 융통성 있고 개방적이며 간략하고 단순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 청소년교류라고 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 토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도 새롭게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산가족상봉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간의 자유로운 교류의 정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연계하여 구성한다면 실질적 남북 통합기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청소년교류는 일상적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 2001-2002년 통일부 주요 업무계획¹⁹⁾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에 기반 한 통일정책을 시행한 이후 특히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과 대규모의 여성 응원단이 방문하여 참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긍정적 결과 산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남북교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관점이나 정책 또는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통일부에 의해 실시된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http://www.unikorea.go.kr>.

① 2001년도 통일부 6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 : 상반기 개최 목표
 - : 남북간 협의 사항 사전 조율 및 국민합의 바탕 추진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본격 추진
 - :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통한 신뢰구축
 - :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 입장조율 및 정책공조유지
 - : 남북 주체, 미·중 지지의 4자회담 재개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본격 추진
 - :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운행
 - : 남북에너지 협력 추진
 - : 남북수송통신체계 개선 및 남북경협 기반 강화
 - : 남북 경제협력 거점 구축
 - : 분야별 경제협력 확대

-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근본적 해결 추진
 - : 광범위한 생사, 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실현
 - : 이산가족 상봉 기회 확대 및 제도화
 - :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적극 해결 추진

-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 : 체육교류 정례화 및 국제대회 남북 공동 참여 확대
 - : 학술, 문화, 관광, 종교, 언론교류 확대 추진

- 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공고화
 - : 국회, 정당과의 정책협의 확대,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책 반영
 - :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 홍보 강화
 - : 방송사의 통일프로그램 기획 및 우수 통일프로그램 시상
 - : 사이버통일교육 강화 및 사이버 통일이벤트 개최

② 2002년도 통일부 중점과제 추진계획

- 남북대화 체제 정상 가동
 - : 분야별 회담 지속
 - : 남북대화의 정례화·제도화

-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 이산가족교류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 : 경의선 연결·운행
 - : 동해선 연결

-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 :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 시행(기 조치)
 - :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추진

- 개성공단 건설
 - :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착수
 - : 안정적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 : 경협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로 활용
 - : 남북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 : 현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원

- 남북간 실질협력 여건 조성
 - : 대북지원 실시
 - :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 :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 : 임진강 수방사업 실시
-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 대북정책 추진역량 강화
 - :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
 - : 대북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통일부 추진 정책들 중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들에서와 동일하게 남북 청소년교류 부분은 대부분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들²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 남북교류는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호 이해를 위한 중요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적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일부의 정책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체육, 예술 등과 같은 문화적 교류의 영역에서조차 남북 청소년들의 순수성에 기반 한 교류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남북교류 관련 법제도의 문체점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 통합단계의 모색을 위해서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독자적 영역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 구성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정부주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 길은배·이종원·최원기, 앞의 책, 2001.

3.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중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전망

① 다양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북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교류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교류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효과나 효율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양체제간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민간 NGO 중심의 다양한 교류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②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남북 청소년교류가 증가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대표적 연령계층은 청소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계층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류가 확대되어지면서 그동안 가능하지 못했던 상호 심층적 이해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전개되어질 수 있다고 전망되어진다. 최근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진다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자발적인 청소년교류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남북 청소년교류의 성격이 점차 동등한 상호 이해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는 남한에 의한 북한에 대한 원조나 일방적 이해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청소년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상호 호혜적 관계가 보다 강화되어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남북한간 문화적 차이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남북교류와 더불어 청소년교류도 이러한 의미를 보다 강조하게 될 것이다.

④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이 다양해질 것이며 질적, 양적 증가가 수반될 것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청소년교류 또한 그 영역을 넓혀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류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인 부분에서의 증가와 양적인 차원에서의 증가 모두 급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⑤ 결국,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향하게 될 방향성은 이들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와 안정화, 효과의 증대 등을 위한 지원자의 위치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제도의 정비 및 정책의 구성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미비했던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부처간 합리적 조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간과가 실질적 통합단계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성 정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방향성

① 남북 청소년교류를 주도해 나갈 정부부처간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현재 남북청소년교류를 주도해나갈 정부부처의 위치가 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남북교류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의 경우 연령계층상 특징으로 인하여 문화관광부가

통일부와의 협의 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무부처가 확정되기 어려울 경우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체계가 실질적 남북 통합단계에서는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②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을 정비하여 남북 청소년교류의 영역을 국제교류의 하위 영역이 아닌 단일한 고유 영역으로 규정해야 한다.

청소년관계 법령들을 정비하여 남북 청소년교류를 청소년육성의 고유한 독립 영역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어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독립된 범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제시되어졌던 구체적인 남북 청소년교류 안들 중 시행된 경우가 매우 적었는데, 이를 실질적 통합단계에 맞게 수정하여 사전에 계획 가능하도록 대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안들을 구성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③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구성되어질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시행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부처간 원활한 업무 협조 체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 청소년교류를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주도의 의지강화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에 있어서도 실질적 통합단계로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형태를 보다 확장해나가도록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남북 청소년교류와 남북교류의 여타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들만의 교류를 통해 남북 청소년교류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타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들과 맥을 같이하여 종합적 구도 하에 진행되어질 때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 청소년교류는 질적·양적인 차원에서 그 효과와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실질적 통합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의미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경험적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남북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청소년교류가 지니게 될 역할, 의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 전반에 관한 지침을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보다 간략하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남북 청소년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들 중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 또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질적 남북 통합단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현실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일부 내용들을 여타 연구들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다 현실적인 차원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⑦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북 청소년교류의 부분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연계성을 강화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처럼 남북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청소년 남북교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남북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청소년 관계법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유한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⑧ 남북 청소년교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질 남북 청소년교류에 있어 활성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지원 규모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남북교류에 있어 재정적 지원처를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 남북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청소년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²¹⁾

4장에서는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대표할 수 있는 폭력과 과격성을 중심으로 한 그 발달과정과 양태,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전략을 알아보고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 시점에서 중·대만간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동·서독 : 통독 이후의 사회적응 과정 중심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된 베를린 장벽의 굳게 닫힌 문을 열면서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베를린 장벽의 개방 이후 양독(兩獨) 정부는 일년 여의 긴박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이라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룬다.

통일이라는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된 구(舊) 동독 지역에서의 사회적 변혁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안전 보호막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는 곧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안정적인 직업교육과 직장배치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게 하였다. 만약 어느 한사람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서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 보다 더욱 더 심한 사회적 고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인 경쟁사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아성취는 구 동독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과정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거의 모든 구체제는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체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독일의 통일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대단히 큰 변

21) 이 부분의 통독 사례는 경산대학교 김문섭 교수에게, 그리고 중·대만 사례는 통일연구원의 최춘흠 박사에게 원고 의뢰하여 정리하였음.

화를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많은 청소년문제를 만들어 냈다. 구(舊) 가치관의 실종, 더욱 더 심해지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몰락에 대한 공포, 미래전망의 실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은 통일 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생활의 실제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실망감을 분노와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하였다. 폭력의 대상은 그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던 자신보다 더 낮은 사회적 지위계급으로서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이나 망명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가. 구 동독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구조 변화

DD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민주 공화국의 약자; 동독)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는 지극히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유지 및 발전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다. DDR의 국가주의는 DDR적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조국애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였으며 역사교육은 무비판적인 DDR정체성을 학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²²⁾. 소위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무한히 희생시킬 수 있는 준비된 자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이 점은 자주 “미(美)제국주의(US-Imperialism)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계급사회”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었다. 사회주의적 도덕을 심어주기 위해 동독 정부는 FDJ(Freie Deutsche Jugend; 자유 독일 청년단)에게 군사적인 의식과 제복 착용을 지시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와 기술사회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DDR은 사회주의의 주적(主敵)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과 형제민족(Brudervolk)적인 끊어질 수 없는 우정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 공동체 회원국(Mitglied der sozialistischen Staatsgemeinschaft)과의 충실한 연대를 선전하였다.

22) W. Schubarth, *Historisches Bewusstsein und historische Bildung in der DDR zwischen Anspruch und Realitaet*, in Hennig, W.(Hrsg.) *Jugend in der DDR*. Weinheim, 1991, pp. 27-38.

구 동독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삶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다.²³⁾

- 1 ~ 3세까지(만) : 어린이집 (Kinderkrippe)
- 3 ~ 6세까지(만) : 유치원(Kindergarten)
- 6 ~ 16세까지(만) : 초·중·고2 까지. 동시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정칙적 청소년 결사체인 청소년 단체 Pionier(개척자) 또는 FDJ-단체회원으로 활동
- 16 ~ 18세까지(만) : 직업교육 또는 상급 교육기관
- 만 18세부터 : 직업이나 대학 시작

베를린 장벽 개방 직후 실시된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은 그들이 당시에 이미 그들의 거주상태와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수까지도 대단히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구 동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상대자나 동반자(Partnerbeziehung)를 선택하는 것이 서독에 비해 일찍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설문조사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수용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5년 후의 즉, 20세 정도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예상하여 보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이미 확고한 이성과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표 IV-1> 학생들의 동반자 희망

	지방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남(%)	여(%)	남(%)	여(%)	남(%)	여(%)
남자친구/여자친구	38	50	40	44	61	63
결혼	51	40	43	44	22	18
독신(미결정)	8	9	17	12	13	18

23) L. Steiner, *Strukturwandel der Jugendphase in Ostdeutschland in Buechner*, P(Hrsg.) Jugend in der DDR. Weinheim, 1991, p. 28.

24) Steiner, 앞의 글, pp. 21~32.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방도시나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이른 결혼(배우자 또는 동거관계인 동반자)이 예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특징적 결과로 결혼이라는 항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결혼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관계에 대한 예상은 주거방법(집)에 대한 예상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년 후에는 자신의 주거공간(Wohnung)²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약 10%). 단지 응답자의 4분의 1정도만이 아직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대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청소년들이 가능하면 빨리 자신의 삶을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으며 대도시로 갈수록 독립된 삶을 빨리 꾸리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표 IV-2> 학생들의 주거 공간 희망

	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자신의 아파트(월세)	39	48	63
자신 소유 주택	23	15	7
부모와 형제	28	29	19
남자, 여자 배우자와 함께	7	8	11

미래의 자녀기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를 막론하고 응답자의 4분의 1은 1명, 그리고 약 절반정도는 2명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차이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연계된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은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 동독 지역에서 조사된 청소년들의 거의

25) 주로 월세이며 국민주택형태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삶을 꾸려나간다. 진학이나 직업선택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차지한다.

모든 부모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모가 완전한 직업교육²⁶⁾을 이수한 상태였다. 통일전 한 예로 여성중 노동 가능 연령대의 92%의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고등학교 고학년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스스로가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직업 선택에서 부모들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 후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모들의 실업으로 인해 변하였다. 1990년 10월 기준 구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6.1%이며 여기에 거의 실업상태로 볼 수 있는 단기 노동자(Kurzarbeiter)는 1,767,034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의 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⁸⁾ 한 예를 들면 이 당시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부모 중 이미 10%의 부친과 13%의 모친이 실업자로 나타났다.²⁹⁾ 이것은 바로 청소년들에게는 물질적 환경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자율적인 결정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위의 실태조사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26) 직업교육이란 독일의 특징적인 직업준비와 교육이 병행하는 교육제도이다. 모든 직업은 직업교육과정을 거친 후 이와 연관된 직업을 구할 수가 있고, 쉽게 직업의 전환이 어려우며 직업을 바꿀 때는 또 다시 직업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가 있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는 직업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의 3종류가 있다. 하우스프트슐레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학교에 다닌다. 직업학교는 주당 1일의 정시제(定時制)로 되어 있어 다른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 18세까지 재학할 의무가 있다. 실업학교는 1~3년제의 전일제(全日制) 학교로 상업·공업·농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로서 전문학교가 있으며, 우수한 자는 전문학교 졸업 후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나지움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코스를 '제2의 진로'라고 한다. 전문학교 위에는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실과학교 또는 전문학교를 마치고 2년 이상의 실지경험이 있는 자를 입학시킨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27) Steiner, 위의 글, p. 24.

28) 단기 노동자를 뺀 실업자는 1990년 1/4분기에 1만 3000명에서 그해 말에 약 55만 명, 1991년 말에 약 1백만 명, 1992년 말에 약 1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통독 당시 6.1%, 1991년 10월 11.9% 그리고 1992년 초에는 17%로 늘어났다. 송광성,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남-북한 청소년의 삶과 미래』,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심포지움, 1994, pp. 151~152.

29) Steiner, 위의 글, p. 24.

먼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던 구 동독 청소년들의 삶의 행로는 통일이라는 사건을 통해 파괴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구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 통일은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삶의 상황과 삶의 진행 모델에 있어서 깊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청소년들의 삶의 계획을 송두리째 뽑아 버렸으며 새로운 삶의 상황이 요구하고 유도하는 데로 삶의 계획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구 동독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동독시절 국가의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 즉, 사회적 안전, 직업, 교육, 생활, 조직 등에서의 국가적 보장은 하루 아침에 붕괴되었으며 개인은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수 십 년간 전통화 되어오던 행동양식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며, 지금까지의 미풍양속인 집단주의적 가치는 소멸되어 버렸다.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사회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당시의 불안전성은 돌이켜 보면 이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의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의 실종과 연결된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새로운 삶의 지식을 찾기 위한 격렬한 경쟁과 불안정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가상의 해결책 즉, 폭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폭력은 당시 동독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급박한 문제로 인한 무능력감(Ohnmachtsgefuehl)의 표출이며 ‘상처 입은 모습’을 외부로 나타내어 사회적 지원을 원하는 심리적 표현이기도 하였다.

나.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방향성 상실과 폭력성 증가

여기서는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 나타난 청소년의 과격성과 폭력성의 실태를 당시의 연구 보고서와 대중매체를 통해 분석하였다.

(1) Schell의 구 동독지역 청소년 실태조사

1992년도에 발행된 Schell연구³⁰⁾에 따르면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변화는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구 동독지역 청소년은 구 서독 지역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결핍상황(Mangelsituation)에 처해있다. 특징적인 결핍상태는 다음과 같다. 특정한 연령대 즉, 13~14세 사이에서는 서독 청소년에 비해 확실히 적은 용돈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며 또한 적은 여가시간을 가지며 이는 더욱 더 개인적으로 친구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구 동독 청소년들은 구 서독 청소년에 비해 더욱 더 강한 가족내 긴장을 경험한다. 구 동독 지역 청소년은 구 서독지역 청소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용돈을 받고 있다. 구 서독 청소년들은 부모나 후에 배우자에 의해 재정지원을 강하게 지원 받는 반면에 구 동독지역 청소년은 부모로부터는 거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단지 구 사회주의 시절부터 존재하던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인 사회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런 상황은 청소년들이 더욱 더 사회에 종속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구 동독지역 청소년사이에는 구 서독 청소년에 비해 훨씬 강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12~14세부터 이런 상황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구 서독 청소년은 이시기에 있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해마다 더욱 더 명확해지며 가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해마다 더

30) Schell-Studie: 다국적 석유기업 Schell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어 전국단위의 대규모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독일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2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 동서독 연구인력 50여 명이 참가했다. 독일 청소년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있다.

31) 1992. 11. 4일자 Frankfurter Rundschau일간지에 따르면 17~20세 사이의 구 서독 청소년들은 44%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 동독청소년들은 겨우 14%가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동독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광범위하게 국가적 지원에 의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21~24세의 35%, 25~29세의 20%정도는 실업자수당이나 장학금(대학생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 나이의 서독의 상황은 겨우 7또는 6%정도이다.

욱 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구 동독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그들은 청소년 시절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인 “Junge Pionier”이나 “FDJ” 등의 국가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으나 통일과 더불어 이러한 여가 프로그램은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통일 후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 통일은 처음 구 동독 청소년에게 강한 꿈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으나 점차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통일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꿈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경험을 하게된다. 그들의 처참하게 깨어진 꿈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패배주의를 만들어 내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회의 2등 국민으로 느끼게 한다. 그들은 깨어진 자긍심을 어느 정도라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들이 찾는 것은 그 사회에 공존하는 제3의 계급이다. 제3의 계급은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던 제3세계 출신의(예; 베트남, 모잠비크 등)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나 망명자들이다. 제3의 계급은 청소년들의 분노와 폭력성의 희생양이 되며 그들은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아정체감, 자아안정감 그리고 자긍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외국인이나 망명신청자들이라는 희생양³²⁾을 찾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폭력성을 노인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집단을 향해 나타냈을 것이다.

(2) 대중매체에 나타난 청소년의 폭력성: 극우주의를 중심으로

<Berlinerzeitung(베를린 신문)>

당시 통일된 독일 청소년 사이에서 발달되고 있는 폭력적 성향은 제 실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IB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청소년 16세에서 24세까지의 약 1%(약 50,000여명)정도는 외국인이

32) 희생양 논리는 이렇다. “나에게 닥친 불공평, 부당함을 겪게되면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울만한 사람을 찾게된다. 그는 나보다 약한 존재가 된다. 그가 누구인가는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우연한 존재가 된다”.

나 망명 신청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쾰른(Koeln)의 경험 심리학 연구소(Institut fuer empirische Psychologie)는 2,000여명의 구 동·서독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가 독일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정을 갖거나 최소한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13%정도는 나치독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였다. 15%정도는 외국인을 미워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설문자의 약 절반 정도는 독일 내 외국인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Sueddeutsche Zeitung(남부독일 신문)>

학생들에 관한 라이프치히 연구

청소년들이 극우화 되고 있다. 54%가 외국인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반 유대인 주의자들이다. 구 동독의 3분의 1 실업계 학생과 4분의 1 일반학생은 독일인은 순수하게 그 혈통을 유지해야 하며 타민족과 섞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 6%의 인문계 학생, 11%의 실업계 학생은 국가사회주의 정당³⁴⁾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극우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라이프치히 연구는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역사적으로 항상 위대했다라고 믿는 청소년의 비율이 1990년 12월부터 1992년 6월 사이 17%에서 21%로 증가했으며 실업계 학생사이에서는 20%에서 34%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대(大) 독일국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항목에서도 14세~18세까지는 35%, 19세~25세 사이의 청소년에서는 15%가 현 독일 영토를 벗어난 옛 독일 영토, 즉 프로이센 제국시의 현재 러시아의 일부까지의 영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사고는 실업계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43%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보면 특히,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행위를 구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28%의 실업

33) Berlinerzeitung vom, 30. 9. 1992, 베를린 신문.

34) Nationalsozialistische Partei : 히틀러의 나치주의 사상을 갖는 정당.

계, 30%의 일반학생들이 경찰 또는 자신과 사고를 달리하는 청소년들과 주먹다짐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유대주의적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유대인은 독일인의 불행이라고 답한 실업계 학생은 통일 직후 7%에서 2년 후 24%로 증가한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은 29%까지 답하고 있다. 33%의 실업계 남자, 18%의 일반학교 남자 청소년은 유대인을 거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나치 시절(NS Zeit)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는 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말 13%의 일반학생, 20%의 실업계 학생들이 나치적의 국가 사회주의가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던 것이 2년 후 이 연구가 행해지던 때에는 20%와 40%로 증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54%의 응답자는 외국인에 대해 거부적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Tageszeitung(매일신문)>

브란덴 부르크 지역 청소년 중 절반 정도는 외국인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란덴 부르크 주(州) 청소년부 장관 비틀러(Marina Birthler)의 설문조사(1,644명 대상)에 따르면 부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청소년의 54%가 독일은 장래 외국인들로 넘쳐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2%의 청소년들은 독일 땅에는 독일 민족만 살아야 되며 외국인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70%는 외국인은 쫓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포츠담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의 청소년은 극우주의 청소년 집단과 폭력집단 청소년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고 있다.³⁶⁾

(3) 방향성 상실의 표현으로서의 폭력

대중매체와 연구보고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청소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극우적 경향이 계산된 정치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된다. 여기에는 동독의 변환 즉 서독으로의 편입 통일

35) Sueddeutsche Zeitung vom 09. 07. 1992, 남부독일 신문.

36) TAZ vom 25. 06. 1992, 매일신문.

후 새로운 세계에서 방향성 상실(Orientierungslosigkeit)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이런 극우화와 과격적인 경향은 소위 삶과 생활의 정상화(Normalitaet)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시기는 그 발달 심리적 특성상 동요(Labil)하기 쉬우며 우울해지기 쉽다. 통일이라는 급격한 사회적 붕괴현상도 그들에게 위의 것과 더불어 부담스러운 것이며 위기감을 주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적, 개인적 부담, 긴장감의 누적과 축적이 과격성(Aggression), 급진주의적 경향(Extremismus) 그리고 폭력적 표현으로 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형태의 표출 원인은 청소년과 사회적 부조화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구제도와 구조는 파괴되고, 구 가치와 규범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그의 안정감(Sicherheit)과 방향성(Orientierung)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³⁷⁾ 결국 구 동독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히 증가되는 외국인 적대감과 폭력행위는 정치적인 동기에서보다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정체성 혼란과 방향성 상실이라는 두 가지 명제로 대신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 동독 청소년들은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과 그들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제반 사회 환경적,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독일정부의 신속한 대처방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 과격과 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동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7) A. Merkael, *Herausforderung der Jugendpolitik in Gewalt Chancen und Grenzen der Jugendarbeit*. AGAG, 1993, p. 79.

다. 사회적 대응과 청소년지도 사업

(1) 폭력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AgAG)

통일 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과격성과 폭력성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으며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구 동독지역 전체 5개 주에서 “과격성과 폭력에 대한 실천프로그램”(Das Aktionsprogra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 AgAG)이 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rauen und Jugend : BMFJ)에 의해 만들어졌다.

구 동독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과격성과 폭력은 1991년 5월부터 이미 여성청소년부(BMFJ)에 의해 해결 방안을 찾게 하는 관심의 초점이였다. 이 실천 프로그램은 1992년 1월 1일부터 우선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 5개 주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폭력대응을 목적으로 모델 프로그램 형태의 사회교육적 실천에 그 초점을 두었다. 동시에 이 모델 프로그램은 구 동독지역 5개 주에서 청소년지원체계(Jugendhilfestruktur)를 구축하는데 있어 자극과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가졌다. 실천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중심지역은 1991년 각 주 청소년청(Jugendamt), 구 동독 5개 주의 내무부, 지방경찰청 등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장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5개 주의 지역과 동베를린 등의 30개 지역이 확정되었다.

전체 프로그램 하에서 1992년 진행된 사업은 총 140여 개 이었다. 여기에는 베를린주 4, Brandenburg주 13, Mecklenburgvorpommern주 67, Sachsen주 18, Sachsen.Anhalt주 15, Thueringen주 23 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Mecklenburg-vorpommern주는 청소년 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의 Rostock시는 예를 들면, 당시 구 동독지역 청소년 폭력과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화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 사업 중 65%는 민간 청소년기관(Freie Traeger), 35%는 공공 청소년기관(Oeffentliche Traeger)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대도시 55%, 중소도시 38% 그리고 지방소도시나 농촌지역은 3%로 나뉘어진다. 이 사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당시 청소년문제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에 투입된 청소년지도자는 총 437명 이었으며 이중 147명은 AgAG를 통해 직접 급여가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290명은 ABM(Arbeitbeschaffungsmassnahme; 노동창출프로그램: 노동부에 의해 실시된 실업자 구직 프로그램), Honorer(보수형태의 임금)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급여를 지원 받았다.

재정은 1992년 한해 동안 중앙정부 BMFJ로부터 16.9 Mio(1,690만 DM; 약 90억)가 지원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한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

AgAG의 전체적 목표는 폭력을 행하거나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그들 생활 주변에서 지원하고 그들에게 여가공간과 각종체험세계를 제공함으로써 이 속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자신을 재확인 및 재발견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능력과 가능성을 찾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광범위하게 제공되어 졌다.

이 프로그램들의 세부 실천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청소년사업-Aufsuchende Ansaetze(47), 상담사업-Beratungsprojekte(66), 청소년과 공동생활-Betreutes Wohnen(13), 또래-집단사업-Cliquen-/Gruppenarbeit(33), 체험교육-Erlebnispädagogik(51), 팬 동호회-Fanarbeit(3), 여가교육-Freizeitpädagogik(57), 정보·문화 사업-Info-Kulturarit(58), 청소년클럽-Jugendclub(53), 여자청소년사업-Maedchenarbeit(7), 미디어교육-Medienpädagogik(22), 비행청소년재사회화 훈련-Soziale Trainingskurs(5), 자전거, 오토바이 등 조립 및 수리-Werkstattarbeit(24)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상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소단위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계속 교육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참가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높은 전문성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높았다. 모든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지도가 아닌 각기 다양한 직업적 경험을 뒤로하고 있었기에 계속교육(Fortbildung)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당시 구 동독 시절에는 구 서독과 비교할 만한 대학 등에서의 사회사업이나 사회교육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는 서독과 비교할만한 직업전환 교육이나 직무연수를 위한 교육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AgAG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 직무교육을 위해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정보, 계속교육, 연구서비스센터”(Der Informations-, Fortbildungs-und Forschungsdienst Jugendgewaltpraevention;IFFJ)가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IFFJ는 1992년 5월에 설립되어 구 동독 지역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AgAG) 지도자의 계속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그들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직무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Street-work, 급진극우주의 청소년, 스킨헤드사업, 비디오나 그래피티 등의 문화사업, 체험교육, 스포츠 교육, 청소년과 공동생활, 다문화 학습, 폭력과의 대면법 등의 다양한 세미나 제공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들이 실무내용적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IFFJ의 청소년지도자 교육내용

계속교육에는 우선 청소년지도에 대한 기초세미나와 종합적인 여가교육, 방법론, 사회사업실천론과 접근법 등이 고려되었다.

(가) 기초세미나

○ 극우주의(Rechtsextremismus) : 여기서는 극우주의자들의 조직, 이데올로기, 회원모집 방법, 홍보, 청소년집단에 대한 영향, 법적 상황 등의 기초적 지식이 주요테마를 이루며 계속해서 과거의 극우주의 현황과 이에 대처했던 특수한 방법과 사업모델들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다.

○ 폭력과의 대응(Umgang mit Gewalt) : 폭력상황을 조기에 깨닫고 적절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전달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폭력발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 개인적 공포, 실천적 시도, 폭력 외해전략의 실습 등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 거리사회사업(Strassensozialarbeit) : 청소년이 주로 잘 모이는 공간이나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직접 청소년지도자가 개입해서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지지, 집단사업 등을 펼치는 방법과 이에 적절한 자질함양 교육을 행한다.

○ 프로젝트 실천방법(Projekt management) :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관련 프로젝트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관리,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개발, 집단 청소년 사업, 또는 여론이나 사회의 기대에 대한 접근방법 등이 교육된다. 여기에 더하여 재정, 프로젝트 구성, 목표설정, 계획, 연계망설정, 행동전략, 홍보전략 등이 주테마를 이룬다.

(나) 여가교육과 방법론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사업이나 그래피티, 음악활동프로그램 등의 지도 방법이 학습된다. 또한 체험교육, 모험 교육 등과 폭력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과의 관계 등이 토론된다. 이런 접근은 긴장완화, 드라마틱, 호연지기의 경험, 육체성, 그리고 모험성의 육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사회사업 실천과 접근법

청소년과 공동생활, 범죄청소년과 피해청소년에 대한 제반 지지제공 등

전문적 청소년지도 사업과 이의 심화과정을 주요테마로 선정하여 학습토록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워크샵이 수시로 열려 현장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케이스화 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4) IFFJ의 세미나 진행구조

모든 청소년지도자 교육 세미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식의 전달에 있다. 이에 적합한 경험을 축적한 발표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한 세미나당 2, 3명의 교수요원이 이끌어간다. 세미나당 진행시간은 2~3일 정도 걸리며 최고 25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프로그램이 다수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15~20명 정도의 청소년 지도자가 참여하게 된다.

초창기 IFFJ 교육 주요참가자는 AgA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주를 이룬다. 점차 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자 1992년 가을부터는 청소년 복지, 청소년지도의 타영역에 종사하거나 학교교사들도 참여한다. 주로 이때부터는 교육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초대되어 자신들의 실전경험과 전략 등을 교환하게 되는 수준으로 세미나가 발전되어 진행되어진다.

(5) AgAG 참여 청소년지도자의 학위취득과 전문 사회사업 자격부여

AgAG 프로그램 시작부터 참여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대학학위 취득 욕구가 강하게 존재했으며, 이는 당시 책임장관이었던 여성청소년부 장관인 Merkel에 의해 구 동독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사회사업과나 사회교육과가 설치되어 직장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현재 Dresden의 기독교전문대학과 공과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Merseburg와 Magdeburg의 대학에도 관련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런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기관의 설치는 구 동독시절 사회사업이나 청소년지도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던 청소년지도자들의 직무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그들의 학위취득으로 인해 이에 합당한 경제적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구 동독지역에서의 청소년 사업과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³⁸⁾

독일의 통일은 구 동독의 구 서독으로의 편입이라는 소위 흡수통일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구 동독의 기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직업 등의 모든 면에서 변혁적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직업보장, 사회안전망, 진로교육의 붕괴는 구 동독 주민에게는 모든 삶을 자본주의적 사회로의 전환과 동시에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주었다. 이는 당시 구 동독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던 과제였으며, 그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발달심리적 상황과 더불어 심한 동요의 모습을 보인다.

전통적인 가치관 실종, 사회몰락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미래 전망 실종, 방향성 상실 등은 당시 구 동독지역 청소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과격성과 폭력행사라는 수단으로 표출되며 이는 급박한 사회적 문제로 발달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의 과격성과 과격성의 폭발적 증가는 급기야 이에 대한 정부의 구 동독지역 청소년 정책 수립으로 연계되어진다. 1992년 초부터 “과격성과 폭력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구 동독 5개 주의 주요 도시에서 프로젝트화 되어 폭력예방과 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진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는 30개 도시 140여 개의 프로젝트에 16.9 Mio(1,690만 마르크)의 재정과 437명의 청소년 전문지도자가 투입된다. 각 프로젝트별 세부 프로그램은 440개가 제공되어 청소년폭력 예방 사업이 실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지도자는 정부제공의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계속교육을 통해 지도능력을 함양시켰다. 또한 직업과 청소년사업 학위를 동시에 병행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길을 구 동독 지역 대학 내에 청소년지도 관련학과를 설치함으로써 가능케 하였다.

이를 통해 구 동독지역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지도 사업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38) I. Zacharias, *Berufsbegleitende Studiummoeglichkeiten fuer AgAG-Mitarbeiter/innen in Nachqualifizierung AgAG*, 1994. 2, p. 18.

2. 중·대만

가. 중·대만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현황

(1) 청소년들의 중·대만 교육기관 유학

중·대만 청소년 교류·협력 중 교육 교류·협력이 가장 확대된 분야이다. 교육 교류·협력 중 유학부문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특히, 중국학생의 대만 유학 보다는 대만 학생의 중국체류와 유학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양국 정부의 우호적인 판단이 작용한데 있다. 대만은 대만시민들의 국내민주화 요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자유화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대만 학생들의 대륙 연수나 유학을 비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은 대만 학생들이 중국유학을 통해 대만의 민주정치제도의 장점을 깊게 인식함으로써 대만 민주정치를 더욱 옹호하고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혐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북경 당국은 젊은 대만 학생들이 중국 체류나 유학을 통해 자국을 이해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반공의식이나 대만 독립의식이 많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대만간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은 주로 교육, 상호방문, 문화탐방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국과 대만당국은 청소년들의 교류·협력이 자국의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위상을 깊이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함으로써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다.

1991~1995년의 경우, 대만학생들이 중국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수는 1,288명이었으며, 중국의 8개 부처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만, 홍콩, 마카오 주재 학생들의 중국 유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활히 하였다. 특히, 중국은 자국 주재 대만, 마카오, 홍콩학생들에게 중국학생들과 같은 신분을 제공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들 지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97년에 3,000~4,000명의 대만 고등학생들이 중국대학에 등록하였

다. 대만당국이 공식적으로 많은 중국 대학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국대학 등록 대만 학생 수가 증가되는 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대만 대학입시가 치열함에 따라 입시에 실패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등록할 곳을 찾아야만 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륙에서의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2001년에 대만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대륙의 교육기관에 정식 입학한 수는 1,078명에 달하였다. 이 중 600명은 초등학교 학생과 정확 당한 학생이거나 학업 중간에 대륙으로 간 학생들이었다. 고등교육 학생 수는 대학생(116명), 석사반 학생(190명)이며 박사반 학생은 172명에 달하였다. 대만 입법원 위원 몇 명도 대륙에 유학하고 있다.³⁹⁾

(2) 중·대만 교육기관간의 학술 교류·협력 사례

중·대만 교육기관간의 학술교류 논의는 1995년~1996년 중·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대만의 대학총장들이 모여서 논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 1월 臺南의 成功大學 총장은 43개 대만 대학총장들을 결성하여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대만 청소년, 교수들과 중국의 학생, 교수들과의 교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학 총장들의 논의에 이어 대만 고등학교 교장들의 논의가 있었다. 1996년 4월 14개 중·대만 고등학교 교장들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新州지방의 交通大學 대표단은 상해에 있는 모교 격인 교통대학의 백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북경의 청화대학 대표단은 新州에 있는 청화대학을 방문하는 등 중·대만 간 자매기관간의 학술교류를 논의하기도 하였다.⁴⁰⁾

이에 따라 양안 학술교류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증대될 수 있었다. 양안의 학술교류는 특히 학술, 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에서

39) "PRC: Liaowang Article Views Number of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2002-0117.

40) Ralph N. Clough, *Cooperation or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p. 60.

크게 증대하였으며 중국인의 전통적인 민속문화의 증진 방향, 중국 근대화 활성화 방안 등의 토론과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양안 청소년들간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데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 대학생들의 대륙방문은 주로 대학생 간부급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2년의 경우 대만의 中山大學을 비롯한 대학생 간부 13명은 심천을 방문하여 중국 국무원 대만관공실 부주임을 면담하였다. 이 면담에서 중국 간부는 자국의 무기획득은 대만을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일 대만학생들이 대륙을 방문할 경우 비행기표 할인과 유스텔 무료숙박을 제공할 것이며 대만 대학생들의 단체여행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¹⁾ 또 다른 대만 대학생 방문단은 중국의 全中國青年聯合會 초청으로 2002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북경대학, 청화대학, 인민대학 등을 방문하고 국무원 대만관공실 주임을 면담하였다. 164명으로 구성된 이번 대만 대학생 방문단은 최근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방문단이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당국은 중·대만 대학생들의 강연, 회동, 체육대회 등 여러 형태의 만남으로 양안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⁴²⁾

대만당국은 2002년 9월에 중국 문화부 주최로 개최된 중국 청소년예술대회 제1회 민족악기독주대회에 청소년을 파견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양금(揚琴), 비파(琵琶), 완합(阮), 고쟁(古箏), 이호(二胡), 죽적(竹笛), 칠현금(古琴) 및 민족타악기 등 8개 민족악기 연주에 1,928명의 선수들이 참가, 176명이 각각 금·은·동메달을 받았다. 35명의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선수들이 참가하여 5명이 “해외선수특별상”을 받기도 하였다.⁴³⁾

41) “PRC: Wang Zaixi, Tang Shubei Meet With Taiwan Students in Shenzhen,” F BIS-CHI-2002-0327; Ta Kung Pao (Internet Version-WWW), 2002. 3. 27.

42) “PRC: Official Meets Taiwan Students Group, Comments o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2002-0402.

43) 『人民日報』, 2002, 9. 22.

나. 중·대만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사례

(1) 대만의 경우

(가) 중국 대학 학위 인정 조치

그 동안 중국에서 획득한 대만 청소년들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대만 교육부는 1977년에 중국내 고등교육기관의 7% 정도인 73개 대학의 학위만을 인정한다고 표명하였다. 대만 교육부의 표명은 당시 대만의 야당인 國民黨과 民進黨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대만 교육부의 조치로 인해 수많은 대만 청소년들이 중국당국에 의해 중국의 정책이 대만의 정책보다 좋다는 통일 선전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여 대만당국의 조치에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만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5년간 연구한 결과이며 이미 대만 行政院과 大陸委員會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표명 철회를 거부하였다. 야당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대만 총리는 대륙위원회와 함께 정책실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행정원에 허가를 다시 얻도록 교육부에 지시하였으나 1990년까지 가이드라인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대만이 대만청소년들의 대륙유학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중국은 대만의 대륙 유학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1993년에 대만 당국은 대만 청소년의 중국대학 입학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치열한 대만내 대학입학시험을 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많은 대만 청소년들이 중국 유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유학 학생 수가 증대됨에 따라 대만당국은 대륙학력인정법(大陸地區學歷檢查及採認變法)을 1997년 10월 교육부령으로 제정·공표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교육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대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원거리 교육을 받았거나, 대륙 이외의 지방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혹은, 명예박사 학위나 공산주의 의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연구소에서 받은 학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만에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연수하지 않고 대륙에서 직접 이와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중국

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만당국은 선별적으로 청소년들의 대륙유학과 학위를 인정해오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나) 대만 유학 대륙학생 장학금 지급

대만은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활성화 일환으로 대륙 학생이 대만 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대만은 1996년 경우 대륙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였다. 대만 대륙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1996~2001년 경우 대륙학생에게 대만이 장학금 지급을 약속한 수와 실제로 대만에 온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996년에는 4명 제공 약속에 1명 유학, 1997년에는 25명 제공 약속에 3명 유학, 1998년에는 10명 제공 약속에 4명 유학, 1999년에는 32명 제공 약속에 4명 유학, 2000년에는 29명 약속에 5명, 2001년에는 33명 약속에 23명으로 이 기간 동안 대만은 143명의 대륙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대만으로 유학한 학생 수는 23명에 불과하였다. 대만에 연구하러 온 학생 수가 적은 것은 북경당국이 대만 유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⁴⁵⁾

(다) 중·대만 대학원생 교환활동 추진

대만당국은 중·대만간 대학원생 교환을 추진하여 교환학생 활동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1996년 2건이 성사되었으며 1997년에는 17건, 1998년에는 53건에서 1999년에는 두 배로 증가한 101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양안간 대학원생들의 상호교환 활동은 2000년에는 188건이며 2001년에는 180건이 실현되었다.

44) 兩岸人民關係條例暨相關許可變法, 修訂七版,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中華民國 91年 7月, 2002. 7, pp. 249-255.

45) 대만 대륙위원회, 2001. 12.

(라) 대륙 청소년의 대만 방문 추진

대만은 행정원 소속 대륙위원회 주관으로 대륙 청소년의 대만 방문을 추진하여 왔다. 1998년~2001년 대륙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륙 청소년의 대만 방문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경우 대만당국은 7개 그룹 156명을 초청하였으며 1999년에는 11개 그룹 245명을 방문 초청함으로써 방문초청자 수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는 16개 단체 408명을 초청하였다. 대만당국은 2001년에는 12개 단체 225명을 초청함으로써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46개 단체 총 1,034명을 초청하는 실적을 올렸다.

(마) 양안 문화활동 추진

대만은 양안 문화활동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 당국의 문화교류·협력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다만 예외로 200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1992년 12건에 불과하였던 문화 협력이 1995~1996년 양안간 군사위협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으며 1995~1996년 각각 16건에 머물던 건수가 1997년~1998년에는 16건에서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49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만당국이 주관한 중·대만간 문화활동 건수는 245건에 달하였다.⁴⁶⁾

(바) 間接3通 하에 청소년 교류 활성화 추진

대만정부는 중국이 요구하는 대만과 중국과의 직접 通航, 通運, 通信 즉 直3通을 위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기피하여왔다. 대만은 2000년 1월부터 間接3通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만의 입장은 중국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直3通을 논의한다면 直3通의 실현은 2004년 대만대통령 선거 경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유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중·대

46) 대만 대륙위원회, 2001. 12.

만은 간접 3통으로 대만의 馬祖島, 金門島에 중국 배가 船積할 수 있도록 허용만 하고 있다. 대만이 직3통을 허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직3통이 실현될 경우 數萬의 대륙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대만으로 직접 잠입하기 용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들의 잠입으로 인한 대만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국의 경우

(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청소년 교류 추진

王兆國 全國政協 부주석 겸 중공중앙 통전부 부장은 2002년 6월 13일 홍콩, 대만 청년교류 촉진회 방문단 일행을 면담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대만청소년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데 중국 당국은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였다.⁴⁷⁾ 이는 중국이 향후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단체 소속 청소년들의 대륙 활동을 억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청년단체가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양안의 청소년 교류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민진당이 대만의 집권당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대만 당국과의 공식적인 정치적 관계가 부재하다는 입장에서 청소년 교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00년 12월 민진당 청소년 발전국과 대만의 담강대학 대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대륙의 대만연구소와 양안간 청소년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할 때, 중국당국은 이 회담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 중국당국은 민진당 소속 청년들에게 중국 여행에 필요한 “대만동포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아 무산되었다.⁴⁸⁾

(나) 대만 학생의 대륙유학 허용, 입학시험 면제와 장학금 지급

대만당국이 대만 청소년들의 중국 유학을 인정하지 않자, 중국은 1987년 대만학생의 중국내 학교진학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대만 학생들의

47) 「中新網」, 2002. 6. 14.

48) 「聯合報」, 2000. 12. 8.

중국유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의 대만학생이 중국의 예술, 의학, 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본토로 유학하기 시작하였다. 북경 당국은 대만학생 유치를 위해 처음에는 입학시험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대만과의 直3通을 위한 청소년 교류활성화 추진

陳雲林 중공중앙 대만관공실,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은 2002년 8월 22일 대만 전자공업공회 일행과의 면담에서, 陳水扁 대만 대통령의 “一邊一國” 등 대만독립을 시사하는 발언은 양안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대만 사회안정 및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향후 대만과의 인적교류 및 민간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여 직접 “三通”을 실현한다는 중국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양안간의 교류와 협력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⁴⁹⁾

錢其琛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역시 2002년 9월 3일에서 8일간 福建省의 對대만업무를 시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고, “대만독립” 언행을 절대 반대하면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양안의 직접 “三通”을 지속적으로 추진, 양안간의 인적교류를 포함한 모든 교류와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만동포의 정당한 권익을 법으로 보호하여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錢其琛 부총리는 또한 2002년 9월 22일 북경을 방문 중인 대만 소수민족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최근 양안 소수민족간의 문화, 교육, 학술 등 여러 분야의 교류가 빈번한 바, 더 많은 대만 소수민족 동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으로써 대만내 소수민족 청소년들의 방문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⁵⁰⁾

49) 『人民日報』, 2002. 8. 23.」

50) 『人民日報』, 2002. 9. 9 ; 2002. 9. 22.

3. 시사점

가. 통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통일 후 독일의 구 동독지역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방향성 상실을 최소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은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구 동독청소년이 경험하였던 사회 각 영역에서의 방향성 상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방향성 상실은 바로 행동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며 이는 곧 이탈행동과 연결되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일준비과정에서부터 북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와 적응 및 행동전략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남북 청소년의 민간교류와 교환교육 그리고 각종 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이 위의 목표에 맞추어서 새롭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서는 당과 연계된 소년단과 청년연맹 등의 청소년 조직활동이 청소년 여가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주로 구 동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여가활동과 사회체제 유지적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러한 활동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여가활동의 공백상황에서 북한청소년에게 새로운 여가활동모델과 여가방법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여가교육과 이를 담당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 전에는 남한에서 북한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그리고 행동 및 실천전략이 학습되어야 한다. 통일 후에는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지도자를 현장에서 양성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셋째, 통일 후 북한 내에 신속한 청소년지도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일은 급격한 사회변화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북한청소년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신속하게 다양한 청소년 환경의 제반 영역에서 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진로, 청소년 취업, 청소년 실업, 청소년 활동공간 등 제반 영역에서 그들의 사회적 실태와 심리적 상황에 맞춘 적절한 사업들이 조기에 투입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후 제공될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방법 등의 전략이 행정적, 법률적 그리고 사회교육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 후 북한지역 대학 내에 청소년지도학과 설치와 이를 통한 전문지도자 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청소년의 안정적이고 사회 동조적인 사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 영역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여가와 새로운 사회가치 형성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인력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청소년의 삶의 근접지역의 대학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북한청소년의 통일로 인한 특수한 사회적 상황과 심리,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에 적합한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청소년의 일반적 생활과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또한 필요하겠다.

나. 중·대만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개방된 북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개방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은 우선 남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상호 이해에 있다. 중·대만 의 경우 청소년 교류·협력이 가장 확대되어 왔다. 중국학생의 대만유학 보다

는 대만 학생의 중국체류와 유학이 급격히 확대되어 온 점은 대만의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또한 중국과 대만당국이 청소년 교류에 대해 우호적인 판단이 작용한데 있었다.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첫째, 한국학생들의 북한방문에 대한 요건, 즉 자격, 교류분야와 체류기간 등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방문이나 학술교류를 비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남북한 정치관계에 좌우될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토론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학술교류보다는 남북한 상호의 문화나 한민족의 전통적인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속, 예술, 역사, 고고학, 체육, 경제, 경영, 과학기술, 의학 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학술교류와 1년 연수를 우선 추진하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학술교류이나 협력 사업은 단기간(1~3개월 정도) 체류나 연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대만간 청소년분야 교류·협력이 주로 대만정부의 교육, 상호방문, 문화탐방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아래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북한청소년들의 남한교육이나 방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학생들의 한국내 유학자격은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인 연구를 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교육기관간의 학술교류는 상호 자매학교를 결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남한 교육기관간의 경쟁이 유발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학술교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고등학생들간의 교류는 단기체류나 연수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대만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사회가 개방되지 않고 있어 북한에 유학하려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 비정치 분야의 북한대학 강의를 우선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선별적인 허용조치가 더욱 확대되고 문제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개의 북한대학 학위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 교육부의 허가가 없는 북한 대학학위 취득이나 혹은 명예박사 학위나 사회주의 의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연구소에서 받은 학위는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상호 방문 및 단체 해외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단체 해외연수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중요

성과 한민족이 나아갈 길을 터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⁵¹⁾ 또한 중국이 무력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⁵²⁾ 있는 중·대만 관계와는 달리 남북한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남북한의 장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정 수준의 남북한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남북한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1) 대만의 民進黨의 陳水扁이 2000년 3월 18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표명하였다. 천 대통령은 대만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李登輝 前 政府가 천명한 양안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입장을 표현하는 법률을 통과하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천 대통령이 중·대만 관계를 “一邊一國” 관계로 규정하고 대만의 장래에 대한 결정은 향후 국민투표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함으로써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냉각되고 있다.

52) 堀田 중앙군사위 부주석,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중국 군부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나,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으며 외부세력의 간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中新網, 2001. 7. 31; 江澤民 국가주석 역시 中南海에서 王津平을 대표로 한 대만 “중국통일연맹”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대만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양안관계 개선과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만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무력사용 불포기 선언 없이는 양안간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축하였다. 中新網, 2001. 10. 29.

V.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관련 청소년의식 실태 분석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3차년도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한 사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사회는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상호왕래와 접촉이 가능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사회로 점차 이행해 갈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통일과정을 주도할 청소년들이 머지 않은 장래에 전개될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한 사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조사의 내용

조사의 내용은 크게 “통일·교류협력관” “통합단계의 남북교류관”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통합 이후의 국가·사회체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류협력관”에서는 청소년들의 통일관과 현 단계 남북한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통일관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의 예상시기와 방식, 남북한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교류·협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분야별 평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앞으로의 방향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통합단계의 남북교류관”에서는 실질적 통합단계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청소년들의 북한지역 왕래의사와 북한주민 접촉의사를 조사하였다. 북한지역 왕래의사는 여행, 취학, 취업, 거주, 정착의 네 가지 측면에서 행동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북한주민 접촉의사는 이웃·친구·결혼상대로서 북한주민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에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나타날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지역갈등,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과의 비교·평가, 부모세대·청소년세대의 갈등·혼란의 비교, 예상되는 갈등·혼란의 극복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단계의 국가·사회체제”에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제기될 통일국가의 상징, 사회체제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국가상징으로서의 국가·국호문제,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경제·정치체제, 청소년 정책의 과제, 통일국가의 국제적 위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집단의 선정은 성별(남/녀)·교급별(고등학교/대학교) 하위집단의 구성비율을 1:1로 설정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학급) 단위로 표본을 할당하는 유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이 된 학교는 총 14개교(대학교 6, 고등학교 8)였으며,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연구진이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자계식(自計式) 집단조사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총 1,140매로서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총 1,125매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의 교차분석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조사결과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확률은 $*=p<0.05$, $**=p<0.01$, $***=p<0.001$ 로 표기하였다).

(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54.1%로서 여자(45.9%)보다 다소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과 대학생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집되었다(각각 51.0%, 49.0%). 부친의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36.2%), 대학원 재학 이상(8.5%), 중학교 졸업(6.4%) 등의 순이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61.8%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중간보다 못 사는 편”(18.1%), “중간보다 잘 사는 편”(18.0%)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매우 못 사는 편”(1.5%), “매우 잘 사는 편”(0.5%)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

<표 V-1> 표본집단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자	609	54.1
	여 자	516	45.9
교 급	고교생	574	51.0
	대학생	551	49.0
부친 학력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69	6.2
	중학교 졸업(또는 중퇴)	72	6.4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444	39.6
	전문대학(2년제) 졸업(또는 중퇴)	35	3.1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405	36.2
	대학원 재학 이상	95	8.5
생활 수준	매우 못 사는 편	17	1.5
	중간보다 못 사는 편	204	18.1
	중간 수준	695	61.8
	중간보다 잘 사는 편	203	18.0
	매우 잘 사는 편	6	0.5

(3) 독립변인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성”(남·여), “교급”(고교생·대 학생)과 더불어 응답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한 “사회계층”과 “통일지향성”의 네 가지이다.

“사회계층”은 “부친의 학력”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생활수준” 변인을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변인 구성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 변인의 응답항목에 각각 단계별 5점 척도점수를 부여한 뒤(부친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졸업”은 하나의 척도로 통합), 이를 곱하여 산출된 점수(1~25점)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1~8점까지를 “하층”, 9~12점까지를 “중간층”, 13점 이상을 “상층”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집인원 1,120명(결측사례 5명 제외) 중에서 하층이 26.8%(300명), 중간층이 55.0%(616명), 상층이 18.2%(204명)로 나타났다.

<표 V-2> 사회계층 변인의 구성

척도점수	부친의 학력	주관적으로 평가한 생활수준
1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매우 못 사는 편
2	중학교 졸업(또는 중퇴)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중간 수준
	전문대학(2년제) 졸업(또는 중퇴)	
4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대학원 재학 이상	매우 잘 사는 편

“통일지향성” 변인은 조사문항 중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응답항목을 무관심집단/관심집단으로, 통일의 당위성 인식 문항의 응답항목을 통일 반대/통일 찬성의 두 가지 척도로 재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0/1점의 척도점수를 부여한 뒤, 두 변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값이 0이면 “하위집단”으로, 1이면 “중간집단”으로, 2이면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통일지향성 변인의 상위집단은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통일을 원하는” 집단으로, 하위집단은 “통일문제에 무관심하여, 통일을 원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중간집단은 “통일문제에 관심은 있으나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반대로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나 통일을 원하는” 집단으로 각각 개념화하였다.

<표 V-3> 통일지향성 변인 구성

척도점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인식
0	전혀 관심이 없다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관심이 없다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1	관심이 있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매우 관심이 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통일지향성 변인을 구성하는 세 집단을 산출한 결과, 전체 표집인원 1,121명(결측사례 4명 제외) 중 하위집단이 12.0%(134명), 중간집단이 21.4%(240명), 상위집단이 66.6%(747명)로 분류되었다.

2. 조사의 결과

가. 통일·교류협력관

(1) 통일관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청소년들이 평소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심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관심이 있다”가 63.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그 다음이 “관심이 없다”(23.3%), “매우 관심이 있다”(10.3%)의 순이었

으며, “전혀 관심이 없다”(3.1%)는 응답은 극소수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할을 상회하여 (73.6%) 관심이 없다는 응답(26.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V-4>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혀 관심이 없다	35	3.1
관심이 없다	262	23.3
관심이 있다	712	63.3
매우 관심이 있다	116	10.3

비고: N=1,125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가 76.8%로서, 여자(69.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13.6%)가 여자(6.4%)의 두배 수준에 달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약 8할(78.4%)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고교생은 7할(69.0%)에 못미쳤다. 계층별로는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에서 상층(79.4%)이 하층(73.7%)·중간층(71.6%)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5>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변인별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혀 관심이 없다	35	3.1
관심이 없다	262	23.3
관심이 있다	712	63.3
매우 관심이 있다	116	10.3

통계치: 성별 $\chi^2=19.49^{***}$; 교급 $\chi^2=18.33^{***}$

(나)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의 당위성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통일에 찬성(“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55.4%)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인 찬성(“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25.6%), 반대(“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17.4%)의 순이었으며 적극적인 반대(“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1.6%)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통일에 찬성하는 청소년이 대다수(8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 통일의 당위성 인식

(단위: 명, %)

	빈도	비율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18	1.6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195	17.4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621	55.4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287	25.6

비고: N=1,121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대다수(86.2%)가 통일에 대하여 찬성 의사를 표시한 반면, 통일에 찬성하는 여자는 74.9%에 머물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통일 찬성 응답률이 88.0%로서 고교생(74.3%)보다 1할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통일 찬성 응답률(78.9%)이 상층(83.8%)·하층(82.9%)에 비해 다소 낮은 점이 두드러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7> 통일의 당위성 인식: 변인별

(단위: %)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성 별	남 자	1.2	12.7	55.3	30.9
	여 자	2.1	23.0	55.6	19.3
교 급	고교생	2.8	22.9	51.0	23.3
	대학생	0.4	11.7	59.9	28.1

통계치: 성별 $\chi^2=33.48^{***}$; 교급 $\chi^2=37.19^{***}$

(다)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예상 가능한 4가지의 통일방식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평화적·점진적 통일(“남북한 당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점진적인 방식으로”)의 응답률이 63.7%로서 가장 높았으며, 흡수통일(“북한 내부의 체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으로”)을 예상하는 청소년이 3할(31.2%)에 달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북한의 의도적인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전쟁을 통해”, 2.9%)과 우발적인 무력충돌(“남북한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2.1%)로 인한 통일을 예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V-8>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전쟁을 통해	33	2.9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24	2.1
북한 내부의 체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으로	349	31.2
남북한 당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점진적인 방식으로	713	63.7

비고: N=1,119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가지 변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 중 약 1할(8.4%)이 전쟁을 통한 통일(북한의 무력도발·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상한 반면, 전쟁을 예상하는 대학생은 극소수에 머물렀고 흡수통일이나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응답률이 상위집단은 약 7할(69.7%)에 달하는 반면, 하위집단은 과반수에도 못미쳤고(43.2%), 전쟁을 통한 통일의 응답률은 하위집단이 17.5%에 달하여 상위집단의 낮은 응답률(2.7%)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흡수통일의 응답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중·하층에 비해 상층집단의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9>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 변인별

(단위: %)

		북한의 무력도발	우발적인 무력충돌	흡수통일	평화적 통일
교 급	고교생	4.9	3.5	29.9	61.6
	대학생	0.9	0.7	32.5	65.9
통 일 지향성	하 위	11.4	6.1	39.4	43.2
	중 간	2.5	3.4	37.8	56.3
	상 위	1.6	1.1	27.7	69.7

통계치: 교급 $\chi^2=26.48^{***}$; 통일 $\chi^2=75.36^{***}$

(라) 통일의 예상시기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4단계의 기간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20년 이내”가 38.1%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20년 이상 이후에”(30.5%), “10년 이내”(27.0%)의 순이었으며 “5년 이내”는 소수(4.4%)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7할 정도가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해야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0> 통일의 예상시기

(단위: 명, %)

	빈 도	비 율
5년 이내	49	4.4
10년 이내	303	27.0
20년 이내	428	38.1
20년 이상 이후에	343	30.5

비고: N=1,123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계층·통일지향성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대학생보다 5·1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고(각각 35.8%, 26.7%), 계층별로는 상층집단이 중·하층집단에 비해 통일이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표 V-11> 통일의 예상시기: 변인별

(단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후
교 급	고교생	6.5	29.3	33.5	30.7
	대학생	2.2	24.5	42.9	30.4
계 층	하 층	7.7	25.0	36.3	31.0
	중 간	3.3	29.4	35.8	31.5
	상 층	2.0	22.7	47.8	27.6
통 일 지향성	하 위	0.8	17.3	29.3	52.6
	중 간	2.9	22.9	35.0	39.2
	상 위	5.5	29.9	40.6	24.0

통계치: 교급 $\chi^2=20.64^{***}$; 계층 $\chi^2=22.40^{**}$; 통일 $\chi^2=57.71^{***}$

(마)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낮은 편이다”가 63.7%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19.9%), “높은 편이다”(15.0%)의 순이었으며, “매우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극소수(1.4%)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대다수(83.6%)의 청소년들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매우 낮은 편이다	224	19.9
낮은 편이다	715	63.7
높은 편이다	168	15.0
매우 높은 편이다	16	1.4

비고: N=1,123

전쟁 가능성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가지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남자가 87.0%로서 여자(79.6%)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고교생보다 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각각 88.2%, 79.2%).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응답이 상위(86.5%)- 중간(81.2%)- 하위 집단(71.6%)의 순으로서,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고교생보다 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3>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 변인별

(단위: %)

		매우 낮은편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편
성 별	남 자	22.0	65.0	11.8	1.1
	여 자	17.5	62.1	18.7	1.8
교 급	고교생	17.1	62.1	18.4	2.4
	대학생	22.9	65.3	11.4	0.4
통 일 지향성	하 위	11.9	59.7	24.6	3.7
	중 간	19.7	61.5	16.7	2.1
	상 위	21.4	65.1	12.6	0.8

통계치: 성별 $\chi^2=12.66^{**}$; 교급 $\chi^2=22.65^{***}$; 통일 $\chi^2=25.34^{***}$

(2) 남북 교류·협력관

(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평가

현재 남북한간에 전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불만-만족의 4단계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48.9%)와 “불만이다”(42.5%)가 4할 이상이며, “매우 불만이다”(6.3%)가 “매우 만족한다”(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제적으로 현재의 남북한 교류·협력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청소년(51.2%)과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48.8%)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V-14>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평가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매우 불만이다	71	6.3
불만이다	478	42.5
만족한다	550	48.9
매우 만족한다	26	2.3

비고: N=1,125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남자가 과반수를 상회(54.7%)한 반면 여자는 4할 대에 머물렀고(47.1%), 교급별로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에서 고교생(53.0%)이 대학생(49.4%)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하위집단이 32.1%에 머문 반면, 중간집단은 45.0%, 상위집단은 56.6%에 이르러 통일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재의 남북한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하위집단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5>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평가: 변인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 별	남 자	4.8	40.6	50.9	3.8
	여 자	8.1	44.8	46.5	0.6
교 급	고교생	7.5	39.5	49.7	3.3
	대학생	5.1	45.6	48.1	1.3
통 일 지향성	하 위	16.4	51.5	30.6	1.5
	중 간	7.1	47.9	44.2	0.8
	상 위	4.1	39.2	53.7	2.9

통계치: 성별 $\chi^2=19.65^{***}$; 교급 $\chi^2=10.17^*$; 통일 $\chi^2=51.53^{***}$

(나) 부문별 교류·협력 평가

다음은 구체적으로 사회의 각 부문별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게 하였다.

경제·정치·문화·청소년부문의 각각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유일하게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2.2%),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이 4할 대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43.3%),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25.6%)과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22.9%)은 모두 2할 대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 금강산 관광사업 등 문화·경제부문에 편중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V-16> 분야별 교류·협력 평가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	8.7	48.0	41.8	1.5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	13.8	60.6	25.2	0.4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	6.0	31.9	54.7	7.5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	26.9	50.2	21.6	1.3

(다) 청소년부문 교류·협력 평가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남자가 3할 대에 달하는 등(30.7%), 남자의 만족응답비율이 여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만족응답률이 25.8%로서 대학생(19.7%)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집단이 중·하층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동일지향성 정도별로도 상위집단이 중·하위집단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7> 청소년 교류·협력 평가: 변인별

(단위: 명, %)

		매 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 우 만족한다
성 별	남 자	30.7	47.1	21.2	1.0
	여 자	22.4	53.9	22.2	1.6
교 급	고교생	27.3	46.8	23.9	1.9
	대학생	26.5	53.7	19.2	0.5

통계치: 성별 $\chi^2=10.66^*$; 교급 $\chi^2=9.90^*$

(라)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

앞으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축소-확대의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이 “확대되어야 한다”(57.1%)고 응답하였고,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17.9%)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6.8%)는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할에도 못미쳐서(8.2%)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8> 교류·협력의 방향

(단위: 명, %)

	빈 도	비 율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14	1.2
축소되어야 한다	79	7.0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89	16.8
확대되어야 한다	642	57.1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1	17.9

비고: N=1,125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남자 77.5%로서 여자(71.9%)

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교급별로는 대학생 중 82.4%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고교생의 응답률(67.8%)을 크게 상회하였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하위집단 내에서는 30.6%에 불과한 반면, 중간집단은 60.0%, 상위집단은 87.8%에 달하여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계층별로는 상층·하층 청소년들이 중간층 청소년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19> 교류·협력의 방향: 변인별

(단위: %)

		크 게 축소되어야	축 소 되어야	현재의 수준 유지	확 대 되어야	크 게 확대되어야
성 별	남 자	1.0	6.6	14.9	55.5	22.0
	여 자	1.6	7.6	19.0	58.9	13.0
교 급	고교생	1.9	8.9	21.4	49.0	18.8
	대학생	0.5	5.1	12.0	65.5	16.9
통 일 지향성	하 위	6.7	23.9	38.8	25.4	5.2
	중 간	0.4	11.7	27.9	52.9	7.1
	상 위	0.4	2.5	9.2	64.1	23.7

통계치: 성별 $\chi^2=17.12^{**}$; 교급 $\chi^2=39.09^{***}$; 통일 $\chi^2=277.49^{***}$

(마)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사회의 다양한 부문 중에서 특히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서 문항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가 57.8%에 달하여 가장 다수였고,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률로 상당수에 달한 반면(26.4%),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5% 남짓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84.2%로서 앞서 문항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응답비율(75.0%)을 크게 상회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V-20>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단위: 명, %)

	빈 도	비 율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21	1.9
축소되어야 한다	39	3.5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17	10.4
확대되어야 한다	649	57.8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96	26.4

비고: N=1,122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대학생(89.8%) 고교생(78.8%)보다 1할 이상 높게 나타났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 중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절반에 못미치는 반면(46.3%), 중간집단은 8할 수준(78.7%), 상위집단은 9할을 상회하여(93.0%)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녀간 응답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계층별로는 상층·하층 집단에 비해 중간층 집단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1> 청소년 교류·협력의 방향: 변인별

(단위: %)

		크 게 축소되어야	축 소 되어야	현재의 수준 유지	확 대 되어야	크 게 확대되어야
교 급	고교생	2.6	5.1	13.5	52.1	26.7
	대학생	1.1	1.8	7.3	63.8	26.0
통 일 지향성	하 위	6.7	15.7	31.3	35.1	11.2
	중 간	1.7	5.0	14.6	60.3	18.4
	상 위	0.9	0.8	5.2	61.3	31.7

통계치: 교급 $\chi^2=29.06^{***}$; 통일 $\chi^2=214.34^{***}$

나. 통합단계의 남북교류

(1) 북한 왕래의사

(가) 북한 왕래의사: 전체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가지의 예문을 제시하고 행동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행동에 대한 긍정응답률을 보면,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가 88.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61.8%),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38.6%),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25.9%)였으며,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19.8%).

<표 V-22> 북한 왕래의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	2.4	9.1	54.5	34.0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	20.9	53.2	21.9	4.0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19.6	41.8	33.5	5.1
짧은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	13.6	24.7	53.0	8.8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	34.2	46.0	16.5	3.3

(나) 북한지역 여행의사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동일지향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동일지향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하위집단 청소년 중 69.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간집단은 85.7%, 상위집단은 92.9%에 달하여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자,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상층·하층 집단에 비해 중간층 청소년의 긍정응답률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표 V-23> 북한지역 여행의사: 변인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일 지향성	하위	10.4	20.1	51.5	17.9
	중간	2.9	11.3	64.7	21.0
	상위	0.7	6.4	51.7	41.2

통계치: $\chi^2=111.22^{***}$

(다) 북한학교 취학의사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3할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32.5%), 고교생은 2할에 못미쳤다(19.6%).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 청소년의 9.7%만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비해, 상층집단은 3할을 상회(32.4%)하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성별로는 응답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고 계층별로는 상층·중간층에 비해 하층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4> 북한지역 취학의사: 변인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급	고교생	25.9	54.5	16.6	3.0
	대학생	15.7	51.8	27.4	5.1
통일 지향성	하위	39.6	50.7	6.7	3.0
	중간	30.8	54.4	13.5	1.3
	상위	14.4	53.3	27.4	5.0

통계치: 교급 $\chi^2=32.27^{***}$; 통일 $\chi^2=87.41^{***}$

(라) 북한지역 취업의사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 별로 비교해 보면, 성·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42.7%가 북한지역의 직장에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3할 수준에 머물렀다(33.9%).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의 46.8%가 북한지역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여 하위집단(18.7%)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45.2%)이 고교생(32.4%)보다 높았고,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의 북한지역 취업의사가 중간·상층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5> 북한지역 취업의사: 변인별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17.0	40.3	36.7	6.0
	여 자	22.5	43.5	29.8	4.1
통 일 지향성	하 위	44.8	36.6	14.2	4.5
	중 간	28.7	46.8	21.9	2.5
	상 위	12.0	41.1	40.9	5.9

통계치: 성별 $\chi^2=10.73^*$; 통일 $\chi^2=118.34^{***}$

(마) 북한지역 거주 의사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 별로 비교하면,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66.1%가 북한지역에 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여자(56.5%)보다 높은 편이었고, 교급별로는 대학생(67.9%)이 고교생(56.0%)보다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북한지역에 거주여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상위집단에서는 7할을 상회하는 반면(71.8%), 중간집단은 과반수에 못미치고(48.3%). 하위집단은 3할 미만으로서(29.5%), 세 집단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67.9%)이 고교생(56.0%)보다, 계층별로는 상위집단의 긍정응답률(64.7%)이 중·하층집단(각각 61.2%, 61.5%)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6> 북한지역 일시거주 의사: 변인별

(단위: %)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12.8	21.1	56.9	9.2
	여 자	14.5	29.0	48.3	8.2
교 급	고교생	17.5	26.6	48.3	7.7
	대학생	9.5	22.7	58.0	9.9
통 일 지향성	하 위	31.8	38.6	25.0	4.5
	중 간	22.3	29.4	46.2	2.1
	상 위	7.5	20.7	60.1	11.7

통계치: 성별 $\chi^2=11.76^{**}$; 교급 $\chi^2=21.30^{***}$; 통일 $\chi^2=133.98^{***}$

(바) 북한지역 정착의사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약 1/4이 북한지역 정착의사를 나타내어(24.7%), 고교생(15.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북한지역에 정착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상위집단의 25.8%에 달하는 반면, 중간·하위집단 청소년은 1할에도 못미쳐서(각각 8.4%, 7.4%) 세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계층별로는 상층·하층 청소년이 중간층 청소년에 비해 북한지역 정착의사가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7> 북한지역 정착의사: 변인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 급	고교생	40.0	44.8	12.9	2.3
	대학생	28.1	47.3	20.3	4.4
통 일 지향성	하 위	62.7	29.9	5.2	2.2
	중 간	50.0	41.6	7.6	0.8
	상 위	24.1	50.1	21.5	4.3

통계치: 교급 $\chi^2=24.87^{***}$; 통일 $\chi^2=122.90^{***}$

(2) 북한주민 접촉의사

(가) 북한주민 접촉의사: 전체

청소년이 느끼는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측정하기 위해 Bogardus의 척도를 원용하여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3.9%에 달하였고,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은 89.9%였으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도 55.0%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사적인 접촉·교제관계가 심화될수록(이웃 -> 친구 -> 배우자)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가장 사적인 인간관계 영역인 배우자로서 북한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한 것은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높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V-28> 북한주민 접촉의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2	5.3	64.0	29.6
가까운 친구로 사귄다	1.2	8.8	60.9	29.0
(이성의 경우)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2.4	32.7	40.2	14.8

(나) 북한주민 접촉의사: 이웃

북한주민을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성·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북한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이 남자가 94.4%로서 여자(92.6%)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의 97.7%, 중간집단의 90.8%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하위집단은 8할에도 못미쳤다(76.1%).

교급·계층별 하위집단에서는 모두 9할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V-29> 북한주민 접촉의사- 이웃으로: 변인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0.8	4.8	63.2	31.2
	여 자	1.6	5.8	65.0	27.6
통 일 지향성	하 위	6.0	17.9	64.2	11.9
	중 간	0.8	8.4	74.4	16.4
	상 위	0.3	2.0	60.6	37.1

통계치: 교급 $\chi^2=8.41^*$; 통일 $\chi^2=142.21^{***}$

(다) 북한주민 접촉의사: 친구

북한주민(청소년)을 “가까운 친구로 사귈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하위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북한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남자가 92.5%로서 여자(87.0%)보다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90.4%)이 고교생(89.6%)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 청소년의 7할 정도(70.7%)만이 북한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집단은 85.3%, 상위집단은 94.9%에 달하여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긍정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하층 청소년의 긍정응답률이 중간·상층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30> 북한주민 접촉의사- 친구로: 변인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0.8	6.7	60.6	31.9
	여 자	1.8	11.3	61.3	25.7
교 급	고교생	2.1	8.4	57.8	31.8
	대학생	0.4	9.3	64.2	26.2
통 일 지향성	하 위	5.3	24.1	60.9	9.8
	중 간	0.8	13.8	69.0	16.3
	상 위	0.5	4.6	58.2	36.7

통계치: 성별 $\chi^2=12.16^{**}$; 교급 $\chi^2=11.90^{**}$; 통일 $\chi^2=127.67^{***}$

(라) 북한주민 접촉의사: 결혼

북한주민을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성·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하위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7할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70.7%), 여자는 그 절반 수준인 36.2%에 머물렀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중 북

한주민을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청소년이 64.4%에 달하였으나 중간집단은 4할대, 하위집단은 3할에도 못미쳐서(각각 41.2%, 26.9%)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중간층에 비해 상층·하층 청소년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31> 북한주민 접촉의사- 결혼상대로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6.1	23.2	50.2	20.5
	여 자	19.8	44.0	28.2	8.0
통 일 지향성	하 위	34.3	38.8	20.9	6.0
	중 간	17.6	41.2	34.5	6.7
	상 위	6.7	28.9	45.4	19.0

통계치: 성별 $\chi^2=143.05^{***}$; 통일 $\chi^2=133.14^{***}$

(마) 주변 국가와의 비교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북한주민이 93.6%로서 유일하게 9할을 넘었고, 주변 4개국 중에서는 중국이 88.4%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미국(87.1%), 러시아(86.6%), 일본(83.6%)의 순이었다.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역시 북한이 89.9%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84.9%), “중국”(83.4%), “러시아”(81.9%)의 순이었으며 일본(80.8%)이 가장 낮았다.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북한이 55.0%로서 다른 4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으며, 이어서 일본(40.6%), “중국”(35.3%), “미국”(34.8%), “러시아”(30.3%)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이웃이나 친구와 같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주민과 다른 외국인들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배

우자와 같은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역시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2> 북한주민 접촉의사: 주변국과의 비교

(단위: %)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93.6	87.1	83.6	88.4	86.6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89.9	84.9	80.8	83.4	81.9
(이성의 경우)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55.0	34.8	40.6	35.3	30.3

비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임

(3) 상호왕래·접촉의 영향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5가지의 사회부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악화·향상의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향상될 것이다”와 “훨씬 향상될 것이다”)이라는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의 발전수준”이 86.6%로서 가장 높았고, “국민들의 인권·시민권”(70.9%), “경제적 성장과 발전”(64.3%), “정치체제의 민주화”(56.4%), “국민들의 생활수준”(48.0%)의 순이었다. 다른 사회부문과는 달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못미치는 것은 청소년들이 통일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과정에 따르는 통일비용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3> 상호왕래·접촉의 영향

(단위: %)

	훨씬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5.2	30.5	50.2	14.1
국민들의 생활수준	4.2	47.8	42.8	5.2
정치체제의 민주화	4.0	39.6	48.4	8.0
국민들의 인권·시민권	1.8	27.3	59.9	11.0
문화·예술의 발전수준	1.6	11.8	55.2	31.4

다.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1) 사회적 갈등

(가) 갈등·대립의 요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7가지의 남북한간의 사회·생활상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사고방식상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청소년이 91.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89.3%),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87.9%),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86.4%), “생활관습상의 차이”(83.5%)를 지적한 청소년이 8할을 상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54.9%), “종교·신앙관의 차이”(53.8%)를 지적한 청소년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V-34> 남북한 주민갈등의 요인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고방식상의 차이	1.8	7.0	61.1	30.2
생활관습상의 차이	1.9	14.7	61.6	21.9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	1.7	11.9	54.7	31.7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	2.2	9.9	48.2	39.7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	1.7	8.9	42.6	46.7
종교·신앙관의 차이	6.7	39.5	40.6	13.2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	7.6	37.5	43.8	11.1

(나) 지역갈등과의 비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현재 남한 사회 내부의 지역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38.8%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지역갈등과 유사한 수준”(26.7%),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16.1%), “지역갈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15.3%)의 순이었고, “지역갈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3.0%)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54.1%)한 반면,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19.1%).

<표 V-35> 남북한 주민갈등- 지역갈등과의 비교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지역갈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	34	3.0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	181	16.1
지역갈등과 유사한 수준	300	26.7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	435	38.8
지역갈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	172	15.3

비고: N=1,122

하위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44.2%가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64.4%에 달하여 대학생들이 남북한 주민간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하위집단(50.0%)에 비해 중간(56.5%), 상위(54.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계층별로는 하층에 비해 중·상층 청소년들이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36> 남북한 주민갈등- 지역갈등과의 비교: 변인별

(단위: %)

		훨씬 낮은수준	낮은수준	유사한수준	높은수준	훨씬 높은수준
교 급	고교생	4.4	20.8	30.6	34.7	9.5
	대학생	1.6	11.3	22.7	43.0	21.4
통 일 지향성	하 위	6.7	18.7	24.6	24.6	25.4
	중 간	3.3	14.6	25.5	39.3	17.2
	상 위	2.0	16.2	27.4	41.3	13.0

통계치: 교급 $\chi^2=60.78^{***}$; 통일 $\chi^2=30.40^{***}$

(다) 독일과의 비교

다음으로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 35.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독일과 유사한 수준”(28.5%), “독일보다 낮은 수준”(23.5%),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8.7%)의 순이었으며,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3.8%)이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44.0%로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27.4%)보다 많았지만,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도 3할 수준으로서(28.5%)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표 V-37> 남북한 주민갈등- 독일과의 비교

(단위: 명, %)

	빈도	비율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	43	3.8
독일보다 낮은 수준	264	23.6
독일과 유사한 수준	319	28.5
독일보다 높은 수준	395	35.3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	97	8.7

비고: N=1,11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대학생이 55.2%로서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고교생은 33.1%에 머물렀다.

다른 변인에서는 독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에 비해 중간·하위집단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38> 남북한 주민갈등- 독일과의 비교: 변인별

(단위: %)

		훨씬 낮은수준	낮은수준	유사한수준	높은수준	훨씬 높은수준
교급	고교생	5.3	29.9	31.7	28.2	4.9
	대학생	2.4	17.1	25.3	42.7	12.5

통계치: $\chi^2=65.16^{***}$

(라) 부모세대와의 비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갈등이 부모세대간의 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이 37.3%로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25.8%),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16.1%)의 순이었으며,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10.9%),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9.8%)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간의 갈등이 부모세대간 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48.2%로서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35.6%)보다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V-39> 남북한 청소년 갈등- 부모세대와의 비교

(단위: 명, %)

	빈도	비율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122	10.9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419	37.3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181	16.1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290	25.8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110	9.8

비고: N=1,122

하위집단간 응답결과는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38.0%가 청소년간의 갈등이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하여 대학생(33.2%)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의 32.0%가 부모세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한 반면, 중간집단은 42.0%, 하위집단은 44.8%에 달하여 통일지향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남북한 청소년간의 예상되는 갈등·대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인에서는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계층별로는 중·하층에 비해 상층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40> 남북한 청소년 갈등- 부모세대와의 비교: 변인별

(단위: %)

		훨씬 낮은수준	낮은수준	유사한수준	높은수준	훨씬 높은수준
교 급	고교생	13.3	32.4	16.3	26.1	11.9
	대학생	8.3	42.5	16.0	25.6	7.6
통 일 지향성	하 위	9.0	27.6	18.7	30.6	14.2
	중 간	8.0	29.0	21.0	28.6	13.4
	상 위	12.1	41.8	14.1	24.1	7.9

통계치: 교급 $\chi^2=19.26^{**}$; 통일 $\chi^2=32.35^{***}$

(2) 심리적 혼란

(가) 남북한 주민 비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주민들이 겪게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이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한 주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가 39.2%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33.7%),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12.0%)의 순이었으며, “남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7.6%)와 “남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7.5%)라는 응답은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45.7%에 달하여 남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하는 청소년(15.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표 V-41> 남북한 주민 심리적 혼란 비교

(단위: 명, %)

	빈도	비율
남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85	7.6
남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84	7.5
남북한 주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440	39.2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378	33.7
북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135	12.0

비교: N=1,122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혼란 비교에 대한 하위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계층·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북한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교급별로는 대학생(54.7%)이 고교생(37.0%)보다, 계층별로는 하층(43.8%)·중간층(44.6%)보다 상층(52.7%)에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의 50.6%가 북한주민이 더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예상한 반면, 중간집단은 40.2%, 하위집단은 27.6%에 머물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북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는 응답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42> 남북한 주민 심리적 혼란 비교: 변인별

(단위: %)

		남한주민이 훨씬 많이	남한주민이 더 많이	비슷한 정도	북한주민이 더 많이	북한주민이 훨씬 많이
교 급	고교생	10.1	10.3	42.5	27.4	9.6
	대학생	4.9	4.5	35.8	40.2	14.5
계 층	하 층	10.0	9.4	36.8	31.8	12.0
	중 간	7.8	7.2	40.5	33.7	10.9
	상 층	3.0	5.4	38.9	36.9	15.8
통 일 지향성	하 위	19.4	13.4	39.6	15.7	11.9
	중 간	10.9	9.6	39.3	27.6	12.6
	상 위	4.3	5.8	39.3	38.7	11.9

통계치: 교급 $\chi^2=44.92^{***}$; 계층 $\chi^2=15.54^*$; $\chi^2=70.88^{***}$

(나) 부모세대와의 비교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인 혼란이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32.8%)과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31.4%)이 모두 3할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17.1%)이 그 다음이었으며,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9.8%)과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8.1%)은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41.2%)과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40.9%)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3> 남북한 청소년 심리적 혼란- 부모세대와의 비교
(단위: 명, %)

	빈도	비율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90	8.1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366	32.8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200	17.9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350	31.4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109	9.8

비고: N=1,115

하위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45.1%)이 더 많았지만, 여자는 반대로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46.9%)이 다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소 많은 편이었다(각각 42.8%, 39.1%).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중간·하위집단은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많았지만(각각 46.9%, 48.1%), 상위집단은 부모세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다수였다(45.2%).

<표 V-44> 남북한 청소년 심리적 혼란- 부모세대와의 비교: 변인별

(단위: 명, %)

		훨씬 낮은수준	낮은수준	유사한수준	높은수준	훨씬 높은수준
성 별	남 자	9.5	35.6	18.6	28.1	8.2
	여 자	6.4	29.6	17.1	35.2	11.7
교 급	고교생	10.4	28.7	19.7	30.6	10.6
	대학생	5.7	37.1	16.1	32.2	9.0
통 일 지향성	하 위	11.3	21.1	19.5	28.6	19.5
	중 간	6.7	25.5	20.9	38.5	8.4
	상 위	8.0	37.2	16.6	29.6	8.5

통계치: 성별 $\chi^2=14.60^{**}$; 교급 $\chi^2=16.69^{**}$; 통일 $\chi^2=37.68^{***}$

(3) 갈등·혼란 극복방안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주민들간에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중 어느 쪽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72.3%)고 응답하였고,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21.2%)가 전체 청소년의 1/5 수준인 반면,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6.5%)는 소수에 머물렀다.

<표 V-45> 갈등·혼란의 극복방안

(단위: 명, %)

	빈 도	비 율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230	21.2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71	6.5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786	72.3

비고: N=1,087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한의 양보를 강조하는 청소년의 비율에서 남자(27.7%)가 여자(13.7%)를 월등하게 상회하였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고교생에 비해 남한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각각 23.9%, 18.5%).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의 24.3%가 남한이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하위집단은 모두 2할 미만에 머물렀는데(각각 15.4%, 13.0%), 특히 하위집단에서는 북한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8.3%에 달하여 중간·상위집단의 응답률(각각 8.4%, 3.7%)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V-46> 갈등·혼란의 극복방안: 변인별

(단위: %)

		남한주민이 더 양보해야	북한주민이 더 양보해야	남북한주민이 동등하게
성 별	남 자	27.7	7.9	64.4
	여 자	13.7	5.0	81.4
교 급	고교생	18.5	8.9	72.6
	대학생	23.9	4.1	72.0
통 일 지향성	하 위	13.0	18.3	68.7
	중 간	15.4	8.4	76.2
	상 위	24.3	3.7	72.0

통계치: 성별 $\chi^2=39.40^{***}$; 교급 $\chi^2=13.27^{**}$; 통일 $\chi^2=49.96^{***}$

라. 통합 이후의 국가·사회체제

(1) 국가상징·체제문제

(가) 국기 문제

실질적 통합단계 이후 출현할 통일국가의 국기가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에 달하였고 (53.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는 청소년도 45.4%에 이르렀다 (45.4%). 반면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1.3%). 새로운 국기 제정을 원하는 응답률이 상당수에 달한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 이후 전개될 체제논의에서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47> 통합 이후의 국기

(단위: 명, %)

	빈도	비율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	596	53.3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15	1.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	508	45.4

비고: N=1,119

통일 이후 국기 제정 문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계층·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과반수(58.0%)가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은 새로운 국기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49.8%)이 다수였다. 계층별로는 중간층은 태극기의 응답률이, 상층은 새로운 국기의 제정을 선택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중간집단은 태극기를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상위집단은 태극기보다는 새로운 국기 제정의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V-48> 통합 이후의 국기: 변인별

(단위: %)

		태극기가 되어야	인공기도 무방하다	새 국기를 제정해야
교 급	고교생	58.0	0.9	41.1
	대학생	48.4	1.8	49.8
계 층	하 층	50.2	1.0	48.8
	중 간	57.3	1.1	41.5
	상 층	44.8	2.5	52.7
통 일 지향성	하 위	62.4	0.0	37.6
	중 간	65.1	1.3	33.6
	상 위	47.7	1.6	50.7

통계치: 교급 $\chi^2=11.36^{**}$; 계층 $\chi^2=12.64^*$; 통일 $\chi^2=28.49^{***}$

(나) 국호 문제

통일된 국가의 국호 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60.4%), 이어서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38.5%)가 4할 대였으며,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머물렀다(1.1%). 청소년들이 국기보다는 국호 문제에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9> 통합 이후의 국호

(단위: 명, %)

	빈도	비율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677	60.4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12	1.1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	431	38.5

비고: N=1,12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계층·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67.5%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대학생의 응답률(53.1%)를 상회하였으며, 계층별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하여 상층(58.6%)·하층(53.7%)에 비해 중간층이 가장 높은 응답률(64.0%)을 나타내었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대한민국”의 응답률이 하위집단·중간집단이 7할대(각각 69.4%, 71.4%)에 달한 반면, 상위집단은 55.2%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대한민국”의 응답률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50> 통합 이후의 국호: 변인별

(단위: %)

		대한민국을 사용해야	북한국호도 무방하다	새 국호를 제정해야
교 급	고교생	67.5	0.7	31.8
	대학생	53.1	1.5	45.5
계 층	하 층	53.7	1.7	44.6
	중 간	64.0	0.7	35.3
	상 층	58.6	1.5	39.9
통 일 지향성	하 위	69.4	3.0	27.6
	중 간	71.4	0.8	27.7
	상 위	55.2	0.8	44.0

통계치: 교급 $\chi^2=24.80^{***}$; 계층 $\chi^2=10.56^*$; 통일 $\chi^2=32.06^{***}$

(다) 경제체제

통일 이후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본주의·사회주의·혼합경제체제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에 달하였고(50.3%),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도 4할을 상회(44.2%)한 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5.5%).

<표 V-51> 통합 이후의 경제체제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	562	50.3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62	5.5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494	44.2

비고: N=1,118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계층·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53.6%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고교생의 응답률(47.0%)을 상회하였다. 계층별로는 상층·중간층 청소년의 과반수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반면(각각 53.2%, 51.1%), 하층은 46.6%로서 절반에 못미쳤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자본주의 응답률에서 하위집단이 62.7%로서 가장 높았고, 중간층이 54.6%로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상위집단은 46.5%로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자본주의의 응답률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52> 통합 이후의 경제체제: 변인별

(단위: %)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도 무방	혼합경제 체제로
교 급	고교생	47.0	8.1	44.9
	대학생	53.6	2.9	43.5
계 층	하 층	46.6	10.5	42.9
	중 간	51.1	3.7	45.1
	상 층	53.2	3.4	43.3
통 일 지향성	하 위	62.7	8.2	29.1
	중 간	54.6	3.4	42.0
	상 위	46.5	5.8	47.7

통계치: 교급 $\chi^2=16.14^{***}$; 계층 $\chi^2=19.84^{**}$; 통일 $\chi^2=20.17^{***}$

(라) 정치체제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한이나 북한 정치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가 55.5%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4할 수준인 반면(42.4%),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2.1%). 청소년들은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체제는 제3의 대안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V-53> 통합 이후의 정치체제

(단위: 명, %)

	빈도	비율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475	42.4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	24	2.1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622	55.5

비고: N=1,121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교급·통일지향성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급별로는 남한의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36.8%)보다 고교생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남한의 정치체제 응답률이 하위·중간집단에서 과반수를 상회(각각 54.5%, 51.5%)하는 반면, 상위집단은 37.1%에 불과하였고 새로운 체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60.6%로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른 변인에서는 남한의 정치체제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계층별로는 하층보다는 중간·상층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54> 통합 이후의 정치체제: 변인별

(단위: %)

		남한의 정치체제로	북한의 체제도 무방	새 체제를 채택해야
교 급	고교생	47.7	2.8	49.5
	대학생	36.8	1.5	61.7
통 일 지향성	하 위	54.5	0.7	44.8
	중 간	51.5	2.5	46.0
	상 위	37.1	2.3	60.6

통계치: 교급 $\chi^2=17.78^{***}$; 통일 $\chi^2=25.79^{***}$

(2) 청소년 정책과제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3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단계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정책에 대하여 7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정책과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91.8%), “남북한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91.1%),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91.1%),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91.1%),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90.2%),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90.0%)의 6가지로서 9할 이상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남북한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는 학교의 설립·운영”(89.3%), “남북한의 유사 청소년단체들을 통합하여 운영”(87.1%), “북한교사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86.9%), “북한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86.0%), “남북한 청소년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 설치”(83.7%), “남한교사들을 북한지역 학교에 배치하여 북한학생 교육”(82.5%)에 대하여 8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남한 청소년지도자들을 북한지역에 배치하여 북한 청소년 지도”(79.9%)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표 V-55> 통합 이후의 청소년 정책과제

(단위: %)

	전혀 불필요	필요 없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	2.1	8.0	61.5	28.5
북한교사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2.0	11.1	59.8	27.1
남한교사들을 북한지역 학교에 배치하여 북한학생 교육	2.3	15.2	63.8	18.7
남북한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	2.1	6.8	56.8	34.3
남북한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는 학교의 설립·운영	2.1	8.6	58.0	31.3
남북한 유사 청소년단체들을 통합하여 운영	2.0	11.0	64.6	22.5
북한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1.9	12.1	62.9	23.1
남한 청소년지도자들을 북한지역에 배치하여 북한 청소년 지도	3.0	17.1	62.2	17.7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	1.8	7.1	56.7	34.4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1	7.7	58.9	31.3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	2.0	6.9	55.7	35.4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2.2	6.0	57.5	34.3
남북한 청소년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 설치	3.1	13.1	56.7	27.0

(3) 통합 이후 국가의 위상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리라 예상하는지를 약화-향상의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다”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0.4%), 다음으로 “현재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27.7%),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11.3%),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다”(8.2%)의 순이었으며, “현재보다 훨씬 약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8할에 이르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부정적으로 예상한 청소년은 1할 수준에 불과하였다(10.6%).

<표 V-56> 통합 이후 국가의 국제적 위상

(단위: 명, %)

	빈도	비율
현재보다 훨씬 약화될 것이다	27	2.4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다	92	8.2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127	11.3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다	564	50.4
현재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	310	27.7

비고: N=1,120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교급·통일지향성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고교생보다 낙관적인 전망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남 80.2%, 여 75.5%; 고 73.6%, 대 82.5%).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의 86.7%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간집단은 7할 수준에 머물렀고(70.3%) 하위집단은 44.0%로서 과반수에도 못미쳤다.

계층별로는 상층·하층에 비해 중간층 청소년들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률이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57> 통합 이후 국가의 국제적 위상: 변인별

(단위: %)

		훨씬 약화될것	약화될것	현재수준 유지	향상될것	훨씬 향상될것
성 별	남 자	1.8	8.3	9.7	47.2	33.0
	여 자	3.1	8.2	13.2	54.1	21.4
교 급	고교생	3.9	10.4	12.1	46.2	27.4
	대학생	0.9	6.0	10.5	54.6	27.9
통 일 지향성	하 위	11.2	19.4	25.4	32.8	11.2
	중 간	2.9	10.9	15.9	54.4	15.9
	상 위	0.5	5.4	7.4	52.1	34.6

통계치: 성별 $\chi^2=21.08^{***}$; 교급 $\chi^2=21.29^{***}$; 통일 $\chi^2=170.31^{***}$

3. 요약 및 논의

가. 조사결과 요약

(1) 통일·교류 협력관

(가) 통일관

평소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7할을 상회하여(73.6%) 관심이 없다는 응답(26.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이 통일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25.6%,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55.4%로서 전체의 8할 이상(81.0%)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중에서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이 63.7%로서 다수였고, 북한 체제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을 예상하는 청소년이 31.2%였으며 전쟁을 통한 통일(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우발적인 전쟁)을 예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였다.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예상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83.6%)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나) 남북한 교류·협력관

현재 남북한간에 전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청소년(51.2%)과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48.8%)이 비슷한 분포

를 나타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 대학생보다는 고교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협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유일하게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2.2%),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이 4할대로서 그 다음이었으며(43.3%),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25.6%)과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22.9%)는 모두 2할대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앞으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75.0%),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16.8%)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8.2%)는 소수에 머물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확대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84.2%에 달하여, 현상 유지를 원하거나(10.4%),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5.4%)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2) 통합단계의 남북교류

(가) 북한 왕래의사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5가지의 예문을 제시하고 행동의사를 질문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가 88.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61.8%),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38.6%),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25.9%)였으며,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19.8%).

(나) 북한주민 접촉의사

청소년이 느끼는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을 측정하기 위해 Bogardus의 척도를 원용하여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3.9%에 달하였고,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은 89.9%였으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도 55.0%에 이르렀다.

북한주민을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중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북한주민(청소년)을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을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이 중·하위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이 북한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북한주민이 93.6%로서 유일하게 9할을 넘었고, 이어서 “중국”(88.4%), “미국”(87.1%), “러시아”(86.6%), “일본”(83.6%)의 순이었다.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역시 북한이 89.9%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84.9%), “중국”(83.4%), “러시아”(81.9%), “일본”(80.8%)의 순이었다.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북한이 55.0%로서 다른 4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으며, 이어서 “일본”(40.6%), “중국”(35.3%), “미국”(34.8%), “러시아”(30.3%)의 순이었다.

(다) 상호왕래·접촉의 영향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우리사회 부문(5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모든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향상될 것이다) 비율을 비교해보면, “문화·예술의 발전수준”이 86.6%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들의 인권·시민권”(70.9%), “경제적 성장과 발전”(64.3%), “정치체제의 민주화”(56.4%), “국민들의 생활수준”(48.0%)의 순이었다.

(3) 통합단계의 갈등과 혼란

(가) 사회적 갈등·대립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에 대하여 “사고방식상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청소년이 91.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89.3%),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87.9%),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86.4%), “생활관습상의 차이”(83.5%)를 지적한 청소년이 8할을 상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54.9%), “종교·신앙관의 차이”(53.8%)를 지적한 청소년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현재 남한사회 내부의 지역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54.1%)한 반면,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19.1%).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하위집단보다는 중·상위집단 청소년들이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44.0%로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27.4%)보다 많았지만,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도 3할 수준으로서(28.5%)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한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간의 갈등이 부모세대간의 갈등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세대간의 갈등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48.2%로서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는 청소년(35.6%)보다 많았다.

(나) 사회적 혼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5.7%에 달하여 남한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하는 청소년(15.1%)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일수록 북한주민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을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41.2%)과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40.9%)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대학생보다는 고교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부모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72.3%)고 응답하였고,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21.2%)는 응답이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6.5%)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남한 주민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 통합 이후의 사회체제

(가) 국가상징·체제문제

실질적 통합단계 이후 출현할 통일국가의 국기에 대해서는, “대극기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였고(53.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5.4%에 이른 반면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했다(1.3%). 새로운 국기의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교급별로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된 국가의 국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0.4%),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38.5%)가 4할대였으며,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1.1%). 교급별로는 대학생, 계층별로는 하위계층,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 청소년들일수록 새로운 국호의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통일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가 과반수에 달하였고(50.3%),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도 4할을 상회(44.2%)한 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5.5%). 자본주의 체제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중·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 통일지향성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가 55.5%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4할 수준이 반면(42.4%),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2.1%). 교급별로는 대학생, 통일지향성 정도별로는 상위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새로운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나) 청소년 정책과제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두 13가지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는데,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91.8%), “남북한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91.1%),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91.1%),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91.1%),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90.2%),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90.0%)의 6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9할 이상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통일국가의 국제적 위상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응답(78.1%)한 반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은 1할 수준에 불과하였다(10.6%).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통일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 논의와 시사점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적·점진적 방식으로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3.7%)이 평화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전쟁을 통한 통일을 예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5.0%)에 머물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할에 못미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16.4%). 그러나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5년·10년 이

내)보다는 20년 이내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평화통일의 신념이 확산되어 가고는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우리사회가 통일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부문에 비해 청소년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각 부문별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문화 부문은 6할, 경제부문을 4할 이상의 청소년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청소년은 2할 수준에 불과하였다(22.9%). 또한 앞으로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84.2%로서 남북한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원하는 응답비율(75.0%)을 크게 상회하였다.

청소년부문은 문화·예술부문과 더불어 남북한간에 갈등과 이견의 여지가 적은 비정치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남북 교류·협력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많은 기대감과 참여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에 대하여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다. 자유왕래가 실현될 경우 북한지역에 거주하거나 북한주민을 배우자로 맞이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한다.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할 경우, 북한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청소년이 6할 이상,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는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

을 이웃 또는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청소년이 9할을 넘고 있으며, 결혼 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여(55.0%), 일본인, 미국인에 대한 긍정응답률(각각 40.6%, 34.8%)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오랜 동안 한반도를 지배해 온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북한·북한주민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대적인 선입견으로부터 점차 해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지역갈등이나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대립이 현재의 지역갈등이나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지역갈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54.1%) 낮을 것이라는 응답은 4할 대에 머물렀고,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44.0%)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27.4%)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주민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이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며, 남한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주민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33.7%)이 남한주민들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7.6%)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이에 따라 실질적 통합단계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주민(6.5%)보다 남한주민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21.2%)는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겪게될 사회적 갈등과 대립, 정신적·심리적 혼란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81.0%)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통일에 반대하는 청소년은 2할에도 못미쳤다. 또한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할 수준에 달하는 반면(78.1%), 약화되리라고 예상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10.6%)

청소년들은 통합 이후의 국가상징·체제문제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남북한의 사회통합 이후 제기될 국가상징·체제문제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통일국가의 국기·국호문제에 있어서 “태극기”(53.3%), “대한민국”(60.4%)이 되어야 한다는 청소년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국기(45.4%), 새로운 국호(38.5%)의 제정을 원하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통일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4할 대에 이르렀고(44.2%), 정치체제에서는 남한의 정치체제(42.4%)보다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채택을 원하는 청소년(55.5%)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청소년들의 국가관·사회관이 외세에 의해 고착된 편협된 분단구도에서 벗어나 남·북한을 포괄하는 거시적·국제적 관점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I.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방안은 반드시 그 종료시점이 실질적 통합단계에 한정되기보다는 통일국가 단계에서까지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1.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실질적 통합단계가 설정하는 있는 상황은 완전한 통합을 위한 남북한 정부간의 법·제도적 합의만 남겨 놓은 단계로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등이 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영유하기 위한 터반이 갖추어진 단계이다. 비록, 삶의 가치, 내용, 방법 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갈등의 요소는 다분히 내포되어 있을지라도 체제분단에 의한 이동과 접촉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는 남아 있을지라도 각 부분별로 기초적 수준의 합의된 법·제도는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진정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의 완성을 어떻게 유인하여 합일점을 형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제도를 매개로 그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즉,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제도의 강력한 실행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도가 높거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를 제도적 장치로 흡수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만이 될 수 없으며, 가급적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열악한 부분은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으로 그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기초생활보장, 일탈행위의 예방 및 교정 등과 같은 역할은 국가의 절대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 실행주체는 부분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위임될 수 있겠으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업무조정 등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 단계를 성공적으로 매개하는 중간단계로 이 단계에서 실행되는 많은 정책적 노력들은 통일국가 단계에서 그 결과적 효과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초래되는 많은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혼란은 그들이 자연 치유능력을 가질 때까지 방관하기보다는 관련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마련된 대안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이질화된 요소를 중심으로 ‘같음’을 정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미래지향적 가치로 새로운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이질화의 내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상이한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그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세대는 새로운 환경과 가치에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해 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향후 사회변동의 순기능적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이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설정되는 세계사적 환경의 조류에 부응하는 세계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다문화적 정향의 새로운 통합가치가 교류·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국가와 시민사회차원의 지원은 주로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먼저, 남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노력들

은 화해·협력단계에서부터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이 전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문제·비행의 예방 등과 관련된 노력들은 주로 북한 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문제는 북한 지역 청소년만을 집단화하여 그 지원이 집중될 경우 또 다른 차별화의 형태로 비추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 청소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또래집단의 긍정적 리더십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 종료시점이 통일국가의 진입단계에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의 사회통합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역동적 미래지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 단계의 우리 청소년만을 보더라도 자기만의 색깔 내기에 몰두하는 관계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문화적 차이와 단절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하겠다.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북한청소년이라는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거대 타자가 등장함에 따라 그 갈등의 분화 양상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교류·협력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청소년층의 분화 현상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소재는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축제, 생활체육 등과 같은 소재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인지도자의 역할은 조력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도화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가. 남북한 청소년정책·기구·수련활동 통합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시대 상황은 통일실현까지의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통일방안을 도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하며, 남북간 통합의 논의와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술·문화·언론·체육·종교 등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활성화되어 이른바 남북이 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핵심목표는 어떻게 남북간·지역간·계층간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통일된 국가의 청소년에게 일체감을 갖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1) 남북 청소년관련 정책 및 기구의 일원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각각 독자성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단일 국가로의 통합을 전제로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 청소년 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청소년 정책 책임자들은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통일 국가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 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독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지침에 의거하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양국정부가 합의한 단일한 기구표에 의거 청소년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나가는 과정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2) 남북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통합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기관의 통합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의 경우 청소년단체 및 기관이 半官半民의 성격을 띠거나 민간부문의 비영리, 비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인 반면, 북

한국의 경우 대체로 로동당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연합 단계부터 특히, 북한에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이 정부와 로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중국의 경우처럼 YMCA, YWCA 등 외국의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소요 자본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남북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통합은 「남북연합 청소년단체·시설협의회(가칭)」를 설치하여 남한과 북한의 모든 청소년단체·시설간의 연대와 통합력을 높인 다음 기관의 통합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청소년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시·구립 청소년시설의 경우 (가칭)남북연합의 행정자치부서에서 단일한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의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남한에서는 우선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중심이 되고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협의회, 세종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 정부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 및 수련활동 방안 마련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의 교육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화해·협력 단계에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육과정(안)과

수련활동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 및 수련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단일한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안과 수련활동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적인 통일 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법은 우선 상당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의 각급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지도자 양성체계 마련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평화교육과 타문화 이해 교육이 통일교육의 중요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통일 관련 수련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관련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도할 전문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남과 북의 청소년기관에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평화와 통일 관련 수련활동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평화·통일 청소년 특화시설을 각 시·도 별로 설치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 및 수련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6) 남북 청소년 ‘전국 학습여행’(national study tour)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청소년 특히,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의 남북 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의 주요도시인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원산, 함흥, 신의주에 청소년 시설과 숙박시설을 완비하여 남한의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학습여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남한의 주요 도시와 문화유적지, 국립공원에도 북한의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하며 남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국영 유스호스텔'을 체인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청소년들에게 너무도 엄격한 청소년 숙박기준을 재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한의 청소년들이 호텔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남북한 청소년 관광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다양한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7) 북한 전역에 (가칭)「청소년 정보문화센터」와 「인터넷 카페」 운영

우선 남한의 청소년과 북한 청소년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대도시에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와 같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중·소도시에는 청소년 인터넷 카페를 설치·운영하여 북한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8) 남북한 청소년 의회 설립

남한과 북한이 청소년 인구비례로 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의원들이 상정한 의제를 가지고 매년 10월 서울과 평양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정기총회를 열어 교육, 문화, 환경 등 청소년과 연관된 법안을 제정하게 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용 가능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만약, 유럽과 같은 청소년 의회가 실행될 경우 통일의 경로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보다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북한 청소년을 위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아카데미 운영

북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은 자본주의에서의 고객에 대한 친절과 감사에 대해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전부터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기업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열풍이 불었다고 한다.

향후 남북연합 단계에서부터 실질적 통합단계에 이르기까지 북한청소년들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련체제 붕괴 이후 신생 러시아에서처럼 ‘경영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설 및 커리큘럼 마련도 필요하다.

나. 자립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기반 구축

실질적 통합단계는 새로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직업(진로)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들 수 있다. 우리가 통일국가를 달성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7,000만 명에 이르게 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인력개발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기존의 인력개발정책을 분석·검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과정 및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남북한의 각종 통계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산업과 노동력 수준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지역에 있는 산업시설에 양질의 산업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면 실질적 통합단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지역 청소년 인

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 청소년을 현지에서 교육훈련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1)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교육의 구조적·질적 발전 모색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내재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상황 예측을 통한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전후의 각종 변수를 파악·검토·분석하여 재원의 정확한 배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요원의 확보와 실질적인 조사·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충분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청소년의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추세와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진로)교육 정책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은 산업구조·산업시설과 직업의식·직업몰입도, 학습경험·훈련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동·발전하는 산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내용을 개발·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은 구조적 개선과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규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사내교육·성인교육·통신교육·직업훈련·직업지도·진로지도 등 공개적이고 탄력적인 보충제도를 통해서 남북한 청소년 모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 다양한 교과과정의 제공, 남북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특별과정의 제공,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인정제와 학점은행제의 실시 및 자격의 상호인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직업능력의 질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고, 남북간·지역간·도농간·남녀간·계층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등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취득 자격의 인정, 교사 및 직원의 자격, 학생과 교사의 비율, 교육기자재 및 시설 등의 질과 종류, 학습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은 북한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정 및 자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일 비용이었다. 즉 통일은 각 영역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직업교육훈련의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예산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재정 혹은 기금의 확보·적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기업체, 종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 및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초·중등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해시키는 노력 강화

그동안 남북한 양 체제에서 학습한 청소년들의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사고와 태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청소년들은 자본주의와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일반교육에서 기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현대 문명의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기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초·중등단계에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초보교육은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각 지역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초보적인 직업교육은 통일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른 교육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기술, 상품을 소개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의 시야를 넓이고, 이론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실기를 통해서 학습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직업기술교육과 정규교육제도 이외의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거주

하는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며, 이들이 새로운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직업기술교육 및 직업지도·진로지도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진로)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미 북한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교육에서의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기법과 실험접근 방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계획수립방법과 의사결정방법에서 경험이 동원되어 학습자에게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생산작업의 조건 등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사회의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과 여가선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3) 남북한 청소년 모두에게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 강화

통일시대 계속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충분한 홍보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남북한 청소년 모두가 이용 가능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는 물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교육으로 통일시대의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특히, 북한 지역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경험과 이미 습득한 전문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수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한 개인 혹은 집단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실질적 통합단계의 직업지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은 남북한 모든 청소년에게 직업과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남북한 혹은 지역적·기관별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 개선 노력은 직업교육훈련·상담·취업·취업알선 등의 업무간에 긴밀한 상호 연락망과 협조가 있어야 하며, 변화되는 직업환경과 생애에서의 고용·경력개발 및 발전 기회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취업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과 계속교육훈련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직업지도·진로지도 및 직업의식의 개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특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교육으로서 중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및 직업·진로에 관한 지도는 현장성을 강조하여 현장견학 및 기초적인 실습 등을 통한 광범위한 수준에서 실시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선택의 궁극적 필요성과 합리적인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제도 이외의 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청소년에게는 교육훈련의 유형을 자율적·능동적으로 선택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직업준비 과정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직업지도는 열려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필요한 학력 및 앞으로의 평생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지도하고, 교육훈련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청소년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남북한 청소년 학습자 중심의 직업(진로)교육정책 마련

모든 직업기술교육훈련과정에서 학습방법은 교육훈련 내용과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모든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직업(진로)교육에 사용되는 학습방법과 자료는 교육받는 청소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

의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용어를 통일한 새로운 학습교재의 발간 및 보급이 필요하다. 새로 발간되는 교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교류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습용 기계 및 장비는 사용자의 수준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의 지원과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결과 평가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 청소년 학습자의 교육훈련결과는 평가를 통해서 그 수준과 개선 방향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개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훈련평가는 흥미·태도·상대적인 진도 등을 고려하여 적성과 적응력·시험 및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도 자신의 진도에 관한 평가에 참여하여 학습상의 문제나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환류(feed-back)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6)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제도 구축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능력과 자격을 갖춘 교사 및 행정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 양성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정 담당자 역시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소양과 경력을 갖춘자를 선발하여 이에 적합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문제·비행 예방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청소년들에게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문제와 비행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과정이 얼마나 완만하게, 혹은 급격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화적 혼재,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 북한청소년들이 겪게 될 아노미적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며,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타문화를 수용해나가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청소년들의 문제와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변화의 시기에 다양한 하위문화적 특성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유연한 사회분위기 또한 북한청소년의 일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청소년 문제·비행 예방 프로그램

(가) 미디어 교육 실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개방된다. 미디어의 교류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남북한 사이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채널로 기능하여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거부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력이 성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청소년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과 모방은 남한청소년의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북한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북한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서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문화의 실태에 대한 이해, 북한청소년의 삶과 문화와의 차이, 남한사회에서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 방법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 올바른 소비교육 실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광고와 유행은 인간의 소비욕망을 자극하고 소비행위를 창출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미디어의 개방은 북한청소년에게는 상품광고와 유행에의 노출을 의미한다.

남한사회에서 기업들은 점차 10대 청소년층을 자신들의 주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며 이들의 구미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인기연예인이나 스타들을 동원하여 유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훨씬 뛰어넘는 청소년들의 소비욕구는 결국 청소년비행을 낳고 있듯이, 북한사회에서도 미디어를 통하여 북한청소년들이 상품광고와 유행에 여과 없이 노출된다면 소비욕구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비행 현상은 북한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사회에서 상품광고와 유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문화활동 육성

북한청소년들의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 성숙도를 높일 것이며, 결국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한 유행과 광고는 청소년들의 기호와 취향을 집단화시켜왔다. 집단화된 청소년의 소비욕구는 '비슷한 개성'을 유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유사 상품들을 집단적으

로 소비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청소년 각자가 몰개성적 소비행위를 통하여 또래집단의 일원으로서 귀속감을 갖도록 강요하였다.

북한사회에서 북한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는 비상업적이고 개성적인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북한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행과 광고에 의한 자극을 적절하게 걸러내며,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 북한 성인·청소년의 세대간 이해 프로그램 운영

통일의 과정이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간직 하려는 기성세대들의 보수적 태도는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관한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많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잘 수용하는 청소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에서도 세대간 갈등의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포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세대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을 수용하되,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상호노력이 필요하며, 가족내에서의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세대간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타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다.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혹은 민간단체간의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를 통한 타문화 체험의 기회는 남한청소년의 생활과 문화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남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홈스테이(home stay), 학교 및 직장방문,

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청소년 문제·비행 교정 프로그램

(가) 사법제도 정비

비행청소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심각성의 정도가 낮고,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갱생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남한사회의 경우 예를 들면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수용과 변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엄격한 법처벌의 적용은 결국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재비행을 증가시키며, 범죄성인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평생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통일과정의 시기에 매우 필요하다.

(나) 청소년 약물중단 지원센터 설립·운영

청소년비행의 유형 중에서 약물남용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치료와 교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 지역에도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약물남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유형에 따라 약물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여 약물에 대한 접근과 호기심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약물중단 지원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남한사회의 단주·금연 청소년모임과 만남을 주선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청소년쉼터 운영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 빈곤으로 인하여 집을 뛰쳐나와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줄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인한 기출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으로 인하여 이미 가족이 해체되어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상담, 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은 매우 필요할 것이다.

(라) 교정·보호시설에 직업훈련센터 운영

빈곤이나 비행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업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곤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보호시설(남한사회에서의 소년원,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시설)에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학업능력이 뒤떨어지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정보제공,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고 적성에도 맞는 업종을 선정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보호시설에서 나간 뒤에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직업훈련과 상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은 단순히 정치·경제·문화 등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질을 제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제도는 그 기능과 성격상 분단 이후 교류 및 협력의 부재,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 그리고 이질화된 민족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국가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에게는 최소한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이며,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에의 적응, 경제적 자립,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 등을 핵심 영역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새로운 청소년 복지정책 수립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급격하게 북한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강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제도의 특례적 적용방안 등 수많은 과제들이 부각될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대규모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과 같은 대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그 당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자율적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도 남북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복지정책의 경우 국가 지원은 빈곤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국가는 청소년복지를 국가의 책임하에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통합 방안뿐만 아니라 남한지역 청소년들의 북한지역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준비,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통일 의식 고취 방안도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2) 북한지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보장제도 적용대상에 있어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아직 부분적으로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고, 북한의 경우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 개방화 과정에서 이들 계층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인 통합단계에서 기술과 직업배경이 취약한 이들 계층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선별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3)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 구비

북한지역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남한으로 이동하는 가출 혹은 무연고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직된 북한교육의 영향으로 상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남북간의 이질적 언어사용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의 무관심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학습진도를 따라잡기 힘들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탈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문제에서부터 남한의 사회제도, 문화,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문제 등

많은 도전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혹은 정착의 문제는 분명 청소년복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초단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 혹은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진로지도를 해 줄 비공식적 지지체계(후견인제도 혹은 또래멘터링 프로그램 강화)와의 연결, 정착지원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의 개발과 동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남북한청소년교류정보센터(가칭)」의 설치·운영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당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남북청소년들 간의 사회, 문화, 심리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가치관 혼란이 예상된다. 남한청소년들도 사회적 불안정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감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남한지역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제공받고 있으나 정확하지 못한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많으며, 북한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만한 자원이나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청소년교류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언어, 생활, 음식, 영상문화, 학교생활, 전통문화체험, 통일문화만들기 등 테마별로 남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울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는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북한간 공동활동 경험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5)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재정비와 인력 및 시설 확대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보장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

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일정한 시기까지는 국고부담에 의한 의료보호 수준을 확대·적용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소득상태가 호전될 경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성적인 영양결핍 등으로 북한지역의 청소년들은 남한지역 청소년들보다 키와 몸무게가 적고 전반적으로 발육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속적인 영양공급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원이다. 이와 함께 통합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하여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당분간 긴급복지정책에 기초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수요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북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성교육(유해매체), 청소년 사이버중독 예방, 청소년폭력 예방 등의 학교사회사업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남북한 청소년 부모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 해소 방법을 교육할 수도 있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 남북한 가정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 교사 교류를 통해 학습지원 서비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특성화된 자원봉사 혹은 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통일리더단”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 활동 전개, 통일문화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 남북한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국제사회에 독도와 동해문제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또래 상담(마니또) 혹은 또래학습지원(1대1)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북한 청소

년들의 춤, 노래, 체육대회 등의 어울마당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소장품들을 내놓아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베품시장 등의 지역사회 행사를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7) 북한지역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제공

실질적 통합단계 초기에 가졌던 환상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 모두 적응의 현실을 경험하고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 정착이 쉽지 않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가족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새로운 사회 적응에서의 갈등, 문화적 차이, 세대차이, 부모에 대한 반발심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 통합단계 초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관, 상담기관 등과 같은 기존의 민간복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9) 북한지역 청소년복지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

청소년복지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남한은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청소년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문인력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통합에 있어서 북한지역 청소년복지 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종교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으로 연결되는 민간조직을 함께 묶어서 북한지역 청소년들의 장기적이고 개별화된 복지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마.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한이 각종 수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일국가 이전 단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제 역시 이 단계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물론, 나아가 통일의 최종단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사회문화공동체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실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북한의 청소년이 궁극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통일한국의 교양인으로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실시하는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통일문화⁵³⁾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통합교육체계 형성과 통합교과서 채택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현행 교육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도 통합교육체계의 형성은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통합교육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의 현행 6·3·3·4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교육체계의 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통합교과서와 통합커리큘럼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과서는 초·중·고 교과서의 내용을 통합하여 남북한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공동교과서를 의미한다. 남북한의 청소년들은 통합교과서를 통

53) 통일문화의 개념과 의의 및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에 관해서는 길은배·임순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참조.

해 그동안 상이한 시점에서 바라보았던 역사적 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인식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합교과서는 ‘역사의 회복 및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향의 ‘다름’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같음’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교과서가 담는 내용은 주체성, 평화성, 민주성, 시민성 등의 가치를 고양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과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동구상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남북한 청소년의 음식축제 개최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정(情)을 매개로 한 관계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인에 있어서의 음식은 정을 인풋(input)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인에 있어서의 공식(共食)은 공생(共生)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청소년이 음식을 주제로 혹은 소재로 공동행사를 하는 것은 자기의 정을 상대에게 인풋(input)함으로써 그 아웃풋(output)으로서의 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청소년이 각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함께 먹는 남북한 청소년 음식축제는 남북한의 청소년이 행사의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게 한다. 이를 통해 협의의 과정에서의 합의도출의 중요성과 그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대방의 음식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가치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식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적인 일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청소년의 음식축제는 한국과 북한을 오가며 연차적, 혹은 계절별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전통음식과 테마음식 및 창작음식 등을 고려하여 행사를 계획,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음식은 국제적 상품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음식산업을 공동으로 개발, 상품화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음식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재료의 양을 규격화한 통일된 요리법(recipe)의 작성이 필요하면서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음식축제에서는 전통음식의 재조명은 물론, 테마별 아이디어 음식의 창작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3) 각종 동호회 모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남북한 청소년들의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체성의 강화·확산에 점진적이지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취미와 동호회 활동을 남북한을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에서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⁴⁾. 독서동호회, 영화동호회, 연극동호회, 음악동호회, 미술동호회, 탈춤동호회, 사물놀이동호회, 등산동호회 및 기타 체육 종목별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적교류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취미활동이나 동호회활동은 그 모임의 조직화가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등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된 조직화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자기책임 의식과 자유 등의 가치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의 계획 및 실행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의 청소년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체성의 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는 통일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의 구체적인 아이টে็ม으로는 남북한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미술전, 청소년 스트리트 퍼포먼스, 청소년 PC게임전 등을 생각

54) 이러한 취미활동 및 동호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운동의 전개 필요성과 그 개요에 대해서는 길은배 외,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1, 109-111쪽 참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TV프로그램의 상호방영 및 공동제작과 점차적인 범위 확대도 민주적 시민교육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충실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정체성을 고양하는 드라마와 시사 및 자연 다큐멘터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뉴스 등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의 대중매체, 특히 TV와 신문 등은 청소년통일문화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도·시·군 등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제에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량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정의 청소년 동호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함께, 해당 시·군의 자매 시·군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4) 청소년 학교, 청소년 포럼의 개최

청소년 학교, 청소년 포럼은 시민학교, 시민포럼과의 유기적인 연대 하에 일상생활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테마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 학교는 정규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대 하에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통일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청소년 교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청소년 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평화교육, 민주교육, 시민교육에 두어야 하며,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학교 수료증 등을 교부하고, 이를 학교교육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포럼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청소년 자유포럼, 남북한 청소년 인권포럼, 남북한 청소년 평화포럼, 남북한 청소년 협력포럼, 남북한 청소년 역사포럼, 남북한 청소년 미래포럼 등 각각의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구성·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VI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상황으로 법·제도적 국가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 의 전단계이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협력을 공고화하고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며,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와 국가통합 단계의 중간단계로 완충적, 과도기적 단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 성격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자면 남북연합 단계의 공고화 내지는 완성형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통일국가 단계의 진입은 남북간에 법·제도적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그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는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 국가통합 단계의 초기에 걸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때, 가치적·정서적 측면은 반드시 법·제도적 합의를 통한 이행으로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가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을 비롯한 많은 노력들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시작되어 이의 공고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남북 정상간에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그 효과성은 국가통합 단계의 전기부문을 통하여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통합단계는 사안에 따라 국가통합 단계와 중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국가의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갖는 단계의 설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시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관건이 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생활은 너무도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은 이의 성공 여부에 따라 통일국가로의 진입 시점과 이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연합 단계가 성공적인 통일국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지역 구성원들의 이질적,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통일국가 단계로 진입한다 할지라도 남북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형성이 지체되거나 융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미비하다면, 법과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여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류·협력은 통일국가 단계로의 성공적 진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지역 청소년의 교류·협력은 성공적인 완전한 1민족, 1국가, 1정부 ‘통일국가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 형성된 청소년층의 바람직한 통합 태도가, 그들이 향후 성인층으로 성장하여 통일국가단계에서 사회변동의 주체적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단기적 성과를 고려한 일회적 사업형태 보다는 일상적, 실천적, 체험적 성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협력이 막연하게 정의적·추상적 성격을 갖고 추진되는 관계로 청소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정반대의 추진전략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체 문제는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 상황에서는 그 주체가 국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진방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역할이 민간부문에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위치함에 따라 시민사회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면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협의의 차원에서는 개인 대 개인이라는 다분히 사적 영역과 민간단체와 개인, 혹은 민간단체, 그리고 광의의 차원에서는 지역간에 위치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라는 공공적 성격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제도를 매개로 그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열악한 부분은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입으로 그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황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 기초생활보장, 일탈행위의 예방 및 교정 등과 같은 역할은 국가의 절대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존의 이질화된 요소를 중심으로 ‘같음’을 정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미래 지향적 가치로 새로운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국가와 시민사회차원의 지원은 주로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교류·협력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소재는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축제, 생활체육 등과 같은 소재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이라는 문제 설정은 현재의 화해·협력단계부터 완전한 통일국가 이후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단, 교류·협력이라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북한사회라는 카운터파트너를 가진다는 점으로 상대방의 반응과 의지 여부가 주요한 성공의 관건이 되며, 우리 사회내부의 노력 또한 매우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하겠다.

2. 정책제언

가. 남북한 청소년 정책·기구·수련활동 등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핵심목표는 어떻게 남북간·지역간·계층간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통일된 국가의 청소년에게 일체감을 갖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제도적 방안의 모색과 정책 수립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 남북한의 청소년관련 정책 및 기구의 일원화와 함께 청소년단체·기관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통일 이후 청소년 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한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은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통일국가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 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독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지침에 의거하여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단일한 기구표에 의거 청소년 정책을 일원화해 나가는 과정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책개발을 위한 청소년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남북연합 단계부터 특히, 북한에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이 정부와 로동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처럼 YMCA, YWCA 등 외국의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자본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군단위 청소년 시설의 경우 (가칭)남북연합의 행정자치부서에서 단일한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 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 및 ‘평화와 통일’ 교과목 제정과 통합수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특화된 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과 수련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문제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일한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안과 수련활동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곧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될 것이다. 동시에 충실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통일 교과목 제정’이 남북 화해·협력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평화와 통일 관련 수련활동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평화·통일 청소년 특화시설을 각 시·도 별로 설치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 및 수련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양성 과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북한 지역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속적 교류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대도시에 현재 서울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와 같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중·소도시에는 청소년 인터넷 카페를 설치·운영하여 북한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의 주요도시인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원산, 함흥, 신의주에 청소년 시설과 숙박시설을 완비하여 남한의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학습여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남한의 주요 도시와 문화유적지, 국립공원에도 북한의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하며 남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국영 유스호스텔’을 체인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청소년들에게 너무도 엄격한 청소년 숙박기준을 재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남한의 청소년들이 호텔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자립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새롭게 구비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기존의 인력개발정책을 분석·검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과정 및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 청소년 인구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현지 청소년을 현지에서 교육훈련 시켜 현지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교육의 구조적·질적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의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내재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상황 예측을 통한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한 청소년의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추세와 여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정책은 정규교육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사내교육·성인교육·통신교육·직업훈련·직업지도·진로지도 등 공개적이고 탄력적인 보충제도를 통해서 추진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직업능력의 질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고, 남북간·지역간·도농간·남녀간·계층간에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직업(진로)교육 정책은 북한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재정 및 자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초·중등과정에서 직업(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이해시키고, 계속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 양 체제에서 학습한 청소년들의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사

고와 태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청소년들은 자본주의와 직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일반교육에서 기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현대 문명의 변화에 따른 실제적인 기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초·중등단계에서 필요하다. 동시에 통일 사회의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과 여가선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시대 계속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은 북한 지역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경험과 이미 습득한 전문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수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남북한 청소년 학습자 중심의 직업(진로)교육 정책과 이의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직업기술교육 훈련과정에서 학습방법은 교육훈련 내용과 동일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직업(진로)교육에 사용되는 학습방법과 자료는 교육받는 청소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용어를 통일한 새로운 학습교재의 발간 및 보급이 필요하다. 새로 발간되는 교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교류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되는 실습용 기계 및 장비는 사용자의 수준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의 지원과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목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 능력과 자격을 갖춘 교사 및 행정담당자 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북한지역 청소년의 문제·비행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청소년들의 문제와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북한지역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개방된다. 미디어의 교류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남북한 사이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채널로 기능하여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도 있지만, 미디어가 기능하고 활용되는데 바탕이 되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미디어의 교류는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거부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서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문화의 실태에 대한 이해, 북한청소년의 삶과 문화와의 차이, 남한사회에서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 방법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훨씬 뛰어넘는 청소년들의 소비욕구는 결국 청소년비행을 낳고 있듯이, 북한사회에서도 미디어를 통하여 북한청소년들이 상품광고와 유행에 여과 없이 노출된다면 소비욕구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비행 현상은 북한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사회에서 상품광고와 유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북한 성인·청소년의 세대간 이해와 타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통일의 과정이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간직

하려는 기성세대들의 보수적 태도는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관한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에도 영향을 미쳐 보다 많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상호노력의 일환으로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및 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세대간 이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혹은 민간단체간의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를 통한 타문화 체험의 기회는 남한청소년의 생활과 문화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남한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홈스테이(home stay), 학교 및 직장방문, 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북한지역 청소년의 문제·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심각성의 정도가 낮고,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갱생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수용과 변동의 과정에 발생하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엄격한 법 처벌의 적용은 결국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재비행을 증가시키며, 범죄성인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평생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통일과정의 시기에 매우 필요하다.

(4) 북한지역 청소년의 문제·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각종의 청소년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비행의 유형 중에서 약물남용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치료와 교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북한 지역에

도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동시에 빈곤으로 인하여 이미 가족이 해체되어 가출 상태에 있는 북한 지역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상담, 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이나 비행 등으로 인하여 정규학업을 마치지 못한 북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곤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보호시설(남한사회에서의 소년원,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시설)에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실질적 통합단계에 적합한 새로운 청소년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 제도는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에의 적응, 경제적 자립,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 등을 핵심 영역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1) 북한지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통합단계에서 기술과 직업배경이 취약한 청소년 계층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선별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남한으로 이동하는 가출 혹은 무연고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단위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 혹은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진로

지도를 해 줄 비공식적 지지체계(후견인제도 혹은 또래멘터링 프로그램 강화)와의 연결, 정착지원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의 개발과 동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남북한청소년교류정보센터(가칭)」의 설치·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당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남북청소년들 간의 사회, 문화, 심리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가치관 혼란이 예상된다. 남한청소년들도 사회적 불안정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감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남한지역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제공받고 있으나 정확하지 못한 것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많으며, 북한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만한 자원이나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만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청소년교류정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언어, 생활, 음식, 영상문화, 학교생활, 전통문화체험, 통일문화만들기 등 테마별로 남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울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는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북한간 공동활동 경험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북한지역 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재정비 및 시설 확대, 그리고 북한지역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한 시기까지는 국고부담에 의한 의료보호 수준을 확대·적용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소득상태가 호전될

경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 청소년의 만성적인 영양결핍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영양공급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수요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4)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청소년의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성교육(유해매체), 청소년 사이버중독 예방, 청소년폭력 예방 등의 학교사회사업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 부모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모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 해소 방법을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 남북한 가정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 교사 교류를 통해 학습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거나,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특성화된 자원봉사 혹은 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마.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면적·심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실시하는 남북한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 (1) 통합교육체계 형성과 통합교과서 채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초·중·고·대학교에 이르는 교육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의 현행 6·3·3·4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교육체계의 형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통합교과서와 통합커리큘럼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과서가 담는 내용은 주체성, 평화성, 민주성, 시민성 등의 가치를 고양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과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동구상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각종 동호회 모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축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체성의 강화·확산에 점진적이지만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독서동호회, 영화동호회, 연극동호회, 음악동호회, 미술동호회, 탈춤동호회, 사물놀이동호회, 등산동호회 및 기타 체육 종목별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적 교류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의 계획 및 실행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의 청소년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체성의 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는 통일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의 구체적인 아이টে으로는 남북한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미술전, 청소년 스트리트 퍼포먼스, 청소년 PC게임전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청소년의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TV프로그램의 상호방영 및 공동제작과 점차적인 범위 확대도 민주적 시민교육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충실화를 유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공보처. 『통일로 가는 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해설』. 서울: 공보처, 1994년 11월.
- 길은배. 『NGOs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길은배·이종원·최원기.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길은배·임순희.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박기덕. “남북한 정치적 통합모델의 모색”, 박기덕·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5.
- 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2002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송광성.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 문제”, 『남-북한 청소년의 삶과 미래』. 1994년도 한국청소년학회 학술 심포지움, 1994.
- 유석열.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2002협동연구 제1차 워크샵

자료.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함병수·길은배·이종원·최원기.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함병수·이종원 외. 『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서울: 문화
관광부, 2000.

국민일보. 1995.10. 10.

국민일보. 2001. 11. 12.

문화일보. 2000. 5. 29.

세계일보. 2002. 3. 13.

한겨레신문. 2002. 9. 4.

한국일보. 1991. 5. 1.

2. 외국문헌

AGAG, *Projekte im Aktionsprogra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1/92, 1992.

Berliner Zeitung, 1992. 10. 30.

Frankfurter Rundschau, 1992. 11. 4.

Merkael, A. *Herausforderung der Jugendpolitik in Gewalt Chancen
und Grenzen der Jugendarbeit*, AGAG.3/93, 1993.

-----, *Ein Jahr AGAG: Erste Ergebnisse und Erfahrungen*, 2/93, 1993.

-----, *Nachqualifizierung*, 2/94, 1994.

“PRC: Liaowang Article Views Number of Cross-Strait Exchanges,” FBIS-CHI-2002-0117.

“PRC: Official Meets Taiwan Students Group, Comments on Cross-Strait Relations,” FBIS-CHI-2002-0402.

“PRC: Wang Zaixi, Tang Shubei Meet With Taiwan Students in Shenzhen,” FBIS-CHI-2002-0327; Ta Kung Pao (Internet Version-WWW), 2002. 3. 27.

Ralph N. Clough, *Cooperation or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Schubarth, W. *Historisches Bewusstsein und historische Bildung in der DDR zwischen Anspruch und Realitaet*, in Hennig, W. (Hrsg.) *Jugend in der DDR*, Weinheim, 1991.

Steiner, I. *Strukturwandel der Jugendphase in Ostdeutschland in Buechner*, P (Hrsg.) *Jugend in der DDR*, Weinheim, 1991.

Sueddeutsche Zeitung, 1992. 7. 2.

Tageszeitung, 1992. 6. 25.

Zacharias, I. *Berufsbegleitende Studiummoeglichkeiten fuer AgAG-Mitarbeiter/innen in Nachqualifizierung AgAG*, 1994. 2.

『兩岸人民關係條例暨相關許可變法』, 修訂七版, 行政院大陸委員會編印, 中華民國 91年 7月, 2002. 7.

中新網, 2002. 6. 14.

聯合報, 2000. 12. 8.

人民日報, 2002. 8. 23.

人民日報, 2002. 9. 9 ; 2002. 9. 22.

中新網, 2001. 10. 29.

人民日報, 2002, 9. 22.

中新網, 2001. 7. 31.

[부 록 1]

--	--	--	--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 9.

한국청소년개발원

주 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연구진 : 길은배(2188-8843), 이종원(2188-8812)

11.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관원, 상점 점원 등
12. 생산·기능직: 공장 노동자, 건설 작업자, 경비원 등

[문 6] 아버님의 최종학력은 ?

1. 국민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2. 중학교 졸업(또는 중퇴)
3.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4. 전문대학(2년제) 졸업(또는 중퇴)
5.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6. 대학원 재학 이상

[문 7]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교류협력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8]~[문 16])

[문 8]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전혀 관심이 없다
2. 관심이 없다
3. 관심이 있다
4. 매우 관심이 있다

[문 9]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

1.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2.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3.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4.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10]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전쟁을 통해
2.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3. 북한 내부의 체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으로
4. 남북한 당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점진적인 방식으로

[문 11] 만약 통일이 실현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20년 이상 이후에

[문 12]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문 13] 사회의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매 우 불 만 이 다	불 만 이 다	만 족 한 다	매 우 만 족 한 다
1)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	1	2	3	4
2)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	1	2	3	4
3)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	1	2	3	4
4)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	1	2	3	4

[문 14] 앞으로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 2. 축소되어야 한다 |
|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4. 확대되어야 한다 |
| 5.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 |

[문 15] 사회의 여러 부문 중 특히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 2. 축소되어야 한다 |
|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4. 확대되어야 한다 |
| 5.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 |

[문 16]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낮은 편이다 | 2. 낮은 편이다 |
| 3. 높은 편이다 | 4. 매우 높은 편이다 |

다음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문 17]~[문 29])

[문 17]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	1	2	3	4
2)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	1	2	3	4
3)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1	2	3	4
4)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	1	2	3	4
5)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	1	2	3	4

[문 18]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다음 각 나라의 사람들과 아래에 예시된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1) 상대방이 북한사람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2)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3)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2	3	4

2) 상대방이 미국인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2)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3)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2	3	4

3) 상대방이 일본인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2)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3)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2	3	4

4) 상대방이 중국인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2)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3)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2	3	4

5) 상대방이 러시아인일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2)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3)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2	3	4

[문 19]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할 경우, 남북한 주민간의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현재 남한 내부의 지역갈등과 비교할 때

1. 지역갈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
2.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
3. 지역갈등과 유사한 수준
4.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
5. 지역갈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

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할 때

1.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
2. 독일보다 낮은 수준
3. 독일과 유사한 수준
4. 독일보다 높은 수준
5.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

[문 20]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은 남북한 부모세대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2.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3.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4.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5.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문 21] 남북한 주민들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생활·문화상의 차이가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고방식상의 차이	1	2	3	4
2) 생활관습상의 차이	1	2	3	4
3)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	1	2	3	4
4)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	1	2	3	4
5)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	1	2	3	4
6) 종교·신앙관의 차이	1	2	3	4
7)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	1	2	3	4

[문 22] 남북한 주민들간에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중 어느 쪽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2.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3.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문 23]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우리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훨씬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
1) 경제적 성장과 발전	1	2	3	4
2) 국민들의 생활수준	1	2	3	4
3) 정치체제의 민주화	1	2	3	4
4) 국민들의 인권·시민권	1	2	3	4
5) 문화·예술의 발전수준	1	2	3	4

[문 24]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가 가능할 경우, 변화된 사회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정신적·심리적인 혼란을 겪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1. 남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2. 남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3. 남북한 주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4.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5. 북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문 25]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인 혼란은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2.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3.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4.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5.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문 26] 남북한의 국가·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매우 긍정적인 영향
1) 미 국	1	2	3	4
2) 일 본	1	2	3	4
3) 중 국	1	2	3	4
4) 러시아	1	2	3	4

[문 27] 남북한 당국간에 통일 이후의 국가·사회체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 1) 통합된 국가의 국기는 ?
 1.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
 2.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

- 2) 통합된 국가의 국호(국가의 명칭)는 ?
 1.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2.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

- 3) 통합된 국가의 경제체제는 ?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
 2.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3.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4) 통합된 국가의 정치체제는 ?

1.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2.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
3.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문 28]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가 실현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현재보다 훨씬 약화될 것이다
2.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다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4.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다
5. 현재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

[문 29]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실현될 경우,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 필요하지 않	히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않	필요 하다	매 우 필요하다
1)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	1		2	3	4
2) 북한교사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1		2	3	4
3) 남한교사들을 북한지역 학교에 배치하여 북한학생 교육	1		2	3	4
4) 남북한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	1		2	3	4
5) 남북한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는 학교의 설립·운영	1		2	3	4
6) 남북한의 유사 청소년단체들을 통합하여 운영	1		2	3	4
7) 북한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1		2	3	4
8) 남한 청소년지도자들을 북한지역에 배치하여 북한 청소년 지도	1		2	3	4
9)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	1		2	3	4
10)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		2	3	4
11)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	1		2	3	4
12)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1		2	3	4
13) 남북한 청소년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 설치	1		2	3	4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2]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

(단위: 명, %)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문 7])						
[문 1] 당신의 성별은 ?						
1. 남자	609	54.1	100.0	0.0	57.7	50.5
2. 여자	516	45.9	0.0	100.0	42.3	49.5
합 계	1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 (생략)						
[문 3] 재학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인문계 고등학교	411	36.6	41.1	31.3	71.6	0.0
2. 실업계 고등학교	163	14.5	13.3	16.0	28.4	0.0
3. 대학교: 인문·사회·예술계학과	373	33.2	28.2	39.1	0.0	67.9
4. 대학교: 자연·이공계열학과	176	15.7	17.4	13.6	0.0	32.1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4] 현재 몇 학년입니까 ? (생략)						
[문 5] 아버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일치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항목을 골라주십시오)						
1. 아버님이 안계시다	52	4.6	4.3	5.1	4.0	5.3
2. 무직 또는 정년퇴직자	41	3.7	4.1	3.1	1.8	5.6
3. 농·어업 종사자	25	2.2	2.1	2.3	1.1	3.5
4. 경영·관리직: 회사·관공서·단체의 임원·관리직, 장성급 군인 등	156	13.9	15.2	12.5	12.1	15.8
5. 사무·행정직: 회사·관공서·단체의 중간·일반직급·영관급·위관급 군인 등	193	17.2	15.9	18.9	19.0	15.5
6. 전문직: 대학교수, 법률가,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예술가 등	61	5.5	5.5	5.4	4.0	6.9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6. 전문직: 대학교수, 법률가, 의사, 연구원, 회계사, 성직자, 예술가 등	61	5.5	5.5	5.4	4.0	6.9
	7. 교육자: 교사 등 교육관련직	29	2.6	2.6	2.5	1.2	4.0
	8. 기술직: 엔지니어, 건축가, 프로 그래머, 항해사, 조종사 등	129	11.5	10.7	12.5	14.6	8.4
	9. 자영업 슈퍼마켓, 전자대리점, 정비 소, 주유소, 식당, 소규모 공장 경영 등	265	23.7	24.3	23.0	23.2	24.2
	10. 서비스직: 요리사, 이·미용사, 웨이터, 운전기사, 정비사 등	63	5.6	5.6	5.6	6.7	4.5
	11.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등	46	4.1	4.5	3.7	5.8	2.4
	12. 생산·기능직: 공장 노동자, 건설 작업자, 경비원 등	59	5.3	5.1	5.4	6.5	4.0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6] 아버님의 최종학력은 ?							
	1. 국민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69	6.2	6.4	5.8	6.3	6.0
	2. 중학교 졸업(또는 중퇴)	72	6.4	7.3	5.4	7.5	5.3
	3.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444	39.6	37.3	42.4	41.1	38.2
	4. 전문대학(2년제) 졸업(또는 중퇴)	35	3.1	3.0	3.3	2.3	4.0
	5. 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405	36.2	37.1	35.0	34.9	37.5
	6. 대학원 재학 이상	95	8.5	8.9	8.0	7.9	9.1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7]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수 준은 ?							
	1. 매우 못 사는 편	17	1.5	1.8	1.2	2.1	0.9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204	18.1	19.4	16.7	18.8	17.4
	3. 중간 수준	695	61.8	58.8	65.3	63.4	60.1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203	18.0	19.5	16.3	15.2	21.1
	5. 매우 잘 사는 편	6	0.5	0.5	0.6	0.5	0.5
	합 계	1125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교류·협력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 8]~[문 16])							
[문 8]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35	3.1	2.8	3.5	4.5	1.6
	2. 관심이 없다	262	23.3	20.4	26.7	26.5	20.0
	3. 관심이 있다	712	63.3	63.2	63.4	60.6	66.1
	4. 매우 관심이 있다	116	10.3	13.6	6.4	8.4	12.3
	합 계	1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9]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1. 절대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	18	1.6	1.2	2.1	2.8	0.4
	2.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195	17.4	12.7	23.0	22.9	11.7
	3.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621	55.4	55.3	55.6	51.0	59.9
	4.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287	25.6	30.9	19.3	23.3	28.1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10]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북한의 의도적인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전쟁을 통해	33	2.9	2.3	3.7	4.9	0.9
	2.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24	2.1	1.8	2.5	3.5	0.7
	3. 북한 내부의 체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으로	349	31.2	33.1	28.9	29.9	32.5
	4. 남북한 당국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점진적인 방식으로	713	63.7	62.8	64.8	61.6	65.9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11] 만약 통일이 실현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5년 이내	49	4.4	4.6	4.1	6.5	2.2
	2. 10년 이내	303	27.0	25.7	28.5	29.3	24.5
	3. 20년 이내	428	38.1	41.3	34.4	33.5	42.9
	4. 20년 이상 이후에	343	30.5	28.5	33.0	30.7	30.4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문 12]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71	6.3	4.8	8.1	7.5	5.1
	2. 불만이다	478	42.5	40.6	44.8	39.5	45.6
	3. 만족한다	550	48.9	50.9	46.5	49.7	48.1
	4. 매우 만족한다	26	2.3	3.8	0.6	3.3	1.3
	합 계	1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13] 사회의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경제적 교류·협력 수준							
	1. 매우 불만이다	97	8.7	8.6	8.8	9.7	7.7
	2. 불만이다	534	48.0	42.5	54.5	48.4	47.5
	3. 만족한다	465	41.8	46.1	36.7	40.5	43.1
	4. 매우 만족한다	17	1.5	2.8	0.0	1.4	1.6
	합 계	1113	100.0	100.0	100.0	100.0	100.0
2) 정치적 교류·협력 수준							
	1. 매우 불만이다	154	13.8	13.9	13.8	12.3	15.4
	2. 불만이다	674	60.6	58.6	62.9	56.4	64.8
	3. 만족한다	280	25.2	26.8	23.2	30.9	19.2
	4. 매우 만족한다	5	0.4	0.7	0.2	0.4	0.5
	합 계	1113	100.0	100.0	100.0	100.0	100.0
3) 문화적 교류·협력 수준							
	1. 매우 불만이다	67	6.0	6.4	5.5	7.2	4.8
	2. 불만이다	355	31.9	30.1	34.0	30.3	33.5
	3. 만족한다	609	54.7	55.4	53.8	52.6	56.8
	4. 매우 만족한다	83	7.5	8.1	6.7	9.9	4.9
	합 계	1114	100.0	100.0	100.0	100.0	100.0
4)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 수준							
	1. 매우 불만이다	300	26.9	30.7	22.4	27.3	26.5
	2. 불만이다	560	50.2	47.1	53.9	46.8	53.7
	3. 만족한다	241	21.6	21.2	22.2	23.9	19.2
	4. 매우 만족한다	14	1.3	1.0	1.6	1.9	0.5
	합 계	1115	100.0	100.0	100.0	100.0	100.0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문 14] 앞으로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14	1.2	1.0	1.6	1.9	0.5	
2. 축소되어야 한다	79	7.0	6.6	7.6	8.9	5.1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89	16.8	14.9	19.0	21.4	12.0	
4. 확대되어야 한다	642	57.1	55.5	58.9	49.0	65.5	
5.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1	17.9	22.0	13.0	18.8	16.9	
합 계	1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15] 사회의 여러 부문 중 특히 청소년부문의 교류·협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21	1.9	1.8	1.9	2.6	1.1	
2. 축소되어야 한다	39	3.5	3.3	3.7	5.1	1.8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17	10.4	10.7	10.1	13.5	7.3	
4. 확대되어야 한다	649	57.8	55.6	60.5	52.1	63.8	
5.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96	26.4	28.6	23.7	26.7	26.0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16] 최근의 주변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한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낮은 편이다	224	19.9	22.0	17.5	17.1	22.9	
2. 낮은 편이다	715	63.7	65.0	62.1	62.1	65.3	
3. 높은 편이다	168	15.0	11.8	18.7	18.4	11.4	
4. 매우 높은 편이다	16	1.4	1.1	1.8	2.4	0.4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다음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문 17]~[문 29])							
[문 17]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1) 북한지역을 여행하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7	2.4	2.3	2.5	3.1	1.6
	2. 그렇지 않다	102	9.1	8.2	10.1	10.5	7.7
	3. 그렇다	611	54.5	53.9	55.1	51.7	57.4
	4. 매우 그렇다	382	34.0	35.5	32.3	34.7	33.3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북한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4	20.9	22.1	19.5	25.9	15.7
	2. 그렇지 않다	596	53.2	51.7	55.0	54.5	51.8
	3. 그렇다	245	21.9	21.9	21.8	16.6	27.4
	4. 매우 그렇다	45	4.0	4.3	3.7	3.0	5.1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북한지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18	19.6	17.0	22.5	25.6	13.2
	2. 그렇지 않다	466	41.8	40.3	43.5	42.0	41.5
	3. 그렇다	374	33.5	36.7	29.8	28.0	39.3
	4. 매우 그렇다	57	5.1	6.0	4.1	4.4	5.9
	합 계	1115	100.0	100.0	100.0	100.0	100.0
4) 짧은 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살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2	13.6	12.8	14.5	17.5	9.5
	2. 그렇지 않다	276	24.7	21.1	29.0	26.6	22.7
	3. 그렇다	593	53.0	56.9	48.3	48.3	58.0
	4. 매우 그렇다	98	8.8	9.2	8.2	7.7	9.9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5) 북한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3	34.2	31.1	37.9	40.0	28.1
	2. 그렇지 않다	515	46.0	47.0	44.7	44.8	47.3
	3. 그렇다	185	16.5	18.6	14.1	12.9	20.3
	4. 매우 그렇다	37	3.3	3.3	3.3	2.3	4.4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문 18]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다음 각 나라의 사람들과 아래에 예시된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1) 상대방이 북한사람일 경우						
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1.2	0.8	1.6	0.7
	2. 그렇지 않다	59	5.3	4.8	5.8	4.2
	3. 그렇다	719	64.0	63.2	65.0	67.8
	4. 매우 그렇다	332	29.6	31.2	27.6	27.3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나.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	1.2	0.8	1.8	0.4
	2. 그렇지 않다	99	8.8	6.7	11.3	9.3
	3. 그렇다	684	60.9	60.6	61.3	64.2
	4. 매우 그렇다	326	29.0	31.9	25.7	26.2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다.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9	12.4	6.1	19.8	9.6
	2. 그렇지 않다	367	32.7	23.2	44.0	34.4
	3. 그렇다	451	40.2	50.2	28.2	40.7
	4. 매우 그렇다	166	14.8	20.5	8.0	15.3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2) 상대방이 미국인일 경우						
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1	6.3	8.2	4.1	4.0
	2. 그렇지 않다	74	6.6	7.2	5.8	5.3
	3. 그렇다	800	71.3	69.0	74.0	75.3
	4. 매우 그렇다	177	15.8	15.5	16.1	15.5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나.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5	5.8	7.9	3.3	3.6
	2. 그렇지 않다	105	9.3	9.9	8.7	7.6
	3. 그렇다	788	70.1	67.4	73.3	76.4
	4. 매우 그렇다	166	14.8	14.8	14.7	12.3
	합 계	1124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다.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3	25.2	26.0	24.3	27.1	23.2
	2. 그렇지 않다	449	40.0	37.3	43.1	37.1	43.0
	3. 그렇다	326	29.0	29.1	28.9	28.5	29.6
	4. 매우 그렇다	65	5.8	7.6	3.7	7.3	4.2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3) 상대방이 일본인일 경우							
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2	7.3	8.6	5.8	10.3	4.2
	2. 그렇지 않다	103	9.2	10.0	8.1	10.8	7.4
	3. 그렇다	764	68.0	65.0	71.5	61.3	75.0
	4. 매우 그렇다	175	15.6	16.4	14.5	17.6	13.4
	합 계	1124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9	7.0	8.4	5.4	9.6	4.4
	2. 그렇지 않다	136	12.1	11.2	13.2	13.8	10.3
	3. 그렇다	738	65.7	64.6	67.0	58.0	73.7
	4. 매우 그렇다	170	15.1	15.8	14.4	18.5	11.6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9	23.1	21.9	24.5	24.5	21.6
	2. 그렇지 않다	407	36.2	30.9	42.5	29.9	42.8
	3. 그렇다	379	33.7	37.3	29.5	36.0	31.4
	4. 매우 그렇다	78	6.9	9.9	3.5	9.6	4.2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4) 상대방이 중국인일 경우							
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8	3.4	4.6	1.9	5.1	1.6
	2. 그렇지 않다	92	8.2	9.2	7.0	11.6	4.7
	3. 그렇다	836	74.5	71.7	77.8	68.7	80.6
	4. 매우 그렇다	156	13.9	14.5	13.2	14.7	13.1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나.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	3.9	4.8	2.9	5.8	2.0
	2. 그렇지 않다	143	12.7	13.3	12.1	14.4	11.1
	3. 그렇다	795	70.9	68.3	73.9	66.0	75.9
	4. 매우 그렇다	140	12.5	13.7	11.1	13.8	11.1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33	20.7	19.1	22.7	22.4	19.1
	2. 그렇지 않다	493	43.9	36.7	52.4	43.0	44.8
	3. 그렇다	346	30.8	37.3	23.1	29.2	32.5
	4. 매우 그렇다	51	4.5	6.9	1.7	5.4	3.6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5) 상대방이 러시아인일 경우							
가. 한 동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2	3.7	4.4	2.9	6.1	1.3
	2. 그렇지 않다	109	9.7	10.9	8.3	12.4	6.9
	3. 그렇다	816	72.7	70.2	75.5	66.8	78.8
	4. 매우 그렇다	156	13.9	14.5	13.2	14.7	13.1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가까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3	4.7	5.9	3.3	7.2	2.2
	2. 그렇지 않다	150	13.4	13.0	13.8	15.2	11.4
	3. 그렇다	781	69.5	67.6	71.8	64.0	75.3
	4. 매우 그렇다	139	12.4	13.5	11.1	13.6	11.1
	합 계	1123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이성의 경우) 결혼상대로 맞이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67	23.8	22.7	25.0	25.7	21.8
	2. 그렇지 않다	516	45.9	39.5	53.5	43.3	48.6
	3. 그렇다	299	26.6	31.7	20.5	26.9	26.3
	4. 매우 그렇다	42	3.7	6.1	1.0	4.2	3.3
	합 계	1124	100.0	100.0	100.0	100.0	100.0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문 19]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할 경우, 남북한 주민간의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현재 남한 내부의 지역갈등과 비교할 때							
	1. 지역갈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	34	3.0	3.0	3.1	4.4	1.6
	2. 지역갈등보다 낮은 수준	181	16.1	19.1	12.6	20.8	11.3
	3. 지역갈등과 유사한 수준	300	26.7	26.6	26.9	30.6	22.7
	4. 지역갈등보다 높은 수준	435	38.8	37.1	40.7	34.7	43.0
	5. 지역갈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	172	15.3	14.2	16.7	9.5	21.4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할 때							
	1.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	43	3.8	4.5	3.1	5.3	2.4
	2. 독일보다 낮은 수준	264	23.6	25.1	21.8	29.9	17.1
	3. 독일과 유사한 수준	319	28.5	27.9	29.2	31.7	25.3
	4. 독일보다 높은 수준	395	35.3	34.9	35.9	28.2	42.7
	5.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	97	8.7	7.6	9.9	4.9	12.5
	합 계	1118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0]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은 남북한 부모세대간의 갈등·대립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122	10.9	11.5	10.1	13.3	8.3
	2.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419	37.3	40.0	34.2	32.4	42.5
	3.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181	16.1	16.1	16.1	16.3	16.0
	4.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290	25.8	23.6	28.5	26.1	25.6
	5.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110	9.8	8.7	11.1	11.9	7.6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1] 남북한 주민들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생활·문화상의 차이가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1) 사고방식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20	1.8	2.1	1.4	2.5	1.1
	2. 그렇지 않다	78	7.0	8.7	4.9	8.9	4.9
	3. 그렇다	685	61.1	62.6	59.2	58.1	64.1
	4. 매우 그렇다	339	30.2	26.5	34.6	30.5	29.9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조 사 문 항		전 체		성 별		교 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2) 생활관습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21	1.9	2.0	1.8	2.6	1.1
	2. 그렇지 않다	165	14.7	17.5	11.5	15.4	14.0
	3. 그렇다	690	61.6	62.3	60.7	58.7	64.5
	4. 매우 그렇다	245	21.9	18.3	26.1	23.3	20.4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3) 교육제도·교육내용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19	1.7	2.0	1.4	3.2	0.2
	2. 그렇지 않다	133	11.9	12.1	11.7	12.6	11.1
	3. 그렇다	612	54.7	55.5	53.7	51.2	58.3
	4. 매우 그렇다	355	31.7	30.4	33.3	33.0	30.4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4) 경제적 생활수준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25	2.2	2.5	1.9	3.3	1.1
	2. 그렇지 않다	111	9.9	10.4	9.3	13.2	6.5
	3. 그렇다	540	48.2	45.1	51.8	49.1	47.2
	4. 매우 그렇다	445	39.7	42.0	37.0	34.4	45.2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5)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19	1.7	2.0	1.4	2.4	0.9
	2. 그렇지 않다	100	8.9	10.6	7.0	10.0	7.8
	3. 그렇다	478	42.6	40.4	45.2	45.1	40.1
	4. 매우 그렇다	524	46.7	47.0	46.4	42.5	51.2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6) 종교·신앙관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75	6.7	8.1	5.0	7.5	5.8
	2. 그렇지 않다	443	39.5	39.1	40.0	36.8	42.4
	3. 그렇다	455	40.6	38.0	43.7	41.2	40.0
	4. 매우 그렇다	148	13.2	14.9	11.3	14.5	11.8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7) 문화·예술부문상의 차이							
	1. 전혀 그렇지 않다	85	7.6	8.9	6.0	9.3	5.8
	2. 그렇지 않다	421	37.5	40.2	34.4	35.9	39.2
	3. 그렇다	491	43.8	39.7	48.5	40.6	47.0
	4. 매우 그렇다	125	11.1	11.2	11.1	14.2	8.0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문 22] 남북한 주민들간에 예상되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중 어느쪽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230	21.2	27.7	13.7	18.5	23.9
	2.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71	6.5	7.9	5.0	8.9	4.1
	3. 남북한 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786	72.3	64.4	81.4	72.6	72.0
	합 계	1087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3]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우리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 주십시오							
1) 경제적 성장과 발전							
	1. 훨씬 악화될 것이다	58	5.2	5.1	5.3	7.4	2.9
	2. 악화될 것이다	342	30.5	26.4	35.4	31.1	29.9
	3. 향상될 것이다	562	50.2	51.0	49.2	44.5	56.1
	4. 훨씬 향상될 것이다	158	14.1	17.5	10.1	17.0	11.1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국민들의 생활수준							
	1. 훨씬 악화될 것이다	47	4.2	3.8	4.7	5.8	2.5
	2. 악화될 것이다	534	47.8	44.1	52.0	47.0	48.5
	3. 향상될 것이다	479	42.8	45.5	39.8	41.0	44.7
	4. 훨씬 향상될 것이다	58	5.2	6.6	3.5	6.2	4.2
	합 계	1118	100.0	100.0	100.0	100.0	100.0
3) 정치체제의 민주화							
	1. 훨씬 악화될 것이다	45	4.0	3.8	4.3	5.1	2.9
	2. 악화될 것이다	442	39.6	37.1	42.5	41.7	37.3
	3. 향상될 것이다	541	48.4	49.5	47.2	45.4	51.5
	4. 훨씬 향상될 것이다	89	8.0	9.6	6.0	7.7	8.2
	합 계	1117	100.0	100.0	100.0	100.0	100.0
4) 국민들의 인권·시민권							
	1. 훨씬 악화될 것이다	20	1.8	1.5	2.1	2.5	1.1
	2. 악화될 것이다	306	27.3	25.5	29.5	30.0	24.5
	3. 향상될 것이다	672	59.9	60.0	59.9	56.3	63.7
	4. 훨씬 향상될 것이다	123	11.0	13.1	8.5	11.2	10.7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5) 문화·예술의 발전수준							
	1. 훨씬 악화될 것이다	18	1.6	1.5	1.8	2.3	0.9
	2. 악화될 것이다	132	11.8	10.2	13.6	12.3	11.3
	3. 향상될 것이다	618	55.2	57.8	52.1	53.5	56.9
	4. 훨씬 향상될 것이다	352	31.4	30.5	32.5	31.9	30.9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4]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가 가능할 경우, 변화된 사회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정신적·심리적인 혼란을 겪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1. 남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85	7.6	6.8	8.5	10.1	4.9
	2. 남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84	7.5	8.2	6.6	10.3	4.5
	3. 남북한 주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440	39.2	37.4	41.4	42.5	35.8
	4.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378	33.7	34.4	32.8	27.4	40.2
	5. 북한 주민들이 훨씬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135	12.0	13.2	10.7	9.6	14.5
	합 계	1122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5]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느끼게 될 정신적·심리적인 혼란은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세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	90	8.1	9.5	6.4	10.4	5.7
	2. 부모세대보다 낮은 수준	366	32.8	35.6	29.6	28.7	37.1
	3. 부모세대와 유사한 수준	200	17.9	18.6	17.1	19.7	16.1
	4. 부모세대보다 높은 수준	350	31.4	28.1	35.2	30.6	32.2
	5.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	109	9.8	8.2	11.7	10.6	9.0
	합 계	1115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6] 남북한의 국가·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 국							
	1. 매우 부정적인 영향	401	36.1	39.3	32.4	36.5	35.8
	2. 부정적인 영향	517	46.6	42.3	51.7	41.8	51.6
	3. 긍정적인 영향	174	15.7	16.3	14.9	19.6	11.6
	4. 매우 긍정적인 영향	18	1.6	2.2	1.0	2.1	1.1
	합 계	111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2) 일본							
	1. 매우 부정적인 영향	273	24.6	24.4	25.0	27.4	21.8
	2. 부정적인 영향	574	51.8	51.6	52.1	48.1	55.6
	3. 긍정적인 영향	243	21.9	22.0	21.8	21.7	22.2
	4. 매우 긍정적인 영향	18	1.6	2.0	1.2	2.8	0.4
	합 계	1108	100.0	100.0	100.0	100.0	100.0
3) 중국							
	1. 매우 부정적인 영향	171	15.4	17.7	12.7	16.3	14.5
	2. 부정적인 영향	513	46.3	44.6	48.2	40.1	52.7
	3. 긍정적인 영향	399	36.0	34.1	38.2	39.9	31.9
	4. 매우 긍정적인 영향	26	2.3	3.7	0.8	3.7	0.9
	합 계	1109	100.0	100.0	100.0	100.0	100.0
4) 러시아							
	1. 매우 부정적인 영향	124	11.2	12.9	9.3	13.7	8.6
	2. 부정적인 영향	559	50.5	45.9	56.0	44.7	56.6
	3. 긍정적인 영향	395	35.7	37.7	33.3	37.4	34.0
	4. 매우 긍정적인 영향	28	2.5	3.5	1.4	4.3	0.7
	합 계	1106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7] 남북한 당국간에 통일 이후의 국가·사회체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1) 통합된 국가의 국기는 ?							
	1. '태극기'가 되어야 한다	596	53.3	53.1	53.5	58.0	48.4
	2. 북한의 국기('인공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15	1.3	1.7	1.0	0.9	1.8
	3. 새로운 국기를 제정해야 한다	508	45.4	45.3	45.5	41.1	49.8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2) 통합된 국가의 국호(국가의 명칭)는 ?							
	1.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677	60.4	59.7	61.3	67.5	53.1
	2. 북한의 국호('인민공화국')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12	1.1	1.0	1.2	0.7	1.5
	3.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한다	431	38.5	39.3	37.5	31.8	45.5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3) 통합된 국가의 경제체제는 ?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	562	50.3	51.2	49.1	47.0	53.6
	2.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62	5.5	5.3	5.8	8.1	2.9
	3. 시장·계획경제가 혼합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494	44.2	43.5	45.0	44.9	43.5
	합 계	1118	100.0	100.0	100.0	100.0	100.0
4) 통합된 국가의 경제체제는 ?							
	1. 남한의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475	42.4	40.1	45.0	47.7	36.8
	2. 북한의 정치체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	24	2.1	2.6	1.6	2.8	1.5
	3. 새로운 정치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622	55.5	57.3	53.4	49.5	61.7
	합 계	1121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8]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가 실현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현재보다 훨씬 약화될 것이다	27	2.4	1.8	3.1	3.9	0.9
	2.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다	92	8.2	8.3	8.2	10.4	6.0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127	11.3	9.7	13.2	12.1	10.5
	4.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다	564	50.4	47.2	54.1	46.2	54.6
	5. 현재보다 훨씬 향상될 것이다	310	27.7	33.0	21.4	27.4	27.9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 29]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호왕래가 실현될 경우,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남북한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발간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2.1	1.8	2.3	3.0	1.1
	2. 필요하지 않다	89	8.0	7.8	8.2	11.1	4.7
	3. 필요하다	688	61.5	61.4	61.6	59.3	63.7
	4. 매우 필요하다	319	28.5	29.0	28.0	26.6	30.5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2) 북한교사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2.0	0.8	3.3	3.5	0.4
	2. 필요하지 않다	124	11.1	12.7	9.1	13.7	8.4
	3. 필요하다	669	59.8	59.1	60.7	54.5	65.4
	4. 매우 필요하다	303	27.1	27.3	26.8	28.3	25.9
	합 계	1118	100.0	100.0	100.0	100.0	100.0
3) 남한교사들을 북한지역 학교에 배치하여 북한학생 교육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	2.3	1.8	2.9	3.4	1.3
	2. 필요하지 않다	169	15.2	14.6	15.8	14.8	15.5
	3. 필요하다	711	63.8	63.3	64.3	62.3	65.3
	4. 매우 필요하다	209	18.7	20.2	17.0	19.6	17.9
	합 계	1115	100.0	100.0	100.0	100.0	100.0
4) 남북한 학교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실시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2.1	1.2	3.1	3.0	1.1
	2. 필요하지 않다	76	6.8	8.0	5.4	9.3	4.2
	3. 필요하다	634	56.8	57.0	56.6	55.6	58.1
	4. 매우 필요하다	383	34.3	33.9	34.8	32.1	36.6
	합 계	1116	100.0	100.0	100.0	100.0	100.0
5) 남북한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는 학교의 설립·운영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2.1	1.0	3.3	3.2	0.9
	2. 필요하지 않다	96	8.6	9.1	8.0	9.7	7.5
	3. 필요하다	646	58.0	60.0	55.7	57.3	58.7
	4. 매우 필요하다	349	31.3	29.9	33.0	29.7	33.0
	합 계	1114	100.0	100.0	100.0	100.0	100.0
6) 남북한의 유사 청소년단체들을 통합하여 운영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2.0	1.5	2.5	2.5	1.5
	2. 필요하지 않다	123	11.0	11.3	10.7	13.0	8.9
	3. 필요하다	722	64.6	65.7	63.2	64.8	64.4
	4. 매우 필요하다	251	22.5	21.5	23.5	19.7	25.3
7) 북한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1.9	1.3	2.5	3.0	0.7
	2. 필요하지 않다	135	12.1	12.4	11.7	14.6	9.5
	3. 필요하다	702	62.9	62.2	63.7	60.8	65.1
	4. 매우 필요하다	258	23.1	24.0	22.0	21.6	24.7
	합 계	1116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 문항	전체		성별		교급	
	빈도	비율	남자	여자	고	대
8) 남한 청소년지도자들을 북한지역에 배치하여 북한 청소년 지도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	3.0	3.2	2.9	3.2	2.9
2. 필요하지 않다	191	17.1	18.2	15.8	17.4	16.8
3. 필요하다	694	62.2	61.4	63.2	62.6	61.8
4. 매우 필요하다	197	17.7	17.2	18.1	16.9	18.5
합 계	1116	100.0	100.0	100.0	100.0	100.0
9)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문화공간 설립·확충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1.8	1.5	2.1	3.2	0.4
2. 필요하지 않다	79	7.1	7.1	7.0	7.5	6.6
3. 필요하다	635	56.7	57.4	56.0	58.6	54.8
4. 매우 필요하다	385	34.4	34.0	34.8	30.7	38.3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 북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	2.1	1.5	2.7	3.3	0.7
2. 필요하지 않다	86	7.7	7.4	8.0	8.8	6.5
3. 필요하다	660	58.9	58.7	59.2	60.7	57.1
4. 매우 필요하다	351	31.3	32.4	30.1	27.2	35.6
합 계	1120	100.0	100.0	100.0	100.0	100.0
11)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설·운영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	2.0	1.3	2.7	3.0	0.9
2. 필요하지 않다	77	6.9	6.3	7.6	9.6	4.0
3. 필요하다	623	55.7	56.8	54.5	55.6	55.8
4. 매우 필요하다	396	35.4	35.6	35.2	31.8	39.2
합 계	1118	100.0	100.0	100.0	100.0	100.0
12)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5	2.2	1.5	3.1	3.9	0.5
2. 필요하지 않다	67	6.0	7.1	4.7	8.6	3.3
3. 필요하다	643	57.5	57.6	57.3	58.3	56.6
4. 매우 필요하다	384	34.3	33.8	35.0	29.2	39.6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
13) 남북한 청소년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 설치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35	3.1	2.3	4.1	5.1	1.1
2. 필요하지 않다	147	13.1	12.2	14.2	14.9	11.3
3. 필요하다	635	56.7	57.7	55.6	57.3	56.2
4. 매우 필요하다	302	27.0	27.8	26.1	22.7	31.5
합 계	1119	100.0	100.0	100.0	100.0	100.0